

발 간 등 록 번 호

11-1300000-000189-01

병무청 연구용역보고서

예비군 소집업무 효율적 수행방안 연구



병무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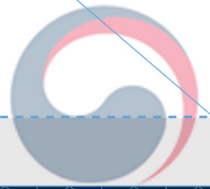
제 출 문

병무청장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예비군 소집업무 효율적 수행방안 연구」의 최종
연구물로 제출합니다.

2022. 10.

- 연 구 기 관: (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
- 책임연구원: 박 무 춘(국민대학교 교수)
- 연 구 원 : 노 희 준((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김 운 용((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 이사장)
 곽 정 근((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 소장)



요약



I. 연구 개요

■ 배경 및 목적

- 「국방개혁 2.0」의 예비전력 정예화와 연계, 동원병력 정예화 요구
 - 감염병 등 사회환경 변화 적기 대응, 완벽한 병력동원 태세 확립 요구
 - 정예자원 확보 및 예비전력 강화를 위한 예비군 제도개선 필요
- 동원훈련 간 업무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체계 재설계 필요
 - 자원관리 이원화 및 인력 축소에 따른 예비군자원관리 체계화
 - 예비군훈련 방식 및 시간의 차등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해소 필요
- ☞ 대·내외 환경 반영, 예비군 소집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연구범위 및 추진방향

- 예비군제도 운영실태 조사·분석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병무청 - 군 예비군 소집업무 운영실태 조사 및 분석
 - 예비군 소집업무 분석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마련
 - 개선방안에 대한 장애 극복, 수행기관 통합 등 효율적 운용방안 제시
- 동원예비군 훈련실태 조사·분석 및 형평성 제고 방안 제시
 - 예비군훈련 간 방법 및 시간 차등에 대한 형평성 등 인식도 조사
 - 인식도 조사 결과분석, 예비군훈련 간 형평성 제고 방안 제시

■ 연구의 특징 및 기대효과

- 연구의 특징
 - 연구는 개념연구로서의 특성을 포함
 - 예비군 인식도 정량적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 도출
 - 예비군 소집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비교분석 및 정책제언 제시
- 기대효과
 - 병무청 예비군 소집업무 및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
 - 미래 인구절벽 등 가용자원 부족에 대비하는 예비군 인식 변화 반영
 - 군(軍) 예비전력 정책 판단 시 주요 정책적 지침 적용

II. 예비전력 정예화 환경 분석평가 및 중요성

■ 예비전력 정예화 환경 분석평가

- 「국방개혁 2.0」의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과 연계
 - 군 구조개혁과 병행, 동원전력 강화하기 위한 정책발전 요구
 - 예비군 편성·관리·훈련 등 개선으로 상비전력에 준하는 예비전력 육성
- 총체전력(total force)의 일부로서 예비전력의 기능 및 역할 강화
 - 예비전력의 정책 및 제도의 개선, 예비군 관리·훈련체계 발전

■ 예비전력 건설을 위한 주요 영향 요인

- 군사력 건설 기본방향과 예비전력
 - 상비병력 감축으로 예비전력의 비중 및 역할 확대
 - 상비전력과 예비전력 간의 전력배합 중요성 증대
-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방향
 - 예비군의 적정규모 편성 및 운용, 효율적인 동원체계 구축
 - 과학화 예비군 훈련체계 발전 추진

■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필요성 및 중요성

- AI기반의 동원자원 관리체계 발전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된 동원자원 관리체계 구축
 - 실시간 동원과정 모니터링,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병력동원 관리체계 발전
 - 현역복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동원지정제도 발전
 - 예비군 자원관리 및 훈련관리의 일원화 검토

■ 미래 가용 병역자원의 감소와 불확실성 증대

- 병역자원 감소로 상비병력 축소 불가피
 - 2030년 중반 이후 급격한 인구감소로 적정 상비병력 재설정 필요
- 상비병력 감소는 예비군 가용자원 감소로 연계
 - 2040년 이후 동원예비군(4년차 이내) 가용자원 부족 예상

Ⅲ. 병무청과 군의 예비군 소집업무 운영실태 분석

■ 예비군 자원관리 분석

○ 자원관리 체계 분석

- 자원관리 절차: 자원의 발취⇒편성명부 작성⇒편성 및 관리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병무청	· 전역권부대의 병역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예비군 편성 ·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로 신상변동 정리 등 예비군 자원관리	신규 편성
전역권부대	· 복무 마친 병역 관련자료 병무청에 송부	국방인사정보체계
예비군부대	· 예비군 편성카드에 의한 보직부여 및 관리	국방동원정보체계

- 병무청과 군 간의 정보체계를 활용 업무처리 중요

* 체계의 연계성, 정확성, 신뢰성, 효율성 제고 대책 강구 필요

○ 동원예비군 관리

- 동원지정 예비군 관리

- 소집부대 동원소요+수입군부대 지역배정서에 의해 전산으로 동원지정
- 동원지정 관리: 병무청은 소집통지, 군 소집부대는 지휘서신 발송
- 군은 완편명부 작성 동원준비, 병무청은 신상이동 예비군 대체 지정

- 동원 미지정 예비군 관리

- 병무청: 우발사태 및 지속단계 동원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별 관리
- 예비군부대: 동원미지정 예비군소대 편성, 자원관리

■ 동원예비군 훈련소집통지 절차 분석

○ 소집통지 대상 분석

- 동원훈련: 동원지정 예비군(병 1~4년차, 간부 1~6년차)
- 동미참훈련: 동원미지정 또는 동원훈련 불참 예비군
- ☞ 동일한 동원예비군 신분임에도 훈련 방법 및 시간 상이
 - * 동원훈련(2박 3일, 입영), 동미참훈련(4일, 출퇴근)

○ 소집통지 방법 분석

- 병무청과 군이 각각 소집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달
- 인터넷, 모바일앱, 우편 등을 활용 예비군에게 통지
- ☞ 비대면 소집통지 수단 제한 시 직접 전달 불가피⇒행정소요 증가
- ☞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소집통지 불응 시 처벌기준 상이



○ 훈련체계 및 소집통지 방법 분석

- 예비군 연간 법정 훈련기간 상이: 「병역법」(30일), 「예비군법」(20일)
-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훈련방법 및 편의제도 차이
 - * 동미참훈련: 거주지 예비군훈련장, 일정 자율선택, 휴일/전국훈련 등
- 훈련 소집통지 기관 상이: 동원훈련(병무청), 동미참훈련(수입군부대)
- 훈련소집 불응 시 행정처리 상이
 - * 동미참훈련 3차 무단불참부터 고발(동원훈련은 무단불참 시 고발)
 - * 예비군 범법자 최소화를 위해 기회 확대, 행정 및 예산 소요 증가
- ☞ 예비군 동일신분을 고려한 훈련방법과 소집통지 기관 일원화 검토
 - *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형평성 유지방안
 - * 소집통지 기관을 통합, 단일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안

■ 예비군 보류자 편성 및 관리 분석

○ 예비군 보류자 편성 현황

- 예비군법, 국방부 훈령에 근거하여 예비군훈련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예비군 보류자 과다로 병력동원(훈련)에 제한: 전 예비군의 25% 규모

총자원	보류자(계)	법규보류	방침보류		
			소계	학생예비군	일반예비군
275만여 명	68만여 명(25%)	6만여 명	62만여 명	51만여 명(19%)	11만여 명

* 학생예비군이 대부분으로 정예자원 활용 미흡(보류자의 82%)

○ 예비군 보류자 훈련 면제

- 학생예비군(예): 예비군 연차 무관, 연 8시간 훈련
- 일반예비군(1~4년차): 동미참훈련(4일, 32H)
- ☞ 학생예비군은 일반예비군에 비해 1/4수준 훈련으로 형평성 문제 제기

○ 예비군 보류제도 개선 추진 경과

인권위 제소('06.6)	헌재 위헌청구('13.12)	국민의식 조사('14.12)	국회 토론('15.3)
평등권 침해 ⇒시정 권고('08.11)	기 각 (기본권 침해 미해당)	보류해제찬성(74%)	보류 해제, 훈련 총량제 도입검토

* 형평성 문제 등 개선 요구 지속, 정치적 부담으로 제도개선 소극적

IV. 예비군 소집업무 분야별 개선방안 도출

■ 예비군 편성 및 관리 개선

- 현역복무 경력자료를 예비군 편성 항목에 추가방안 검토
 - 현역 경력 추가(예): 체력, 자격등급, 주특기 수준, 특급전사 등
 - 군의 소요 항목 요구, 병무청의 전산체계 반영 여부 검토 후 시행
- 예비군 조직편성 보완
 - 현역 복무부대 단위 예비군 편성 및 관리방안
 - 지역·직장예비군 부대 + 현역복무 부대 편성(추가)
 - ☞ 현역복무 간 형성된 전투기술 팀워크 및 전우애 활용 여건 조성
- 예비군 신상변동 사항 실시간 업무처리 개선
 - 거주지 이동(예): 행안부 자료발취, 병무청 정리, 국동체 전송(순차처리)
 - ☞ 신상변동 자료 동시 관련 기관 전송으로 실시간 업무처리방안 강구

■ 예비군 보류제도 개선

- 예비군 보류제도는 헌법정신(공정 가치)에 부적합하여 폐지 검토
 -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제정 시('70년도) 변화: 입학률 차이(15%⇒80%)
 - 일반예비군'생업권'과 학생예비군'학습권'간 형평성 문제 해소 필요
- 보류제도 단계별 폐지 추진(안)
 - 현 재학 중인 학생예비군 보류제도는 그대로 적용
 - 신규 입학하는 학생부터 단계별 보류혜택 축소 추진('24 입학부터 “예”)

구 분	'24년 대학 입학	'25년 대학 입학	'26년 대학 입학
훈 련 시 간	8H/년 ⇒ 16H/년 (8H 증가)	16H/년 ⇒ 24H/년 ('24년 대비 8H 증가)	24H/년 ⇒ 32H/년 (일반예비군 동일)

* 매년 8시간 증가, 현 재학 중인 예비군은 현행제도 적용

☞ 보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국방부·병무청 공동 노력 요구

* 병력동원 지원 여건 개선, 예비군 훈련소집 대상의 형평성 유지 보장

■ 병무청과 국방부 간 자료 연계 체계

- 국방 동원·인사 정보체계 개발사업 이후 업무처리 개선
 - 병역자료 송·수신을 통한 행정 소요 감소
 - 부대 코드체계 표준화 및 연동 항목의 지속 확대 등 업무환경 개선
- 병무청과 국방부 체계 간 전산망 실시간 연동 한계
 - * 3개 망(국가정보통신망, 국방망, 인터넷망)을 활용한 정보자료 송수신
 - ☞ 정보체계 간 상호 실시간 연동체계 구축 검토
 - 순차적 정보처리⇒실시간 동시 처리(연동체계)
 - 정보처리 속도 향상방안 강구⇒비문과 평문을 분리하여 송수신

■ 동원예비군 훈련방법 개선

-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차이

구 분	동원훈련(2박 3일, 입영)	동미참훈련(4일, 출퇴근)
훈련대상	동원지정 예비군	동원미지정, 동원훈련 불참 예비군
훈련장소	소집부대, 동원훈련장	거주지 예비군훈련장(훈련대)
통지기관	지방병무청장(병무청)	수입군부대장(군부대)
편의제도	특이사항 없음	휴일/전국단위 훈련, 자율선택
벌칙규정	무단불참 시 바로 고발	3차 무단불참 시부터 고발

* 동미참훈련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정 적용, 예비군 편의제도 확대 시행

- 각 군별 동미참훈련 시행 방법 상이, 행정 소요 지속 발생
 - 육·해군 간부, 공군은 입영훈련(2박 3일)으로 시행(2차까지)
 - 동원훈련 대상자와 중복으로 업무관리 제한요소 발생
 - ☞ 예비군 동일신분(동원예비군)을 고려한 훈련방법 개선 검토
 - 동미참훈련도 동원훈련과 동일한 2박 3일 입영훈련 시행
 - 훈련장소는 지역별 표준동원훈련장, 병과 또는 수입군부대별 훈련
- ※ 예비군 신분별 훈련과정의 형평성 유지 가능

■ 훈련소집 통지기관 일원화

- 훈련소집통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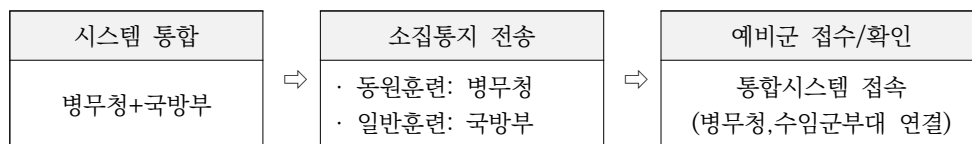
구 분	동원훈련	재입영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책 임	지방병무청	지방병무청	수입군부대
시 기	3~11월	5~11월	7~11월

- 훈련소집통지를 병무청으로 일원화 검토
 - 동원예비군 훈련(동원 및 동미참) 통지를 병무청으로 통합
 - 군(軍)은 지역예비군 훈련소집 통지 전담
 - 병무청으로 소집통지 통합시 제한사항
 - 동미참훈련 소집통지 증가: 연 50만여 명(수 회 통지), 불참자 고발 등
 - 동미참훈련 편의제도 미유지에 대한 예비군의 불편 민원 예상
 - 육군(수입군부대)의 동미참훈련 계획수립 제한사항 발생
 - 「병역법」, 국방부 및 병무청 관련 규정 개정
 - ☞ 소집통지 일원화 추진 시행방안(시험적용 후 시행 방법 발전)
 - 현 동미참훈련의 입영훈련부대 대상 시험적용(병무청 소집통지)
 - 국방부 및 각 군과 협업을 통해 법령개정 검토
- ※ 안정적 제도 시행을 위한 기관별 긴밀한 협업 요구

■ 소집통지 시스템 통합방안

- 소집통지 시스템 운용: 인터넷, 모바일앱 등 활용
 - 병무청과 국방부 각각 통지시스템 운용
 - 시스템 구조 및 운용 방법 유사하게 시행
 - 예비군의 시스템 구분에 대한 인식 부족
 - 훈련유형별 해당 시스템 접속, 훈련정보 확인
 - 접속 착오 시 불편 등으로 민원 발생
- ※ 수요자(예비군) 중심의 시스템 통합 필요성 증대

☞ 예비군 소집통지 시스템 통합방안



- 시스템 통합을 단계별 추진
 - * 현 2개 시스템 통합 운영 ⇒ 단일시스템 개발 운영(관리유지비 절감)
 - * 시스템 주메뉴에 훈련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접속방법 개선
 - * 불편민원 제기 시 해당기관 자동 전송토록 조치(챗봇상담시스템 등)
- ※ 예비군 소집통지 접속 및 확인 불편 감소, 시스템 운용소요 절감 효과

■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예하부대 동원지정 방안

- 전력 구성: 예비전력 93% 이상으로 예비군 의존도 지대
 - 동원사단 및 동원자원호송단: 평시 최소의 현역으로 운영
 - 동원보충대대: 전원 예비군으로 구성
- ※ 예비군 전력 구성이 동원사령부 전력의 핵심적 역할
- 동원지정 시 주요 고려사항
 - 현 권역화 동원제도 최대한 활용하여 지정
 - 현역 복무부대 단위 동일시기 근무한 중대급까지 건제 유지
 - 배정지역과 배정부대를 동원사단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정
 - 동원지정 예비군의 예비군 복무기간 고정 운용 강화
 - 병무청과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의 동원지정업무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수임군부대 이상의 위상을 부여하여 업무협업
- 동원지정 방안
 - ① 지역+부대 배정 범위 협의(동원사단·병무청)
 - ② 동원지정 초안 작성(병무청), 동원사단 전송(국방동원정보체계)
 - ③ 동원지정 결과분석 및 보완 건의(동원사단)
 - ④ 동원지정 수정 및 확정(병무청), 동원사단 전송
 - ⑤ 병무청 대체지정 시 동원사단 협의 후 처리(상호 협의 강화)
- ※ 이스라엘의 동원지정을 참고하여 한국적 여건에 맞는 지정체계 발전

V. 예비군 소집업무 제한사항 극복 및 효율적 운용방안

■ 단위사업별 병무청과 군 전산시스템 상호 활용 가능성 분석

-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 신규 편성 시 현역복무 경력자료 활용(기관별 협업으로 가능)
 - 현역 복무부대 단위 조직편성으로 동원예비군 자원관리 및 활용 용이
- 신상이동 정리체계
 - 거주지 이동자료 기관별 정보체계 연동 구축(관련 기관 협업 필요)
 - 예비군 소속변경 시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실시간 최신화 및 자동 처리
- ※ 업무처리 자동화로 소요 시간 단축 및 실시간 자원관리 여건 보장

- 육군동원전력사령부 동원지정 방안
 - 병무청과 육군 협의 하 동원지정 방법 개선 가능(국방부 지원 필요)
 - 동원지정업무 순기 조정 필요: 보충소요, 지정초안 작성 시기 등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체계
 - 병무청과 국방부 소집통지 시스템 통합: 기관별 협의/통합방법 검토
 - 동원예비군 소집통지 단일화 추진: 법령·규정 개정 및 기관 협의 필요
 - * 예비군 동일신분을 고려한 제도개선 요구

■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업무체계 및 수행기관 통합·조정 필요성

- 소요 인력·예산 판단 및 획득방안
 - 예비군 편성카드 항목 보완: 현 유지보수 예산으로 조치 가능
 - 현역 복무부대 단위 조직편성: 현 시스템 일부 개선으로 가능
 - 예비군 보류자 처리: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으로 가능
 - 훈련소집통지 통합 및 일원화: 법령개정 및 예산전환 소요(별도 제시)
 - 병무청과 국방부 정보체계 연계: 기관별 연동 협의 및 시스템 보완
- 관계기관 대응방안 및 추진전략
 - 추진전략 수립(입영동원국): 사업필요성 인식, 내외부 공감대 확산 노력
 - 국방부·각 군 본부와 적극적 협업 추진
 - * 사업 타당성 및 실효성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
 - * 법령 및 규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협의
 - 국회·언론 및 학계 등
 - * 국회: 사업추진계획 보고, 법령개정 요청 등 지원 건의
 - * 언론: 대국민 홍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추진
 - * 학계: 학생예비군 보류제도 개선 등 공감 유지 활동
 - 기타
 - * 기재부 등 예산 당국과 예산획득 협의
 - * 예비군 소집제도 개선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요구

VI. 동원예비군 훈련실태 조사·분석 및 형평성 제고 방안

■ 인식도 조사를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설문 시행

○ 인식도 조사 대상

- 조사대상 기준: 예비군(500명 이상) 및 동원업무 관계관(150명 이상)
 - * 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 예비군에 대한 대상별·지역별 균형적 분포
 - * 병무청은 예비군훈련 소집업무 및 관련 업무 담당관
- 조사방법: 제50·52지역방위사단 예비군훈련장 현장방문 설문조사

○ 인식도 조사 항목 및 내용

- 인식도 조사기법: 항목별 응답 비율 비교 분포도 분석
- 인식도 조사 중점
 - ①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시간 및 방법에 대한 적절성
 - ②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비교, 형평성의 문제 조사
 - ③ 보류자(학생예비군)의 훈련 시간 및 방법에 대한 형평성 조사
- 인식도 조사 문항 구성
 - ① 훈련 시간 및 장소, 시간의 적절성 여부
 - ②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보류자훈련의 훈련 차등에 대한 형평성
 - ③ 동원훈련의 시간 및 방법의 차등화 개선방안

○ 설문조사 참여자 현황(종합)

구분		계(명)	업무 분야				
			동원	현역	사회	기타	미명시
계(명)		871	221	42	22	38	20
병무청	소계	140	18	42	22	38	20
	중앙병무청	73	13	20	7	21	12
	지방병무청	67	5	22	15	17	8
육군 동원업무 관계관	소계	203	203	·	·	·	·
	예비군지휘관	148	148	·	·	·	·
	현역 간부	55	55	·			
육군 예비군	소계	528	·	·	·	·	·
	제50지역방위사단	247	·	·	·	·	·
	제52지역방위사단	281	·	·	·	·	·

■ 인식도 조사를 위한 설문 결과(종합)

○ 병무청과 육군 동원업무 관계관 설문 결과 및 분석

- 동미참훈련과 관련한 종합 설문 결과는 병무청과 육군 참여자의 다수가 동원훈련과 유사한 방법 시행, 소집통지 기관으로 병무청을 선택
- 보류자 훈련제도와 관련한 종합 설문 결과는 병무청과 육군 참여자의 다수(우세~강세)가 보류제도 폐지를 선택, 폐지 시 2023년 이후 단계별 추진방안을 선택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스템 통합 관련한 종합 설문 결과는 병무청과 육군 참여자의 다수(강세)가 단일시스템으로 통합하되, 소집통지 기관으로 병무청을 선택하였으며, 대면 소집통지서 교부 업무수행 기관은 대다수(강세~절대 강세)가 군부대를 선택
- 동원사단 동원지정 방안과 관련한 종합 설문 결과는 육군은 다수(강세)가 동의, 병무청은 다수(강세)가 부동의 선택
- 예비군 편성카드 자료 테이블 개선과 관련한 종합 설문 결과는 육군은 다수(강세)가 동의, 병무청은 다수(강세)가 부동의 선택
- ☞ 동원사단 동원지정 방안과 예비군 편성카드 자료 테이블 개선을 위한 설문결과를 고려할 때, 병무청(공급자)과 육군(수요자)이 생각하는 자료의 내용과 효과적 활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병무청과 군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적정 대안을 마련할 필요

○ 예비군(병, 간부) 설문 결과 및 분석

- 동미참훈련 관한 종합 설문 결과는 예비군(병·간부) 참여자의 다수(우위~우세)가 동원훈련과 유사한 훈련방법에 의한 시행방안을 선택
- 동미참훈련 소집통지 기관에 관한 종합 설문 결과는 예비군 참여자의 다수(우위)가 병무청을 선택
- 보류자 훈련제도에 관한 종합 설문 결과는 예비군 참여자의 다수(우세)가 보류제도 폐지를 선택, 폐지 시 2023년 이후 단계별 추진방안을 선택
- 보류자 훈련제도 개선 시, 일반예비군과 통합편성, 훈련방안을 선택
- 보류제도 폐지 반대 이유는 다수가 업체종사자의 업무여건 보장을 선택
- ☞ 보류제도에 관한 예비군 설문 결과는 폐지(60% 이상 수준)와 개선(30% 이상 수준)을 선택한 응답자가 90% 이상 수준으로 새로운 개선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은 충분함. 다만, 제도개선의 공정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통해 정책 결정 및 추진 필요

VII. 정성적 분석에 의한 조직의 추가 소요 판단 및 실행로드맵 구상

■ 조직이론 및 조직진단에 의한 분석적 방법론

- 맥킨지 7S모델: 조직진단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분석기법
 - 7S: Strategy(전략), Structure(구조), System(체계), Shared Value(공유가치), Skill(기술 및 역량), Staff(인적자원), Style(조직문화)
- 7S 구성요소의 상호관계 및 영향요인을 진단 및 분석, 상승효과에 의한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분석하여 설계

■ 조직설계를 위한 방법론 적용, 조직과 인력·예산 소요(안) 판단

- 예비전력 환경 분석·평가
 - 미래 가용 병역자원의 급감⇒ 군 상비전력 및 예비전력의 감축
⇒ 전반적인 군구조의 재설계 불가피
 - 미래 예비군 가용자원 지속 감소 예상⇒자원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제기
 - 동미참훈련 및 보류제도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제도적 개선 요구 확대
- ☞ 예비군 자원관리의 효율화 및 예비군 소집업무의 일원화 필요성 증대

■ 병무청 예비군훈련 소집업무 일원화 시 소집업무 대상자 판단

- 예비군 275만 명(국방부, 2022년) 편성기준
 - 동원훈련 예비군 약 53만여 명, 동미참훈련 예비군 약 49.7만여 명
 - 동원훈련 대상자 중 매년 약 20% 수준(이월 소요 포함) 훈련 불참으로 인해 동미참훈련으로 전환
- ☞ 예비군훈련 소집업무 일원화 시,
현 53만여 명⇒약 110만여 명으로 증가(+210%)
- 업무수행 조직 수준의 분석
 - 병무청 동원 및 소집업무 수행 조직의 인력은 현재 약 200여 명 수준
⇒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대비 약 420여 명으로 증원 필요
 - 인력 증원 시, 전문지원인력(관리자, 체계 운영자 등) 5~10% 추가 소요
- ☞ 총 인력 증원 소요: 약 460여 명

○ 그룹 및 개인 수준의 분석

- 업무수행 그룹의 상하 및 수평적 업무계선 상 과업·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으로 인한 소요 감소 조정: 약 10%
- 개인의 업무수행 능력(전문성, 숙련도)에 의한 대체 효과로 인한 소요 감소 조정: 약 10%
- 과학화 및 정보화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수행 체계의 효율성으로 인력 대체 효과를 반영한 소요 감소 조정: 약 10~15%
- ☞ 최종 인력 증원 소요 판단: 현 약 200여 명 ⇒ 약 320여 명으로 증가 (160% 수준 확대)
 - * 맥킨지, “초우량기업의 조건-성공기업의 조직진단과 사례분석”(2017)
 - * 미 육군교육사,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력 대체 효과분석”(미 육군, 2015)

☞ 정량적 조직진단 및 예산의 현실적 가용성 고려, 직책·직급별 인력 소요에 대한 정밀 검증을 통해 소요를 도출하고 반영할 필요

○ 예산 소요 판단(안)

- 병무청 상하 및 수평적 업무조직 간 체계개선 소요: 약 2.5억여 원
 - ① 예비군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기능 개선 및 전자송달 체계개선
- 병무청-국방부(군) 간 체계 연동 및 개선 소요: 약 5억여 원(예산)
 - ① 병무청-국방부(군) 간 체계 연동을 위한 개선사업
 - ② 병무청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발송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 개선
- 동미참훈련 응소자 교통비: 약 182억여 원(국방부 예산 전환)
 - ① 추가 대상자 57만여 명
 - ② 교통비(8천 원/일) × 4일 = 32,000원(4일 출퇴근 훈련 시)
- 동미참훈련 대상자 소집통지서 우편료: 약 35억여 원(국방부 예산 전환)
 - * 현 반영 소요 예산 기준

☞ 총 추가 소요 예산: 약 230억여 원(잠정)

※ 병무청 조직구조 개편: 입영동원국⇒동원국 분리/신설(3개과 40~50여 명)

※ 정밀 조직진단을 통해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 소요 판단

■ 병무청 주도의 추진전략 수립 및 실행로드맵 구상

- ※ 합리성·타당성 있는 논리 개발 및 주요 과제의 세부 계획을 수립, 국방부(군) 간 협의를 통해 방안 마련, 체계적·단계적 실행로드맵 추진
- ※ 과제별 분석·평가 및 공감 가능한 검증 결과를 제시, 정책 의제화

Ⅷ.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예비군 소집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예비군 소집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소요를 도출하고 대안을 마련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기관 일원화: 병무청
 -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개선, 병무청과 군 간 정보체계 연계 강화
 - 예비군 보류제도 개선 및 정비를 위한 대안 마련, 관련 기관 협업
 - 예비군 신분별 훈련과정의 형평성 유지(설문조사 인식도 결과)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및 시행
- ※ 현 정부의 「국방혁신 4.0」의 과제화를 위해 정책 및 공감 논리 개발

■ 정책제언

- 병무청 조직구조 개편을 위한 정밀 조직진단 및 소요 도출, 반영
↳ 업무소요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진단을 통한 소요 및 검증 결과
 - 병무청 주도의 예비군훈련 소집업무 일원화를 위한 국방부(군)와의 상호 협업 및 합동협의체 구성
 - 병무청 대내·외 대응 전략 및 실행로드맵 수립, 지속적·단계적 추진
- ※ 정책화를 위해 국민의 공감대 형성 및 지지 확대를 위한 노력 주안

목 차

목차	i
표 차례	iii
그림 차례	v
I.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범위 및 추진방향	3
3. 연구의 특징 및 기대효과	7
II. 예비전력 정예화 환경 분석평가 및 중요성	9
1. 예비전력 정예화 환경 분석평가	11
2. 예비전력 건설을 위한 주요 영향요인	12
3.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필요성 및 중요성	15
4. 미래 가용 병역자원의 감소와 불확실성 증대	21
III. 병무청과 군의 예비군 소집업무 운영실태 분석	27
1. 병무청의 자원관리 및 훈련 소집통지 절차 분석	29
2. 군(軍)의 자원관리, 훈련소집통지, 훈련과정 분석	45
3. 소결론	55



IV. 예비군 소집업무 분석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59
1. 주요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61
2. 현 운용체계와 개선방안의 장·단점 비교분석	73
3. 소결론	83
V. 예비군 소집업무 제한사항 극복 및 효율적 운용방안	85
1. 단위사업별 병무청과 군 전산시스템 상호 활용 가능성 분석	87
2.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업무체계 및 수행기관 통합·조정 필요성	97
3. 소결론	106
VI. 동원예비군 훈련실태 조사·분석 및 형평성 제고 방안	109
1. 인식도 조사를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설문 시행	113
2. 인식도 조사를 위한 설문 결과 분석	116
VII. 정성적 분석에 의한 조직의 추가 소요 판단 및 실행로드맵 구상	129
1. 조직이론 및 조직진단에 의한 분석적 방법론	131
2. 동원 및 소집통지 업무 조직 및 인력, 예산 소요 판단(안)	133
3. 예비군 소집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행로드맵(안)	136
VIII. 결론 및 정책제언	139
〈참고문헌〉	149
〈첨부〉 인식도 조사 설문지	151

표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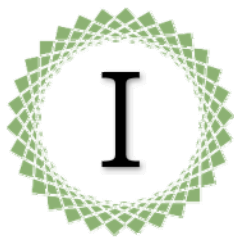
〈표 1〉 전역 시 병역자료 전송 현황	19
〈표 2〉 기관별 예비군자원관리 책임 분야	30
〈표 3〉 직장예비군 부대 편성대상	31
〈표 4〉 예비군 편성명부 작성 체계도	31
〈표 5〉 예비군 신규편성 절차	32
〈표 6〉 예비군 신상변동자 관리절차	32
〈표 7〉 예비군 편성 간 주요 요인 분석	33
〈표 8〉 기관별 동원지정자 관리 책임	35
〈표 9〉 기관별 주요 홍보활동	35
〈표 10〉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 신설(2014. 5. 9)	36
〈표 11〉 훈련소집 통지 제외 대상자	40
〈표 12〉 지휘서신의 주요 포함사항	40
〈표 13〉 병무청 모바일앱 서비스 구축현황(총 86종)	41
〈표 14〉 보류 직종(「예비군법」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45
〈표 15〉 예비군훈련 보류제도(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46
〈표 16〉 보류자 현황(2021년 기준 평균값으로 정리)	47
〈표 17〉 예비군(4년차 이내)의 예비군훈련 참가 현황(국방부, 2019년 기준) ..	48
〈표 18〉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방법	49
〈표 19〉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발송체계	49
〈표 20〉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우편발송 비용 추계(2019, 육본 내부자료)	51
〈표 21〉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인편통지 현황(2018. 3월 기준)	51
〈표 22〉 예비군훈련 대상 및 시간 현황	53

〈표 23〉 현역 복무기록을 포함한 예비군 편성방안	63
〈표 24〉 예비군 보류제도 개선 추진 경과(국방부)	66
〈표 25〉 예비군 보류제도 추진 방안(예)	67
〈표 26〉 병무청과 국방부 연동대상 종류	71
〈표 27〉 예비군 편성 개선안 분석	74
〈표 28〉 예비군 신상이동 개선안 분석	75
〈표 29〉 예비군 보류자 처리 분석	75
〈표 30〉 예비군 편성카드 개선안	76
〈표 31〉 예비군훈련소집 통지 개선안	77
〈표 32〉 기관별 정보체계 개선안	77
〈표 33〉 예비군 편성카드 작성 추가항목(예)	88
〈표 34〉 동미참훈련 단계별 시행방안	96
〈표 35〉 동미참훈련 소집통지 통합 관련 법령개정 방안	96
〈표 36〉 예비군 편성카드 항목 조치방안	97
〈표 37〉 현역 복무부대 예비군 편성 조치 소요	98
〈표 38〉 동원사단 병력동원 지정업무 협업 추진방안	103
〈표 39〉 제도개선의 대응 중점 및 우선순위 판단(예)	105
〈표 40〉 단계별 추진 전략(예)	106
〈표 41〉 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 보류자훈련의 주요 내용 비교	112
〈표 42〉 설문 대상자 현황(종합)	114
〈표 43〉 동미참훈련 개선방안 비교	117
〈표 44〉 보류자훈련 개선방안 비교	119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수행 절차 및 흐름도	6
[그림 2] 국가동원 체계도	16
[그림 3] 총체전력 중 동원자원의 비중(국방부, 2020)	17
[그림 4] 예비군 자원관리 체계도	19
[그림 5] 예비군 관리 절차(「예비군법 시행령」)	20
[그림 6] 장기 추계인구 전망	23
[그림 7] 중·장기 20세 남성 추계인구 전망	24
[그림 8] 중·장기 가용 병역자원 및 현역병 입대자원 수급 전망	25
[그림 9] 예비군 편성대상	29
[그림 10] 지역예비군 세부 편성현황(예)	37
[그림 11] 병력동원훈련 소집계획 작성 순환도	39
[그림 12] 병무청 모바일 통지서 발송 절차 개선(2019년)	42
[그림 13] 예비군홈페이지 훈련 소집통지서 확인/출력	50
[그림 14] 국방동원정보체계 업무 연동시스템 구축도	50
[그림 15] 예비군훈련 유형 구분과 예비군훈련 체계	52
[그림 16] 예비군훈련 관리체계	54
[그림 17] 예비군 관리 업무 연동체계도	64
[그림 18] 예비군 신상 변동업무 자동처리 체계안	65
[그림 19] 병무청과 군의 예비군 모바일앱 소집통지 체계	69
[그림 20] 병무청-국방동원정보체계 정보유통 체계도	71
[그림 21] 정보 송수신 간 3단계 보안체계(예)	72
[그림 22] 예비군 편성자료 공유 및 연동방안(예)	73

[그림 23] 예비군 가용자원 변화 추이	80
[그림 24] 예비군 신규편성 체계 연동 방안(예)	81
[그림 25] 이스라엘의 정규여단 예비군여단 편성(예)	93
[그림 26] 예비군훈련소집통지 시스템 통합방안	101
[그림 27] 관계기관 대응 체계도	104
[그림 28] 병무청 및 육군 동원업무관계관의 설문 대상자 현황	115
[그림 29] 예비군(병·간부)의 설문 대상자 현황	115
[그림 30] 동미참훈련에 대한 병무청 및 육군 예비역지휘관과 현역 간부의 설문 결과	118
[그림 31] 보류제도 시행에 대한 병무청 및 육군 예비역지휘관과 현역 간부의 설문 결과	120
[그림 32]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단일시스템 통합운영에 대한 병무청 및 육군 예비역지휘관과 현역 간부의 설문 결과	121
[그림 33] 동원사단 동원지정 및 예비군 편성카드 자료 개선방안에 대한 병무청 및 육군 예비역지휘관과 현역 간부의 설문 결과	124
[그림 34] 동미참훈련에 대한 예비군(병·간부)의 설문 결과	126
[그림 35] 보류자 훈련제도에 대한 예비군(병·간부)의 설문결과	127
[그림 36] 맥킨지의 7S와 주요 요소의 개념	132
[그림 37] 추진전략에 따른 실행로드맵 구상(안)	137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추진방향
3. 연구의 특징 및 기대효과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국방개혁 2.0」 예비전력 강화와 연계, 동원병력 정예화 요구 증대

- 1) 감염병 등 사회환경 변화 적기 대응, 완벽한 병력동원 태세 확립 요구
- 2) 정예자원 확보 및 예비전력 강화를 위한 예비군 제도개선 필요

나. 동원예비군훈련 간 업무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체계 재설계 필요

- 1) 자원관리 이원화 및 인력 축소에 따른 예비군자원관리 체계화
- 2) 예비군 훈련방식 및 훈련시간 차등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내재

➡ 대·내외 환경 반영, 예비군 소집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2. 연구범위 및 추진방향

가. 연구범위(제기부서 요구내용)

1) 예비군제도 운영실태 조사·분석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병무청-군 예비군 소집업무 운영실태 조사 및 분석
 - (병무청) 자원관리(예비군 편성, 신상이동 등), 훈련통지 절차 등
 - (군) 자원관리(보류자 처리, 편성카드 정리 등), 훈련통지 절차, 훈련과정 등
 - 예비군 소집업무 분석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마련
 - 운영실태 분석, 단위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안 제시
- * 과제: ① 예비군 편성, ② 신상이동 정리, ③ 보류자 처리,
 ④ 편성카드 정리, ⑤ 훈련통지 절차,
 ⑥ 병무청-군 간 자료 연계체계

- 개선안과 현 운영체계와의 장·단점 비교분석
 - * 효과성 측면(국민편익 제고, 업무량 감축 등)
 - * 경제적 측면(시간 단축, 비용 절감 등)
- 개선방안에 대한 장애 극복 및 수행기관 통합 등 효율적 운용방안 제시
 - 단위사업별 병무청-군 시스템 상호 활용 가능성 분석
 -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업무체계-수행기관 통합·조정 필요성
 - * 수행기관 통합·조정 시 업무량에 따른 소요 인력·예산 판단 및 획득방안 포함
 - * 관계기관 대응 방안 연구 및 단계별 추진전략 제시

2) 동원예비군 훈련실태 조사·분석 및 형평성 제고 방안 제시

- 예비군훈련 간 방법 및 시간 차등에 대한 형평성 등 인식도 조사
 - 조사대상/인원: 예비군(500명) 및 지역예비군 간부(150명)
 - 내용: 예비군훈련 간 방법 및 시간 차등에 대한 형평성 수준 인식조사
 - *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은 병무청과 사전 협의
- 인식도 조사 결과분석, 예비군훈련 간 형평성 제고 방안 제시
 - 예비군훈련 간 합리적 훈련방식 및 시간기준 제시(최소 3개)
 - 현행 기준과 장·단점 비교, 개선 필요성·당위성 판단자료 제시

나. 연구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1) 추진전략: 주요 과제 단위 주요 쟁점 도출/분석, 단계별 심화 연구

- 1단계는 선행연구(관련 기관 공개자료 및 연구논문 등) 및 자료수집
 - * 한국 예비군 상황과 여건에 부합 여부 판단 및 적용 가능성
- 2단계는 제기부서 요청내용 토대로 쟁점 식별 및 과제화, 집중 분석
 - *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 관련 주요 쟁점 중심, 현상 진단 및 분석
 - * 과제별 기대효과 및 제한사항 등 도출, 해결방안의 비교분석

- 3단계는 예비군 소집업무 현상 진단 및 인식도 조사, 분석 결과 해석
 - * 예비군훈련 간 방법 및 시간 차등에 대한 형평성 등 인식도 조사
 - * 정량적 분석: 예비군 대상 실증적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 도출
- 4단계는 선택적 대안 마련 및 신뢰도·타당성 제고 위해 관련 기관(부서)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보완, 체계적·논리적 결과 제시
 - * 제기부서 및 대외 업무 전문가에 의한 토론회 및 의견수렴

2) 현 제도가 설정된 기준 및 내용과 상호 비교분석, 합리적 대안 제시

-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대안별 비교요소에 의한 장·단점 분석
- 연구 결과 및 대안의 필요성·형평성·합리성 측면에서 결과 도출

3) 연구수행 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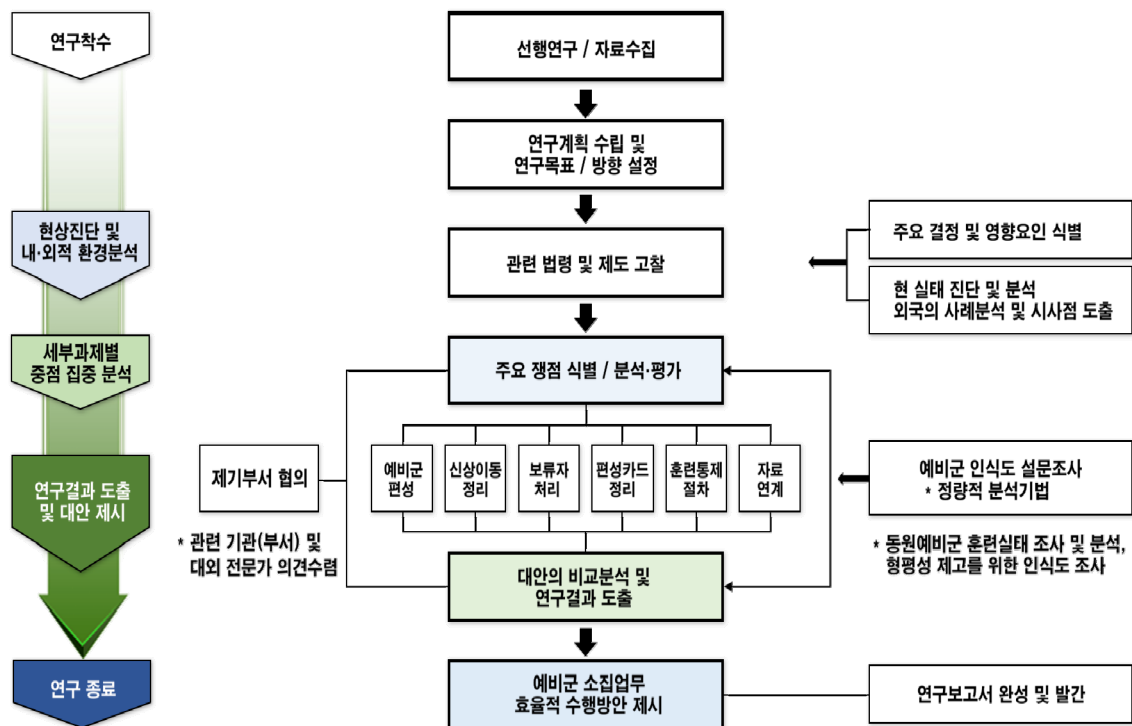
- Top-Down 및 Bottom-Up 접근방법 병행, 상황적합적 관점에서 상호순환 및 연계로 오차를 최소화하고 정량적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하는 연구의 발전방향과 방안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연구수행
- 제기부서 요구내용을 토대로 세부 과제화, 연구 기본방향 설정
 - 주요 과제(4개 대과제, 8개 소과제) 연구방향 및 과제별 중점 설정

대과제	소과제
병무청과 군의 예비군 소집업무 운영실태 분석	① 병무청의 자원관리 및 훈련 소집통지 절차 분석 ② 군의 자원관리, 훈련통지, 훈련과정 분석
예비군 소집업무 분석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③ 주요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④ 개선안과 현 운영체계와의 장·단점 비교분석
개선방안에 대한 장애극복 및 수행기관 통합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⑤ 단위사업별 병무청과 군 전산시스템 상호 활용 가능성 분석 ⑥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업무체계 및 수행기관 통합·조정 필요성
동원예비군 훈련실태 조사·분석 및 형평성 제고방안 제시	⑦ 예비군훈련 간 방법·시간 차등에 대한 형평성 등 인식도 조사 ⑧ 인식도 조사결과 분석, 예비군훈련 간 형평성 제고방안 제시

- 세부 과제 중점별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진단 및 분석

- 자체 설정한 기본방향을 기초로 예비군 소집업무에 관한 주요 쟁점을 식별, 분석·평가함으로써 자료 데이터화 및 논리적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 있는 예비군 소집통지 업무에 관한 선택 가능한 방안을 비교분석, 제시
 - 현행과 대안의 비교요소에 의한 장·단점 비교분석
- 연구자료와 내용의 특성상 정성적 분석 중심으로 연구수행, 예비군의 인식도 조사를 통해 분석 및 결과 해석, 신뢰도 및 타당성 제고
 - 예비군부대(기관) 및 부서, 대외 관련 업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 결과를 재검토 및 보완하여 최적의 결과 도출, 제시

[그림 1] 연구수행 절차 및 흐름도



출처: 연구자 작성

3. 연구의 특징 및 기대효과

가. 연구의 특징

- 연구는 개념연구¹⁾로서의 특성을 포함
 -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의 새로운 방향성과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와 연계된 예비군 병력동원 및 소집업무에 관한 개념적 논리 개발
 - 향후 예비군 소집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소요제기 및 발전방향을 포괄적으로 판단, 제시
 - 예비군에 대한 실증적 설문조사에 의한 인식도 분석을 토대로 관련 자료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를 필요 시 반영하여 도출
 - 예비군 소집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향 및 방안 도출
 - 예비군(부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유지 관점에서 관련 제도 및 체계 발전
 - 하나의 방안을 결정하기보다 선택 가능한 대안의 검토, 비교분석
 - 장·단점 분석을 위한 비교요소 설정, 방안의 상대적 특성 기술
- ⇒ 예비군 소집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비교분석 및 정책제언 제시

나. 기대효과

- 병무청 예비군 소집업무 및 관련 정책결정을 위한 연구결과 및 근거로서 활용 및 제시
- 미리 예측하고 준비, 예비군 업무의 효율화 및 예비군자원의 참여동기 유발 제고
 - MZ세대에 부합하는 예비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효과적 운용에 기여
- 미래 인구절벽으로 인한 가용자원 부족에 대비하는 예비군 인식 변화 반영
- 연구결과 활용 방안
 - 병무청뿐만 아니라 군 예비전력 정책 판단 시 주요 정책적 지침 적용
 - 국방기본정책서, 국방개혁 기본계획 등 국방부 및 각 군 계획에 반영
 - 국방부-합참-육군본부 동원 및 예비전력 현안(담당) 부서 및 기관 활용

1) 개념연구는 일련의 임무에 관해 상위에서 포함된 의도나 가정을 구두 또는 서술적인 진술로서 표현한 전반적인 윤곽이나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적 요소를 종합하여 얻은 하나의 보편적인 관념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



예비전력 정예화 환경 분석평가 및 중요성

1. 예비전력 정예화 환경 분석·평가
2. 예비전력 건설을 위한 주요 영향요인
3.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필요성 및 중요성
4. 미래 가용 병역자원 감소와 불확실성 증대





II 예비전력 정예화 환경 분석평가 및 중요성

1. 예비전력 정예화 환경 분석평가

예비전력 환경이란 국가동원 및 예비전력 정책 수립과 이를 운용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제 요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예비전력의 환경을 결정짓는 요소로는 안보 정세 변화, 한반도 주변의 전략환경 변화, 사회 환경의 변화, 국내·외 군사력 건설방향 등이 포함된다.²⁾ 한반도 주변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강력한 대규모의 예비전력을 보유하면서 이를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국가통제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방개혁 2.0」에 반영된 예비전력 정예화는 군 구조개혁 분야와 국방운영 혁신 분야로 구분하여 관련 과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군 구조개혁 분야는 육군 동원 전력사령부 창설로부터 예비전력 관리기구 구조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방운영 분야 혁신에는 동원체계 발전, 예비군 조직편성·관리·훈련 등의 개선으로 상비전력에 준하는 예비전력 육성과 관련된 과제를 반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정예 예비전력 육성을 목표로 예비전력 운용규모와 편성을 최적화하고, 미래 환경에 부합된 효율적인 동원체제 구축, 동원위주 부대의 부대구조 발전과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체계 구축, 예비군 신문화 조성 및 복지여건 개선, 예비전력 정예화 예산확보 등을 국방개혁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현역 복무기간 단축과 병역자원 감소는 미래 예비전력 정예화로 군사력의 공백을 채워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예비군을 상비군과 함께 총체전력(Total force)³⁾의 일부로서 실질적인 전력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전력의 정예화는 국방혁신과 미래 국방정책에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전력의 정책과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적정 군사력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2) 육군 예비전력 비전 2030 제2장 1절(예비전력 환경평가)

3) 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비 및 동원전력의 총합(합참, “군사용어사전”, 2020)

향후 예비전력은 상비전력과 함께 총체전력을 구성하는 한 축으로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동원체제 발전과 예비군운영 혁신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동원체제 발전은 동원관련 법령 정비로부터 동원 자원 관리 및 집행체제 발전, 동원지원체제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예비군 운영 혁신 분야는 예비군 관리 및 운영체제 개선과 예비군훈련 발전, 예비역 간부 운용 강화 등 실질적인 예비전력의 역량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전된 과학기술 능력을 반영하여 빅 데이터에 의한 동원자원의 관리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동원지원체제 확립으로 동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과학화된 예비군훈련체제 발전을 위해 스마트훈련장의 구축과 시스템을 활용한 훈련관리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동원사단 등 동원 위주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예비역 간부의 활용을 확대하면서 지역예비군 부대에 대한 신규 전력의 보강 등 전반적인 예비전력 정예화와 관련한 소요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예비전력 건설을 위한 주요 영향요인

가. 군사력 건설 기본방향과 예비전력

「국방개혁 2.0」 추진과 연계하여 상비병력을 대규모로 감축하면서 현역 중심의 전투부대는 첨단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한 부대구조로 개편이 추진될 것이며, 기타 전투(근무)지원부대는 평시 최소한의 현역으로 편성하되 전시 예비군을 동원하여 충원하는 부대구조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상비군과 예비군의 효과적인 전력배합을 통해 적정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전시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대편성 및 구조로 전환할 것이다. 미래 군사력은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이 배합된 총체전력으로서 국방력을 유지해야 하는 측면에서 예비전력이 상비전력의 부대구조와 규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육군의 경우는 전력의 상당 부분을 병력에 의존한 부대구조를 유지해야 하므로 해·공군에 비해 예비군의 동원전력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미래 병역자원 감소와 연계되어 현역 복무 인원 축소는 예비군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므로 예비군을 정예화하여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에 노력을 배가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군의 예비군 동원전력 건설 방향은 예비군 자원관리체계 및 동원제도를 보완하고 동원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원집행체제의 개선을 위한 예비전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나.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방향

국방부의 예비전력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예비전력 정책서」에는 ①동원분야와 ②예비군 분야로 구분하여 정책 중점을 제시하고 있다. 동원분야는 동원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서 여러 개의 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조항을 통합한 「동원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예비군법」에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 등에 분산되어 명시된 예비군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동원자원관리 및 집행체제 개선을 위해 동원초기에 집중되어 있는 동원소요의 재조정과 권역화 동원제도의 시행 여건에 관한 개선,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활용한 동원관리체계의 발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예비군 분야는 예비군 관리 및 운영체제 개선을 위해 예비군의 편성 및 규모를 조정하여 임무중심으로 최적화하고 예비군훈련은 임무와 역할에 맞게 단순화와 과학화 훈련체계를 구축하며 예비역 간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근 예비군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전·평시 동원태세 확립에 기여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방부의 예비전력 정책은 「상비전력 수준의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을 목표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비군 업무관리 시스템 개선 등 제도발전과 적정수준의 예산확보 및 동원태세 발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예비전력 정책의 방향 및 중점에 의거, 예비전력의 주요 사업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주안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예비군의 적정 운용 규모와 편성 최적화는 미래 위협의 변화를 고려하여 예비군의 임무를 증·창설 지원, 지역방위작전 외에 테러·재난 등에 대한 대응으로 최적화하며, 예비군의 임무와 역할에 맞는 예비군 규모를 조정하고, 동원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의 개정과 예비군 비상근제도를 확대하여 동원 위주 부대의 동원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미래 환경에 부합된 효율적인 동원체계 구축은 우수한 예비군 정예자원의 동원지정과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동원자원의 발굴 및 활용, 전시 동원자원의 수송 및 호송대책을 발전시키며, 병력동원과 물자동원으로 이원화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합하며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동원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동원 위주 부대의 부대구조 발전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지휘 및 부대구조 발전과 동원사단의 부대구조를 상비사단과 동일한 편성을 갖추도록 전력화를 추진하며, 동원지원단의 효율적인 동원지원 임무수행을 위한 방법을 발전시킨다.

넷째, 과학화 예비군훈련 체계구축은 예비군 임무와 역할에 부합된 훈련 방법을 발전시키고 AICBM(AI+IoT+Cloud+Big Data+Mobile) 기술을 적용한 과학화된 훈련체계를 도입하며, 이 중 동원훈련은 합성훈련환경(SET)⁴⁾ 기반으로 통합된 전술 훈련, 장비 위주 주특기 훈련이 가능토록 발전시킨다.

다섯째, 예비군 신문화조성 및 복지 여건 개선은 예비군의 정책 및 제도를 홍보하여 예비군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자긍심 고취와 전투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 처우 보장과 복지 대책을 모색함으로써 예비군의 복무 의욕을 고취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예비전력 정예화 예산확보는 ①동원 위주 부대의 무기·장비 현대화와 ② 과학화된 예비군훈련 체계구축, ③예비역 간부자원 확보 등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소요 재원을 확보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따라서 미래 예비전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예비전력 정예화에 필요한 군의 요구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소요되는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예비전력은 「국방개혁 2.0」과 육군 「예비전력 비전 2030」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정예 예비전력 육성”이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비전력 환경을 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추진할 것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미래 군의 부대구조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최적화된 예비전력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요구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의 제·개정 및 소요 예산의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4) SET(Synthetic Training Environment): 합성훈련환경으로 실제훈련과 가상훈련을 접목하여 자유롭게 호환하여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으로 LVCG(실기동·가상·위게임·게임) 체계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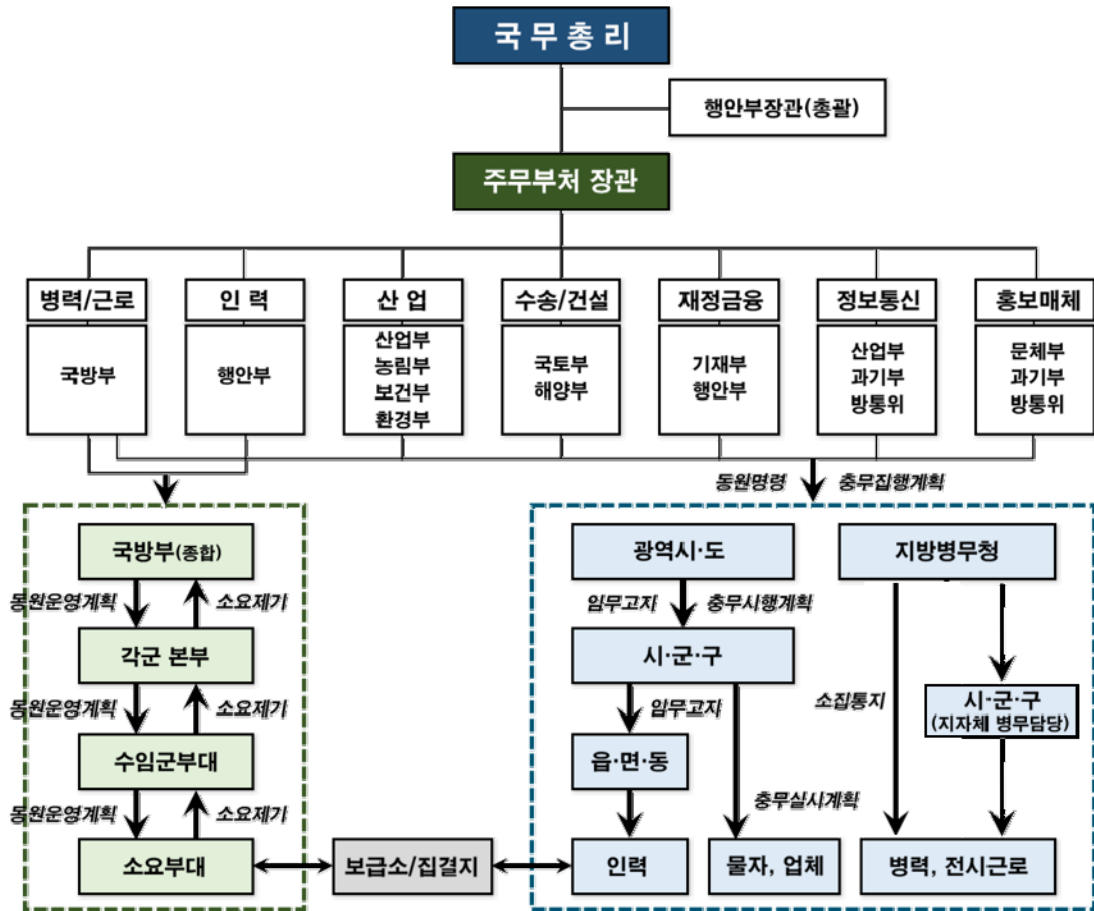
3.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필요성 및 중요성

가. AI기반의 동원자원 관리체계 발전

국방 동원자원의 유형은 크게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자원은 전시 군부대의 증·창설 및 손실보충 소요를 충원하는 병력동원과 전투근무지원을 위한 전시근로소집 및 기술인력이 있으며, 동원절차는 군이 전시 소요를 관련 기관에 제기하면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은 병무청에서, 기술인력은 행정안전부에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동원을 지원하게 된다. 물적자원은 장비·물자 및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 동원이 이루어지며, 동원절차는 인적자원과 유사한 방법으로 군이 전시 편제 부족과 손실보충 소요를 정부의 자원관리 주무 부처로 요구하면 해당 부처에서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국방 분야 물자동원의 종류는 산업동원, 수송 및 건설동원, 정보·통신동원 등이 있다.

인적 및 물적자원의 동원 절차는 국가 수준에서 전시에 대비하여 군이 전시에 요구되는 자원들에 대하여 도출한 소요를 정부의 각 자원을 담당하는 부처에 제출하고 각 지원부처는 계획에 따라 선정된 자원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2]에 제시한 국가동원 체계도를 토대로, 병력동원과 전시근로소집은 국방부에서 병무청을 통해 시행하고 물자동원과 병력동원은 자원관리 주무 부처별로 충무계획 시행 절차를 적용하여 기관별 소요 기관에 지원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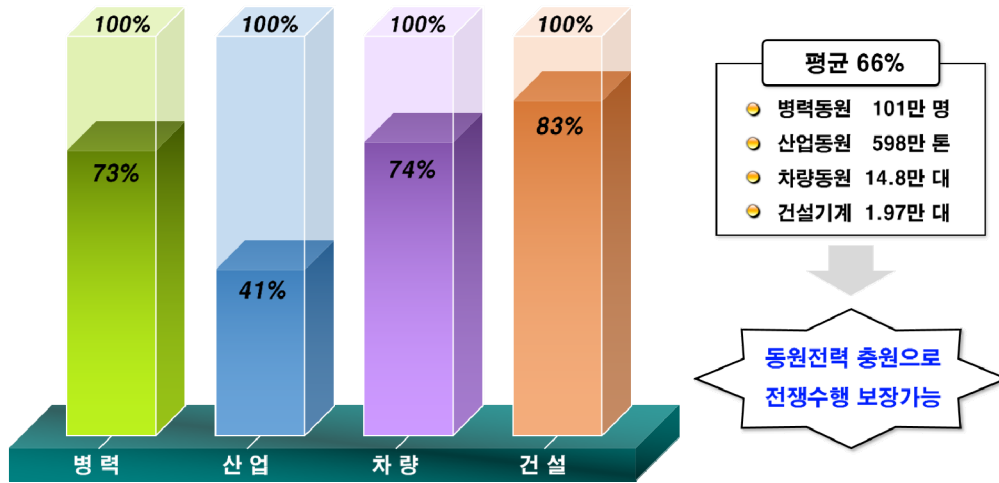
[그림 2] 국가동원 체계도



출처: 육군 동원 및 예비군업무 교범, p. 1-20.

전시 군의 전쟁수행 능력을 위한 총 전력(Total force) 중에는 동원전력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력동원의 경우는 73% 이상을 예비군 동원으로 전시 부대편성과 손실보충을 충원하고 있다. 예비군이 정상적으로 동원되지 않는다면 전시 군사작전 수행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물자의 경우 대부분 60% 이상을 동원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동원의 집행 여부에 따라 전쟁지속 역량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3] 총체전력 중 동원자원의 비중(국방부, 2020)



출처: 연구자 작성

국방동원관리체계는 군에서 전시 동원소요를 제기하고, 자원관리 주무 부처에서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동원자원을 평시에 지정 및 관리하여 동원령 선포 시 해당 자원을 군에 인도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매년 자원의 주무 부처는 충무계획을 작성하고, 군은 동원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전시 동원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전시 동원집행 보장을 위해 자원관리 주무 부처와 군은 동원자원 관리 및 동원태세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평시 점검과 도상·실제연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자원 관리행사 등 동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국방 관련 동원자원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다양한 기관과 부대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군이 요구하는 시간과 장소에 동원집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한 통합된 동원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최적의 자원을 적시에 지원하고 실시간 동원의 과정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동원업무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나. 병력동원 관리체계 발전

병력동원 소집을 위한 예비군 동원지정은 병무청에서 행정구역별로 확인된 예비군 가용자원을 소집부대별 전시 소요에 맞게 동원지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소집부대의 예비군 동원소요에 맞게 특기와 계급, 연차를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행정구역별 자원분포 차이 등으로 일부 특기 충족이 제한될 수도

있다. 또한 동일 특기라고 하더라도 화포가 신형인지 구형인지에 따라 조작 방법이 상이하여 장비운용에 제한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동원지정은 구체적인 부분까지 세부적인 업무관리가 요구되므로 예비군이 현역 복무 간 경험한 특기와 숙달 수준까지 참고하여 동원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동원지정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군의 소집부대별 동원지정 시 현역 복무부대의 건제를 유지하여 지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현역 복무 경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 시행이 필요하지만 몇 가지의 문제로 제약을 받은 바 있다. 국방부에서 2012년도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 정책추진을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예비군의 불만으로 시행을 하지 못했던 사례⁵⁾가 있다. 현역 복무와 예비군 복무를 연계시키는 것이 일부 예비군에게는 이중적인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원거리 동원지정된 예비군의 불만에 관한 민원 등으로 정책 시행에 대한 부담이 많아 실제 정책적 접근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는 현역 시 복무부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권역화 동원지정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권역이 광범위하여 원거리 예비군 동원지정이나 훈련소집 간 역수송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제한사항이 있어 현역 시 복무부대의 장점을 100%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현역 의무복무의 장점을 활용하여 예비군 전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어떻게든 일부 부담을 감수하면서 제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예비군 편성카드에 현역 시 복무경력 자료 반영에 대한 것으로 각 군 참모총장이 병무청에 병역자료를 전송하면 병무청에서 예비군을 편성하고 그 편성자료 일부를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하면 군과 예비군부대에서 이를 자원관리에 활용하게 된다. 병무청에서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전송하는 예비군 자료 중에 “현역 복무 부대명”은 문자(text)만 전송되고 전산 부대코드(UCMS)는 전송되지 않아 예비군의 현역 복무부대별 자원 확인 및 동원지정 협조업무 등의 활용은 제한된다. 현역 복무자료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병무행정체계로 40여 개 항목으로 전송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5) 2012년부터 시행하고자 추진했던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는 그동안 예비군이 현역 시 복무했던 부대와 무관하게 본인의 주소지 중심으로 지정되던 것을 ‘현역 복무부대와 주소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지정하는 제도로 당시 3년 동안 육군에서 약 28개 부대를 대상으로 제도시행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인원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찬성 44%, 반대 38%, 무응답 18%, 전우 만남, 임무숙지 및 지형숙지 등 장점고려), 원거리 입소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09시부터 11시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였으나 예비군들의 불만으로 제도를 시행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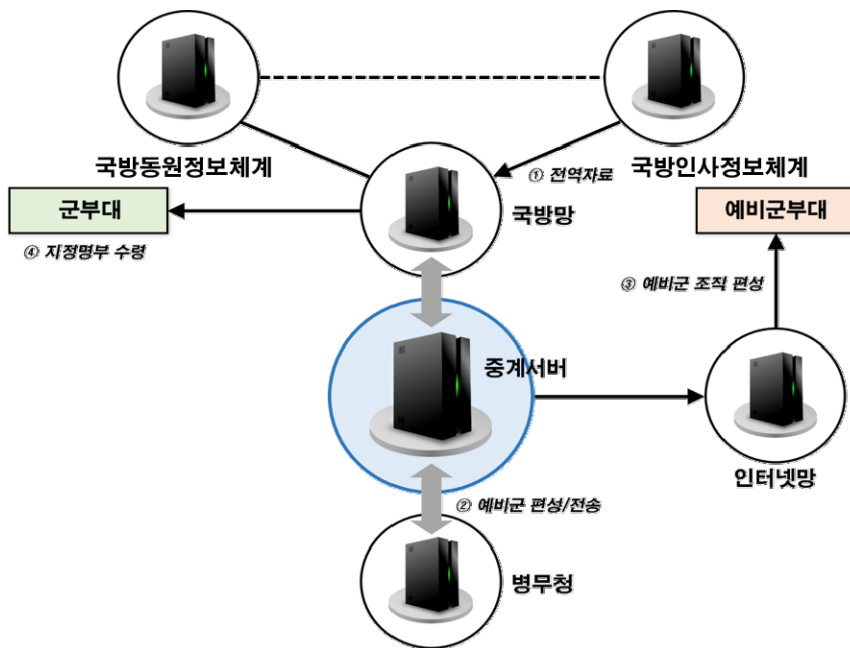
현역복무 부대코드(UCMS)가 중대급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병무청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국방동원정보체계와는 연동되지 않아 소집부대와 예비군부대에서 현역의 현역 시 복무부대의 부대코드를 활용한 업무관리는 제한된다.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전역 시 병역자료를 병무청에 전송하고 있는데 이를 국방동원정보체에서 일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 1> 전역 시 병역자료 전송 현황

- | |
|--|
| ① 각 군 총장 : 현역 복무 신상자료 병무청에 전송(40여 개 요소) * 국방인사정보체계 |
| ② 지방병무청 : 예비군 편성(편성카드) ⇒ 국방동원정보체계 전송 * 병무행정체계 |
| ※ 현역 시 복무부대는 부대명: 문자(text) 발송, UCMS코드 미전송 |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를 위한 자료전송 및 관리체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현역 복무를 마치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병무행정체계로 관련자료를 전송하며, 병무청에서 예비군을 편성한 후 필요한 정보자료를 다시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하고, 이 자료는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예비군부대에서 예비군 자원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그림 4] 예비군 자원관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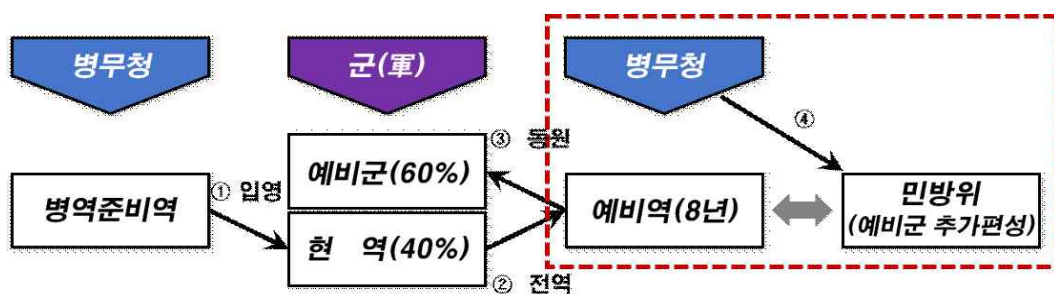


출처: 연구자 작성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병무청으로 전송된 자료 중 병무청에서 정리한 자료 일부를 전송받아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활용하는 구조이다. 즉 국방부 내의 인사·동원정보체계 간 예비군 편성자료 송수신이 없으며 병무청을 거쳐 수신된 정보자료를 활용하는 제한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동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병력동원 소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예비군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동원예비군의 업무관리체계는 현역 복무를 마치면 병무청에서 예비군을 편성 및 자원관리하고, 군에서 전시 병력동원 소요를 제기하며, 병무청은 예비군 동원지정·동원소집 및 수송하여 군에 인계하고, 군은 동원예비군을 인수하여 작전 운용이나 훈련을 통제하는 절차를 이루어진다. 일부 외국 예비군의 경우는 현역 복무부터 예비군 복무 만료까지 군 계통에서 일원화하여 업무관리를 하고 있으나 우리는 병무청과 군으로 구분되어 동원예비군의 업무관리를 하는 것이다. 또한 현역 복무를 마치면 현역 복무기간 동안 축적된 주특기 등의 자료 일부는 병무청으로 전송되지만 훈련수준 등 자료는 전송되지 않아 예비군의 개인별 역량은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현역 복무기간 동안 축적된 전투기술 등의 각종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공유 및 활용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예비군 관리 절차(「예비군법 시행령」)



출처: 연구자 작성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역 복무를 마치면 병무청에서 예비군을 편성하여 관리하게 되고 병력동원으로 예비군이 군부대에 소집되면 현역에 준하는 신분으로 전환되어 군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볼 수 있다. 이는 현역과 예비군의 복무관리가 연결되지 않고 구분되어 관리됨으로써 현역 복무기간 경험의 장점을 활용한 병력동원



제도발전에 부분적으로 제한이 되며, 전시 동원은 물론 평시 동원훈련의 경우 동원지정이나 훈련소집 등의 업무수행 간 지속적인 기관 간의 협업 소요 발생 등 행정 소요가 증가하는 실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미래 가용 병역자원의 감소와 불확실성 증대

점점 빨라지는 한국의 '인구절벽 시계', 50년 뒤 한국 인구는 약 1,400만 명 수준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가 처음으로 사망률이 출생률을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상황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2070년에는 3,760만여 명 수준으로 현재 대비 약 27% 정도 줄어들고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중위층의 평균 연령은 43.7세에서 62.2세에 이르러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고령사회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출산율 하락'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한국의 총인구는 1949년 인구센서스 통계가 시작된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이 2019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측한 2029년보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8년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총인구 4,000만 명의 붕괴 시점에 대한 예측은 2070년 안팎이었으나 2066년으로 지속 당겨지고 있다.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인구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유엔은 한국의 2100년 인구를 3,800만 명(2017년 조사 기준)에서 올해 2,410만 명으로 40% 수준이나 낮췄다.

통계청은 10년 만에 10년 앞당겨진 인구 정점은 최근 한국의 총인구가 지난해 5,170만여 명으로 2020년 5,180만여 명에서 0.2%(9만여 명) 줄었다고 발표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순수 내국인도 45,000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미 지난해 발표된 장래인구추계에서 인구 정점을 2021년으로 공식 수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코로나19가 완화돼 외국인 유입이 정상화되더라도 내국인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 감소' 추세를 뒤집을 순 없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가장 최근의 추세가 반영된 지난해 추계인구에서 나타난 한국의 50년 뒤 인구구조는 충격 그 자체다. 2021년 정점을 찍은 총인구는 2070년 3,760만여 명으로 50년간 약 27%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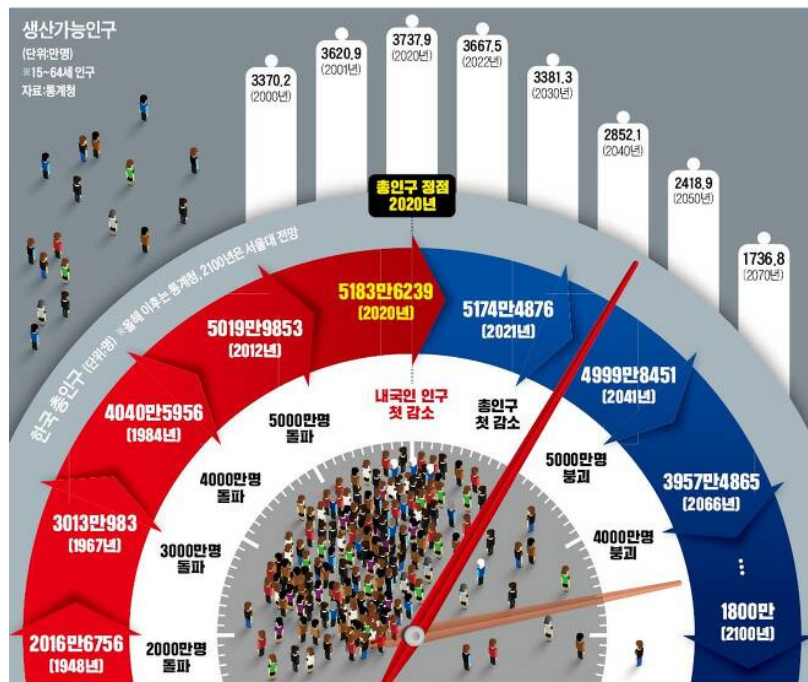
그런데 같은 기간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3,730만여 명에서 1,730만여 명으로 54%가량 줄어든다. 그만큼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고 심각하다는 것이다.

207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6.4%를 차지해 0~14세 유소년 인구(7.5%)의 6배를 넘어선다. 심지어 생산가능인구(46.1%)마저 넘어서며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100명으로 치솟는다. 2020년 노년 부양비(22명)의 5배에 달한다.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중위연령도 2020년 43.7세에서 2070년 62.2세로 높아진다. 2070년 합계 출산율이 1.21명으로 회복되고, 연평균 4만여 명의 순유입되는 것을 가정한 ‘중위 시나리오’를 따를 때의 결과다. 출산율이 2021년 수준(0.81명)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을 바꾸면 2070년 예상 총인구는 3,470만여 명으로 줄어든다. 출산율 반등에 실패하는 경우 지난해 부산 인구(340만여 명)와 맞먹는 인구가 사라지는 셈이다. 2100년이 되면 총인구는 2,530만여 명에 달한다. 100년 뒤인 2120년에는 2,090만여 명으로 겨우 2,0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역시 중위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다. 유엔은 2100년 한국의 인구를 2,410만여 명으로 전망했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 사망률이 기존 예상과 동일한 경우 2100년 인구는 1,800만여 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고령자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 2,000만여 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인구감소의 시계가 빨라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결혼인구의 감소가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1970년 여성 1명당 4.5명에 달했던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통계청이 발표하였다. 지난해 장래인구추계에 반영된 2020년 수치(0.84)보다 0.03명 줄었다. 2017년 장래인구추계 당시 합계 출산율(1.24)보다는 30% 넘게 하락했다. 0.81명의 출산율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저출산의 원인은 혼인 건수가 줄고, 혼인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1명만 낳는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와 관련 있다. 2016년 28만 1,600여 건에 달했던 혼인 건수는 2021년 19만 2,500여 건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까지만 수치를 살펴봐도 23만 9,100여 명으로 3년 만에 4만 명 이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5.5명에서 3.8명으로 줄었고, 20~30대 남녀의 혼인율은 2011년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림 6] 장기 추계인구 전망



출처: 한국경제, '점점 빨라지는 한국의 인구절벽시대' <https://www.hankyung.com/>
(검색일: 2022. 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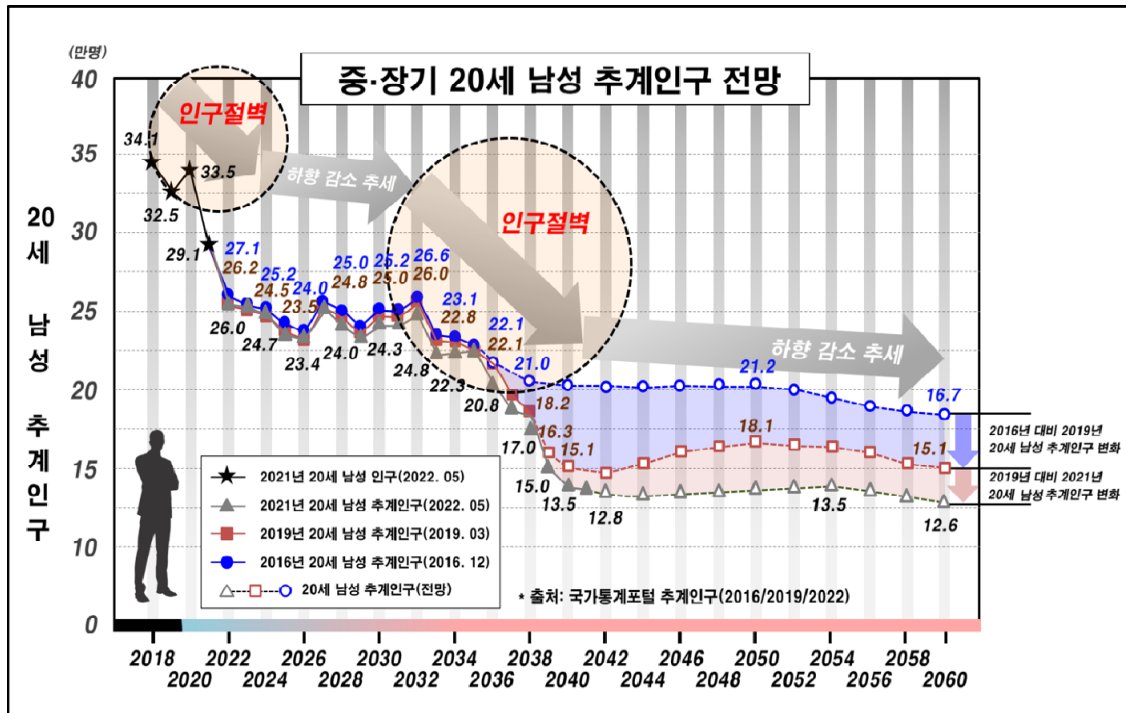
이러한 한국의 인구절벽과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인식의 절박함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뿐만 아니라 군 전투력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병력자원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군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의 수요를 충분하게 충원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력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파급되는 요인은 전반적인 군의 구조를 재편성하고 국방인력 구조를 재설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 전반에 걸쳐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감소 추세로 인해 미칠 영향과 문제는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게 되는 20세 남성의 중·장기 추계 인구를 산출하고 어느 정도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2016년과 2019년 그리고 2021년에 제시한 중·

장기 20세 남성 추계인구에 대한 전망을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아래의 [그림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3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되는 인구절벽은 그 추세적 변화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구변화의 규모와 추계 인구 전망치 또한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추계인구의 전망치는 2040~2050년대를 거쳐 2060년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약 16만여 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2~13만여 명 수준으로 약 3~4만 명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20세 남성 추계인구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군을 구성하는 상비병력 규모를 어떻게 재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중·장기 20세 남성 추계인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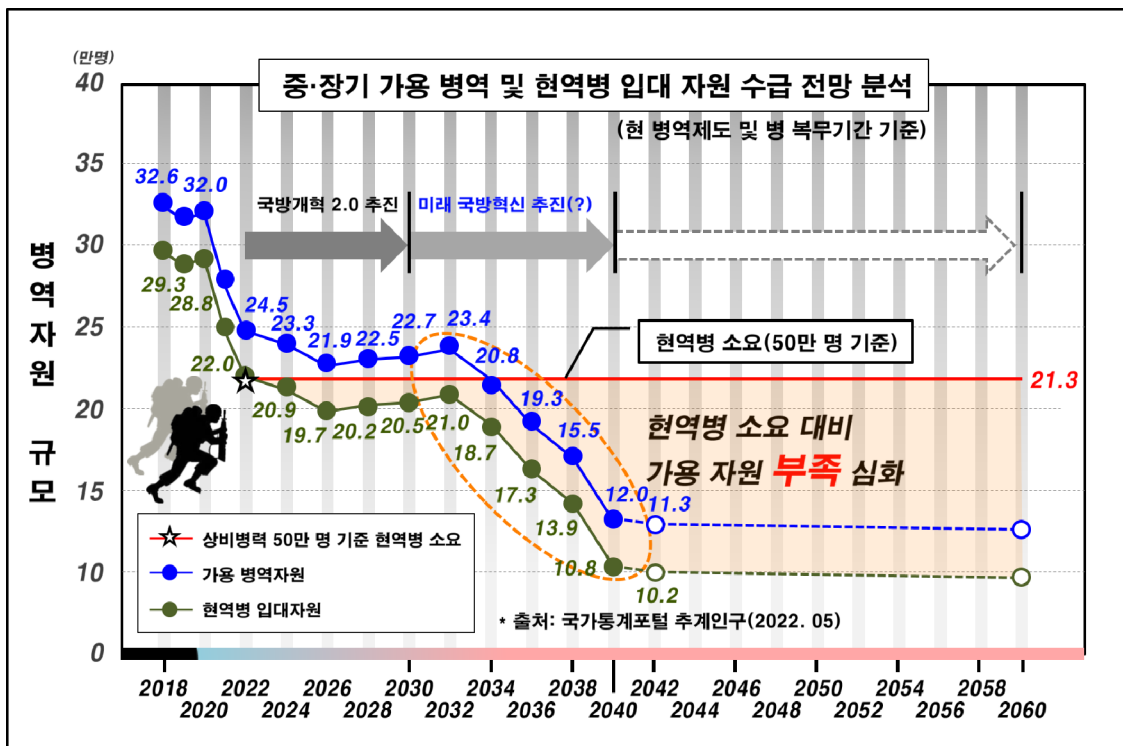
출처: 연구자 작성

산출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상비병력 규모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시한 산출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의 계획수립을 통해 체계적·과학적 검증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식별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개편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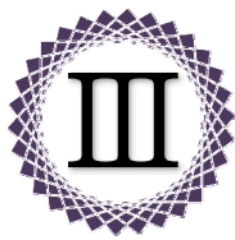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8]은 현 「국방개혁 2.0」의 목표연도인 2030년 이후 상비병력 규모 50만 명을 기준으로 202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중·장기 20세 남성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용 병역자원 및 현역병 입대자원에 대한 수급 전망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에 출생한 인구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는 2030년 중반 이후 급격한 인구감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2040년대 이후의 추계인구는 약 12~10만 명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2030년 중반 이후부터는 적정 상비병력을 재설정해야 하며, 이러한 가용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는 군의 전반적인 군구조 설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책과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8] 중·장기 가용 병역자원 및 현역병 입대자원 수급 전망



출처: 연구자 작성



병무청과 군의 예비군 소집업무 운영실태 분석

1. 병무청 자원관리 및 소집통지 절차 분석
2. 군 자원관리 및 훈련통지, 훈련과정 분석
3. 소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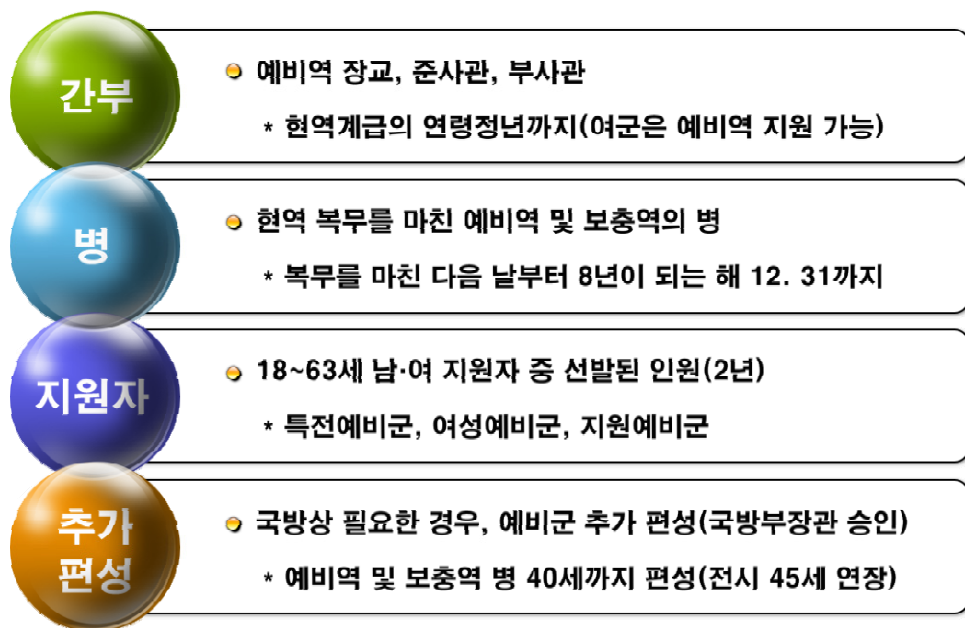
III 병무청과 군의 예비군 소집업무 운영실태 분석

1. 병무청의 자원관리 및 훈련 소집통지 절차 분석

가. 예비군자원관리 체계 분석

예비군 자원관리는 「예비군법」 제3조6)의 규정에 따라 예비군 편성 대상자들의 거주지 이동상황과 신상 변동사항을 파악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3조의2). 여기서 예비군자원은 예비역, 보충역 및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성된 자를 말하며 예비군 편성대상 및 기간은 아래의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예비군 편성대상



출처: 「예비군법」 제3조(예비군의 조직), 재정리

6) 「예비군법」 제3조(예비군 조직) ①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

1.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準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의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
3.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이하 생략)

예비군자원관리 절차는 먼저 예비군 대상 자원을 발췌하는 과정으로, 예비군 편성 대상자의 정보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산 자료를 획득한 다음 예비군을 지역 또는 직장 예비군부대에 신규 편성하게 되며, 예비군이 거주지역을 이동하거나(주민등록지 변경) 소속 예비군부대를 변경(지역 또는 직장부대 편입)하는 등 신상에 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추적하여 지속 관리하는 것이다.

예비군의 자원관리업무는 여러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관별 신뢰성이 있는 정보의 제공과 이를 적시적으로 처리하여 유사시 예비군의 병력 동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비군 자원관리는 병무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과업으로 관계기관이 병무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효율적인 예비군 자원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예비군자원관리의 기관별 책임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기관별 예비군자원관리 책임 분야

구 분	주요 책임 분야
병무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군자원관리 지침 수립·시달, 업무 지도감독 행안부에서 예비군 신상변동 자료 인수, 지방병무청별로 분류하여 자료생성 소속 부대(기관)에서 전역(소집해제) 인사명령서 송부받아 관할 지방병무청 송부
전역권부대(기관)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 부대(기관)에서 복무 마친 병역 관련 자료를 병무청장에게 송부
지방 병무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관리 세부지침 수립/시달, 직장예비군 편성/자원관리 업무 지도 감독 병무청에서 예비군 편성자료 전송받아 예비군 편성 병무청에서 신상변동자료와 직장 신상변동 자료 통보에 의거 예비군 관리 관할 지역(직장)예비군을 신분별, 연차별, 병과별, 연령별, 계급별, 특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필요한 현황 파악, 통계 유지
직장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및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파악하여 예비군을 편성하고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 편성사실을 통보 직장예비군 해체시 해체자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해체자의 명부를 관할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예비군 관련 서류 송부 직장예비군의 퇴직 등 사유로 직장예비군 편성 제외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성제외 사실 통보, 관련 서류를 신직장 또는 거주지 예비군 중대장에게 송부
예비군 지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산 예비군 편성카드를 관리하고 필요한 통계를 유지 예비군 편성카드에 의거 예비군 대원에게 개인별 보직 부여 예비군의 전출입 및 기타 신상 변동사항 정리



1) 자원관리 절차)

예비군 자원관리 절차는 먼저 예비군자원정보를 발취하여 신규 예비군 편성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며 신상 변동이 있는 예비군을 지속 관리하는 과정이다.

가) 자원의 발취

자원의 발취는 행정안전부의 전산 자료와 전역권 부대(기관)⁸⁾에서 통보하는 병역 자료 등에서 발취할 수 있으며, 직장 예비군부대는 편성대상별로 아래와 같이 자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직장예비군 부대 편성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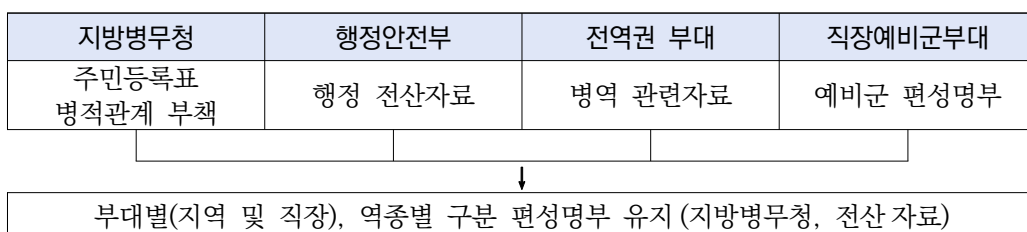
직장예비군 편성 대상	• 직장 명부, 인사기록표 및 병적확인서 등
대학예비군 편성 대상	• 편·입·복학 등록 시 예비군편성 기록자료

* 대학의 경우 학적보유자 자료 등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편성 누락 예방

나) 예비군 편성명부 작성

예비군 편성명부는 지방병무청의 주민등록표 및 병적관계 부책⁹⁾ 또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전산자료, 전역권 부대(복무기관)에서 통보하는 병역 관련 자료, 예비군부대가 편성된 직장에서 통보된 명부 등에서 발취한 예비군자원정보를 지역과 직장·역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지방병무청에서는 예비군 편성명부를 전산 자료로 관리할 수 있으며 기관별 편성명부 작성 절차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예비군 편성명부 작성 체계도



7)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840호, 2021. 11. 18.), 제 4 조(예비군 편성 등) 참조

8)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840호, 2021. 11. 18.), 제2조의 2, “전역권 부대”란 병역법 및 군 인사법에 의한 전역 인사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대를 말한다.

9) 2022 병무행정실무(V), 동원 및 병적관리, p. 197.

다) 예비군 편성 및 관리

예비군 편성은 신규 편성과 신상 변동자 편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신규 예비군 편성과 관련된 업무는 <표 5>와 같이 기관별로 처리하게 된다.¹⁰⁾

<표 5> 예비군 신규편성 절차

구 분	주요 내용
전역권 부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무만료자 전역 인사명령서(병적자료 포함) 전역 후 7일 내 병무청에 송부 * 예비군 편성 필수항목, 최신주소 등 기재 분기별 전역인사명령 송부현황 종합하여 병무청 통보 부대관리대상은 전역명령서에 표기하여 통보
병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군 편성을 위한 필수항목 전산입력 인사명령서 미송부, 기록착오/누락된 경우 복무기관에 조회
지방병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산자료를 통보받아 예비군 편성 주소착오자는 행안부 전산망 활용 추적 명단과 편성카드를 지역·직장예비군 부대에 일일 전송
예비군 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병무청 예비군 편성카드를 참고, 예비군 대원명부(학급편성명부)에 등록하고 보직 부여 및 관리

다음은 예비군의 신상 변동자에 대한 관리요령으로 기관별 업무처리 절차는 아래의 <표 6>과 같다.¹¹⁾

<표 6> 예비군 신상변동자 관리절차

구 분	주요 내용
병무청	① 행안부 행정전산망 연계 예비군 신상변동자료 추출, 지방병무청별로 일일 전송 ③ 신상 변동자료를 국방동원정보체계로 다음날 전송
지방병무청	② 신상 변동자료에 의거 예비군 전산자료 정리, 병무청 송부
예비군 지휘관	④ 전 거주(소속)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 편성정보를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신 거주(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자료 전송 *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되지 않는 자료는 우편, 팩스로 송부 ⑤ 신 거주(소속)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 보직 부여

10)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840호, 2021. 11. 18), 제 5 조(예비군 편성카드 작성·송부 등)

11)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840호, 2021. 11. 18), 제 7 조(신상변동자 처리) 참조



병무청장은 예비군의 거주지 이동 등에 따른 신상 변동자료를 주민전산망과 연계 추출하여 지방병무청별로 자료를 분류, 주 1회 이상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하여 예비군부대와 신상 변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거치고 있다.

라) 병무청의 예비군자원관리 특징 분석

병무청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는 기관별 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자료 송·수신과 체계를 연동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자료의 신뢰성과 업무처리 시간 단축 등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기관별 상이한 전산망 운용, 보안유지 등으로 업무처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아래의 <표 7>과 같은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표 7> 예비군 편성 간 주요 요인 분석

구분	주요 내용
체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인사정보체계와 병무행정체계 간의 체계 연동 • 예비군 편성카드 작성항목과 병적자료의 연계성 • 병무행정체계와 국방동원정보체계 간의 정보공유·연동
자료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 복무자료의 정확성 유지(실제 복무특기 반영 등) • 병 기본/주특기, 체력 등 훈련수준 관련 구체적인 자료 • 주요 훈련(FTX) 참여기록, 군 복무 중 포상실적 등 자료
활용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복무 적응상태, 면담기록, 특이사항 등 자료 • 예비군 복무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정보자료 반영 여부 • 현역 복무의 건제(같은 소대, 생활관) 관련 특이사항
운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력동원 소집대상자 부대 및 보직 부여 필요자료 • 지역 및 직장부대 예비군 보직 부여 필요자료 • 소집부대의 요구사항 충족 가능한 동원지정 및 관리 자료

병무청에서 예비군 편성 간 정보자료의 신뢰도와 활용성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역권 부대(복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역 시 복무자료를 온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비군을 신규 편성할 때 국방부와 협업하여 현역복무 시 각종 기록자료를 예비군 편성카드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병역자료(예비군 편성

카드 항목)의 공유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비군을 병력동원 지정이나 보직을 부여할 때 현역 시 복무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과 예비군부대 간의 예비군 자원관리 업무절차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병무행정체계와 국방동원정보체계 간의 체계 연동을 통해 상당 부분은 예비군 자료를 공유하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예비군 정보사항 수정이나 추가된 사항은 협업을 통해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따라서 병무청과 군(예비군부대 포함) 간의 예비군 편성업무에 대한 전산 연동체계 개선방안은 국방인사정보체계⇔국방동원정보체계⇔병무청 행정체계가 상호 동시 연동으로 정보자료를 공유하고, 실시간 업무처리를 가능하도록 정보체계 시스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병무청의 동원지정¹²⁾ 예비군 자원관리

예비군의 병력동원 지정은 지속 4단계(M+30일)까지 증·창설부대와 손실 보충 부대를 대상으로 평시에 동원지정한다.¹³⁾ 동원지정은 지방병무청장 책임하에 수임군부대장이 송부한 지역배정서와 소집부대장이 송부한 동원소요표에 의하여 전산으로 지정하며 지정된 소집명부는 관련 부대에 국방동원정보체계로 발송한다.¹⁴⁾

가) 동원지정자 관리

예비군의 동원지정 결과자료인 병력동원 소집명부는 관련부대에 전산으로 전송하며, 이 명부는 대외비에 준하여 다음년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고, 부분동원부대 지정자는 병력동원 소집명부의 비고란에 “부분동원대상”을 표기한다. 동원지정된 예비군의 세부 보직은 소집부대장이 전시 완편명부에 의거 부여하고 전시 인사명령서에 반영한다.

동원지정된 예비군에게는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사전에 교부하여 유사시(동원령 선포 시) 동원소집 준비를 한다.

12) 육군 동원 및 예비군업무(2013. 5. 10). pp. 2-7~8. 동원지정은 소집부대의 계급, 병과 및 특기별 동원소요에 맞도록 병력동원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수임군부대장이 작성한 지역 배정서와 소집부대에서 작성한 동원소요표 등을 기초로 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한다.

13)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병무청 훈령 제1662호, 2020. 1. 2) 제9조(동원지정의 범위) 참조

14) 동원지정은 수임군부대장이 작성한 “지역배정서”, 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한 “예비군부대별 세부지역배정서”, 각 군에서 송부한 “병력동원운영계획”, 소집부대장이 작성한 “동원소요표”를 기준으로 전산 지정한다.



- ① 전자송달(이메일, 모바일)
- ② 미열람자는 이메일 통지 안내문 발송(일반우편)
- ③ 전자송달 미동의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 ④ 반송자는 주소 확인 후 재발송
- ※ 직장예비군은 직장장에게 교부를 의뢰하되 직접교부 불가 시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에서 교부
- ※ 연말 지정이 해제된 자는 해제 사실을 우편엽서, 이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

병력동원 지정자 소집명부는 소집부대, 예비군부대, 지방병무청에서 각 1부씩 관리(전산관리 가능)하며, 기관별 동원지정자 관리책임¹⁵⁾은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기관별 동원지정자 관리 책임

구분	기관별 책임			
	자원관리대대	소집부대	예비군부대	병무청
동원자원/동원지정현황 유지	○	○	○	○
병력동원 소집자명부 관리		○		○
동원 편성 및 보직 부여		○		
전시 완편명부 작성 및 관리		○		
대체지정자 정리 및 관리		○		○
병력동원 소집통지서 교부 ¹⁶⁾				○

동원령 선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동원지정된 예비군의 신속한 동원을 위해 기관별 주기적인 홍보활동을 <표 9>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9> 기관별 주요 홍보활동

구분	X-1, 11~12월	1월	2~10월	11~12월
지방병무청	소집통지서 교부		문자/전자메일	소집통지서 교부
소집부대		지휘서신	지휘서신(2회, 동원훈련 전·후)	
비고	최초 동원지정자			다음연도 지정자

또한 전시 지방자치단체 병무 조직 신설에 따른 평시 임명된 병무담당의 교육 등 임무수행 능력배양 활동을 실시하며, 관련 규정은 다음의 <표 10>과 같다.

15) 동원 및 예비군업무(육군본부, 2013.), p. 2-9

16) 부분동원 대상 인원에게는 부분동원령 및 총동원령 선포 시 응소시간이 함께 명시된 소집통지서를 교부한다.

〈표 10〉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 신설(2014. 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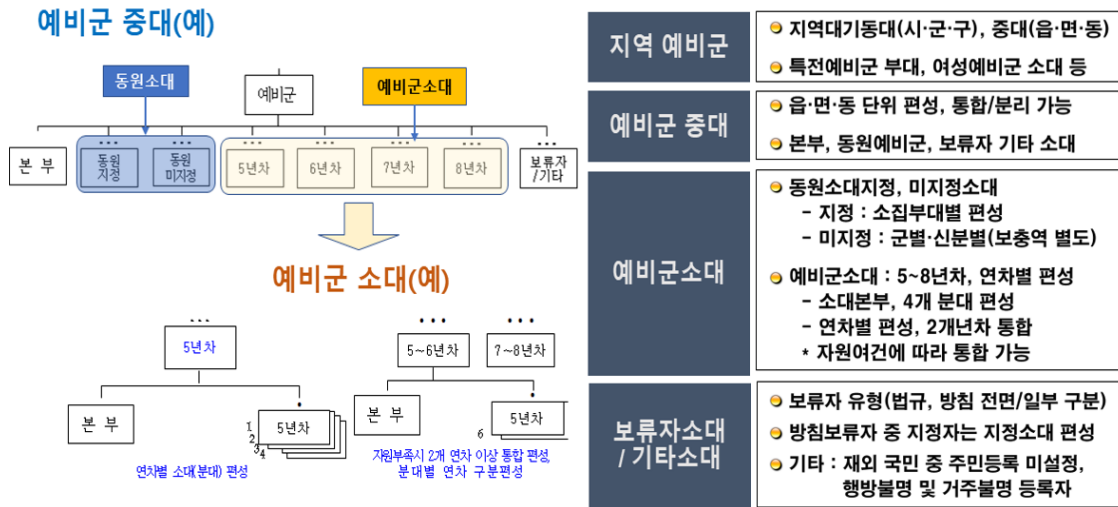
구분	세부 내용
제3항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는 병무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① 병력동원 소집,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부와 통지서 교부/교부 결과 통보 ② 병력동원 소집대상자 등에 대한 입영 독려 ③ 병력동원 소집 등 입영기피자 고발·색출 및 단속지원 ④ 병력동원에 다른 차량·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⑤ 그 밖의 병역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제5항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을 두되, 평시에 임명하여야 한다.
제6항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병무청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임명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하여 전시업무 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을 평시에 실시해야 한다.

나) 동원 미지정자 관리

동원 미지정자는 우발사태 및 지속단계 동원에 대비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방병무청은 미지정 자원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지역 예비군부대장은 국방동원정보체계로 관리하게 된다. 전시 긴급동원이나 추가 동원에 대비하여 예비군 추가편성자원을 포함한 예비군 가용자원을 군별, 연차별, 병과(특기)별 현황을 병무행정통계시스템으로 관리하며, 동원 미지정자 명단과 현황은 본청은 지방병무청별로, 지방병무청은 시·군·구별로 관리하며 지역 예비군부대는 읍·면·동별로 명단과 현황을 관리한다.

다음의 [그림 10]은 지역 예비군부대의 조직편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중 동원소대는 동원지정과 동원 미지정 소대로 구분하여 동원 미지정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0] 지역예비군 세부 편성현황(예)



다) 대체지정 및 추적관리

예비군의 주소지 변경이나 적소 특기 예비군 전입 등의 자원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월 2회 동원지정자에 대한 대체지정을 시행하며(단, 서울, 경기, 인천 등은 월 1회 실시), 대체지정은 가능한 유사 특기의 확산범위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라) 동원지정자 관리 분석

예비군 동원지정자 관리업무를 분석하면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동원지정된 일부 예비군의 정확한 전화번호 확인이 제한되어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 및 유사 시 입영독려 등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둘째, 예비군의 실제 생활근거지와 거소지 추적에 대한 문제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할 경우 대면 소집통지가 제한될 수 있다. 셋째, 등기우편 통지가 반송될 경우 직접 통지서 전달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서신전달이 국가 독점(우편법 제2조)으로 제 3자를 활용한 교부가 제한되어 병무청에서 직접 대면교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병무청은 통지서 전달 인력 및 행정 소요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통지서의 대면교부를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와 협조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나. 병력 동원훈련 소집통지 절차 분석

병력동원 훈련소집이란(이하 “훈련소집”이라 한다) 「병역법」¹⁷⁾에 의하여 병력동원 소집대상자 중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전시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집행 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동원령 선포 시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동원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훈련소집의 중점은 첫째, 병력동원 소집대상자에게 부대 위치와 행동 절차 및 임무를 정확히 주지시키고, 둘째, 병력동원 임영확인관에게 훈련소집의 집행 절차를 평시에 숙지시켜 전시 집행능력을 배양시키며, 셋째, 평시 병력동원 집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시 협조기관 간 기능별 임무를 숙지시키고, 넷째, 평시 훈련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안을 강구하고 전시계획을 보완 발전시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병력동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행하는 훈련이다.

1) 훈련소집 대상

훈련소집 대상은 동원단계 중 긴급단계(M~M+6) 및 지속 4단계(~M+30)에 증·창설되는 부대의 동원지정 대상자 중에 전역한 장교·준(부)사관은 1~6년차까지, 전역한 병사는 1~4년차까지 이며, 연기 및 기피자 등 동원훈련 불참자는 부대 여건에 따라 다시 재소집하여 훈련할(재입영 훈련) 수 있다.

2) 훈련소집 형태 및 방법

훈련소집 형태는 계획 소집훈련과 불시 소집훈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먼저 계획 소집훈련은 소집일시, 부대, 인원, 집결지 등을 소집대상자에게 소집 7일 전까지 훈련소집통지서를 발급, 교부하는 형태로 사전 계획된 병력동원 소집훈련을 말한다. 불시 소집훈련은 소집일시, 부대 등을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훈련소집통지서를 발급, 소집 전일까지 교부하는 형태로 불시 병력동원 소집훈련을 말한다.

소집 방법은 훈련실시 단위인 대대급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통제 및 훈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시 단위는 조정할 수 있다. 병력동원 소집훈련은 해당 부대에서 현역에 복무하는 인원과 전시 전환요원 및 소집 대상자(예비군)를 통합하여 훈련을 시행한다.

17) 「병역법」 제49·50조(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 등, 병력동원 훈련소집)

참고로 연간 동원훈련소집계획서는 병무청체계와 국방동원정보체계 간에 상호 연동하여 업무관리는 제한되고 있다. 기관별 훈련계획자료를 접수받아 작성하는 수작업 방식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업무관리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훈련소집계획작성도 병력동원계획 작성과 유사한 방법으로 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업무관리가 가능하도록 병무청과 국방부 간의 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요구된다.

4) 훈련소집 통지 및 집행

훈련소집통지 대상은 동원지정자 중 훈련대상자 전원으로 하되, 전출이나 기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소집통지를 제외할 수 있다.

〈표 11〉 훈련소집 통지 제외 대상자

- 「예비군법」에 의한 법규 및 방침 보류자
- 등록금 영수증에 의하여 입학(예정) 또는 복학신청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경찰교육기관, 사관학교 재학으로 훈련보류처리 대기 중인 사람
- 장교, 부사관 등 재복무 시험에 합격하여 입영 대기 중인 사람
- 주민등록 말소자(거주불명 등록자 포함) 및 실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사람
- 입영통지일 현재 출국 중인 것으로 확인된 사람
- 통지일 현재 전출자 통지취소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병무청장은 훈련통지 협조를 위해 훈련소집통지 명부 2부를 출력하여 1부는 소집부대장에게 송부하여 지휘서신 발송 및 집행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1부는 집행결과 정리에 활용한다. 소집부대장은 훈련소집 전 소집대상 예비군에게 지휘서신을 발송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표 12〉와 같다.

〈표 12〉 지휘서신의 주요 포함사항

- 훈련소집 일자, 입영 시 유의사항, 교통편, 소집부대 위치, 소요 시간 등
- 입영시간 이후 지연 도착자, 복장 불량, 음주자는 인수 거부되어 기피자로 고발되며 차후 동미참훈련 등 불이익 사례 강조
- * 당일 입영 소요시간 불인정 및 동미참훈련 실시
- * 허리띠, 모자 등 경미한 복장 불량자에 대해서는 훈련장 내 간이 판매소를 운영 현지 시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 송달은 E-mail과 모바일앱으로 발송하는데, 수신 미동의자는 입영일자 40일 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수신 동의자는 입영일자 45일전 E-mail과 모바일앱으로 전송하며 5일 이내 미열람자는 마찬가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40일 전까지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 대상자(재입영포함) 전산자료를 병무청(본청) 전자우편센터에 전송하여 전자우편처리센터에서 통지서를 자동처리 및 발송되도록 하며, 이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훈련소집통지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직장 예비군의 경우는 지방병무청에서 전산으로 출력하여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소집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할 수 있으며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지 않는 직장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우편교부 결과 수취인 없음,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는 주민전산망 등으로 주소지를 재확인하여 처리하며,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면교부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주소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방문교부하도록 해야 하고 입영 7일 전까지 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사람은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¹⁹⁾

가) 병무청 모바일앱을 활용한 통지

병무청은 2019년도에 모바일앱을 재구축하여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에 활용하고 있으며 서비스 구축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 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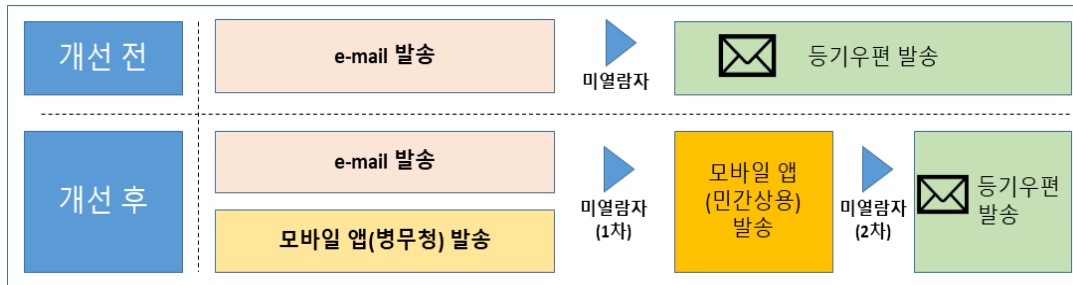
<표 13> 병무청 모바일앱 서비스 구축현황(총 86종)

개인형서비스(27종)	안내·공지(22종)	민원처리(34종)	부가서비스(3종)
입영일자 조회 간이 병적조회 통합병역 일정조회 주문형서비스 등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병역이행 일반안내 대국민 의견게시판 직원연락처 검색 등	각종 민원신청 민원결과 조회	훈련소 네비게이션 입영부대 날씨정보 모바일 할인쿠폰 검사장 360°영상 등

병무청의 모바일 통지서 발송 절차는 [그림 12]와 같이 개선하였다.

19) 이사(이사불명)의 경우 귀책이 있는 사람은 병역법 제84조에 이거 고발하고 귀책사유가 없다면 직권 연기한다. 수취인 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은 직권 연기 처리하되 상담과정에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사람은 행불 연기 후 병역법 제84조에 의거 고발한다. 수취 거절의 경우는 병역법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에 따라 고발한다.

[그림 12] 병무청 모바일 통지서 발송 절차 개선(2019년)



- 모바일앱 통지서 수신 동의자에게 1차로 병무청 앱을 통한 통지서 발송
 - 1차 병무청앱으로 발송한 통지서 미확인자에게 2차로 카카오톡 알림톡 이용 통지서 발송
 - 2차로 발송한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한 통지서 미확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서 발송
- ※ 2018년 12월 병무청 앱 구축 완료 후 2019년부터 완성된 체계로 발송

모바일 소집통지서 발송절차 개선 결과를 분석하면 먼저, 통지서 수신율 향상을 위해 병무청 모바일 앱 이외에 민간 상용모바일앱(카카오 등)이 추가되었으며, 다음은 발송 비용이 무료인 전자통지서(e-mail, 모바일앱)를 사용자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동시 발송이 가능하고 또한 모바일 통지서 취약점 보완을 위해 주요 병역 일정 도래 시 카카오톡 알림톡과 같은 Push 기능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알림기능 추가 및 통지서 자동저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모바일 통지서의 송달효력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데 모바일 통지서 미열람자에 대한 등기우편 송달기일(입영일 30일 전)을 감안하여 모바일 통지서 열람 유효기간을 5일 이내로 설정하였으며(모바일 병무청 앱 통지서 5일, 상용모바일앱 통지서 2일) 전자우편과 모바일 병무청 앱 통지서 동시 발송 후 먼저 확인한 통지서에 대해서만 송달 인정하고 있다.

모바일 통지서 발송에 따른 관련 법령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소집통지 여건을 개선하였다.

- 「병역법」 개정(2018. 5. 29. 시행)

제6조(병역의무부와 통지서의 송달)_2018.5.29. 시행

- ④ 전자송달은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같음 (개정 전) 전자우편주소 → (개정 후) 대통령령으로 전자송달 수단을 정함
- ⑦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달



- 「병역법시행령」 개정(2018. 5. 29. 시행)

제3조의2(병역의무부과 통지서)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

2.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한 송달

그리고 모바일 통지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강구를 위해 통지서 발송 시 개인정보유출 방지하기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지서 화면을 표출하고, 민간에 사용하는 상용과 연계의 경우에는 연결 정보만 제공(통지서는 암호화하여 병무청에서 관리)하며, 전자통지서 파일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 솔루션을 도입하여 전자통지서의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통지서 내용(입영일자 등) 임의 수정 방지를 위한 위·변조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나) 신상변동자 및 동미참훈련 이수자 등의 처리

거주지 이동자 처리는 전출 형태와 관계없이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처리하며 타도와 자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타도 전출자는 원칙적으로 통지를 취소하며 자도 전출자는 당초 일정에 입영조치한다. 권역화 동원지정을 하지 않는 부대는 관할 지방병무청을 기준으로 하되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와 경계를 같이하는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자도 전출과 같이 처리한다. 권역화 동원지정 부대의 경우는 소집부대별 확산범위 지역 내 전출자는 처음 계획대로 입영조치하고 범위 이외 지역으로 전출자는 원칙적으로 통지 취소한다.

동미참훈련 등 훈련 일부 이수자 처리는 교육훈련 8시간 이상 이수자는 통지를 취소하는데 이는 동원훈련 간 조기 퇴소 등으로 훈련 분위기 저하 및 귀가차량 확보 제한 등 소집부대 부담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8시간 미만 이수자는 정상적으로 입영조치하며 동미참훈련 이수한 시간만큼 동원훈련 시간에서 감해준다.

다) 훈련소집통지 취소자 감소대책

훈련소집통지 취소자²⁰⁾에 대한 감소대책을 위해 대학생 복학 신청(예정)자 통지 제외는 훈련일에 학기가 포함되면 가능하며, 입영 20일 전까지 복학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추가 통지가 가능하다. 9월에 복학 예정자는 복학 사실확인서 또는 등록금 영수

20) 동원훈련 소집통지 취소현황(2019년, 00지방병무청): 최초 훈련통지자 중 6.3%

구분	계	동미이수	출국	학생	전출	처분변경	법규보류	방침보류	기타
비율	100	7.2	30.8	14.2	12.3	1.3	2.5	31.1	0.6

증 사본으로 처리하므로 복학 예정자에 대한 소집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학생에 비군의 신상이동(편·입학, 휴학, 제적, 졸업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대학예비군 부대와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대학에 예비군부대가 없는 대학은 대학홈페이지에 보류신고 등을 안내하고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법규 및 방침보류자, 동미참훈련시간 등은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하여 신속하게 전송토록 협조하고 보류자의 신상변동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동원미지정자의 동미참훈련 순기 조정은 지방병무청에서 수임군부대 또는 지역방위사단과 협조하여 훈련시기를 7월 이후로 조정토록 하며 동미참훈련 이수 사유로 통지가 취소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이후부터는 훈련소집부대 별 동미참훈련 이수자를 확인하여 8시간 이상 훈련이수자는 훈련통지를 제외하도록 한다. 특히 예비군 중대는 동미참훈련 실시 전에 동원훈련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상호 확인 후 훈련을 실시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다수의 동원훈련 연기자 발생²¹⁾은 민원발생 예방 등의 목적으로 연기 사유를 완화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훈련소집 연기자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규제와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라) 훈련소집통지 절차 제한사항 분석

예비군의 주소 불명확으로 등기우편 반송 시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무청의 행정업무와 민원 소요가 증가될 수 있으며 특히, 통지서 미교부자는 재통지 또는 고발 등의 부가적인 행정처리 소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앱, 등기우편 교부 제한자에 대한 직접 전달 제도와 행정처리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대면 교부 시 병무청의 행정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예비군부대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동미참훈련과 동원훈련 대상은 동일한 동원예비군의 소집통지 업무처리 기관이 병무청과 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동미참훈련 시행으로 동원훈련 소집통지를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에서 수임군부대와 동미참훈련 순기를 협조하고, 예비군 중대는 동원훈련 시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협업의 문제가 있다.

21) 동원훈련 연기자 현황(2019년. 00지방병무청), 최종 통지기준 27.5% 연기자 발생

구분	계	질병	시험	업무	출국	수업	결혼	행불	미교부	기타
비율	100	18.7	29.0	36.4	0.6	3.7	0.2	0.3	5.9	5.2



이는 업무 이원화로 발생하는 문제이며 동미참훈련 대상이 과다한 수임군부대의 경우는 훈련 시기를 후반기로 과도하게 미룰 수 없으므로 협조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훈련 소집통지 기관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2. 군(軍)의 자원관리, 훈련소집통지, 훈련과정 분석

가. 예비군자원관리 체계 분석

군(軍)에서 예비군자원관리는 국방부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여 자원관리를 하고 있으며, 업무처리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예비군 부대와 자원관리 부대 간 전산으로 시행하고 있다. 예비군 자원관리의 출발은 병무청에서 작성한 예비군 편성카드를 국방동원정보체제로 전송하면, 예비군부대에서는 해당 예비군에 대한 보직 및 직책 부여 등 세부 편성을 하고 병무청과 관련 정보자료를 지속 공유하면서 자원관리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1) 예비군 보류자²²⁾ 관리체계

가) 보류제도 개요

예비군 보류자는 「예비군법」과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비군 보류자훈련은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서 대상별로 보류시간 등을 정하고 있고 주요 보류 직종은 아래의 <표 14>와 같다.

<표 14> 보류 직종(「예비군법」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군법」(5조) : 국회의원, 외국여행/체류, 국외 왕래 선박/항공기 운항자 • 「예비군법 시행령」(13조)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교도/소방, 군무원, 외국군 종업원, 항로표지, 항공정비, 해안무선, 민방위대장 등 • 예비군법 시행규칙(17조) : 주한미군 고용원, 철도/자하철 종사자, 외신공무원 등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보류(「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23조) : 우편집배원, 41세 이상 간부, 청와대, 정보사, 유공자, 동원업체, 세관, 청원경찰, 구속자, 기초수급자, 심신장애, 여군예비군(임신) 등 • 일부보류(「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23조) : 교사, 교수, 학생, 직업훈련 교사/학생, 광부, 특수경비원, 민방공 경보요원, 판·검사, 국정원 등

22) "보류"란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정의). 5항. <개정 2019. 09. 24.>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는 예비군훈련 보류 개념과 기간, 신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에도 적용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보류 대상자가 학생예비군²³⁾이며 이들의 동원훈련 보류는 병무청의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방부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비군훈련 보류제도는 아래의 <표 15>와 같다.

<표 15> 예비군훈련 보류제도(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보류 제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 훈련 보류된 자는 보류훈련 시간 이수 처리 (단, 훈련 일부 보류의 경우 해당년도 이수훈련 별도 정함) 보류 기간: 보류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류 사유가 해소된 때까지 보류제도 적용: 「예비군법」에 의한 동원 및 재난 동원, 예비군훈련 소집에 한해 적용 보류 신고: 훈련보류 희망의 경우 보류 신고하고, 보류가 해소된 때 해소 신고(의무) 지휘관 직권보류 가능: 41세 이상 예비역 장교·준(부)사관, 국외 출국자, 구속 수감자, 기타 사유 명백한 자
훈련 보류 기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출국~귀국일), 귀국일 14일 내 합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련 북한에 상주 체류 근무자: 180일 이상 체류자 질병 및 심신장애의 사유로 그 치료 기간이 180일 이상인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방침일부 보류자: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기간이 연간 180일 이상인 경우 각급학교 학생/기간제 교사: 재학기간 1개 학기 이상(180일 이상), 1학기(3. 1~8. 31), 2학기(9. 1~2월말)
보류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원/훈련보류 신고: 보류원서/관련 서류 소속 예비군지휘관 직접 제출, FAX 또는 인터넷 등 소속기관(학교)장 발행 재직(재학)증명서, 병무청 전송된 출·귀국명부, 각급학교 학적 보유자료로 처리 보류조치(승인) 여부 결정: 예비군지휘관(예비군에게 통보, 국방동원정보체계 입력)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 해소: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인터넷/FAX 등 신고 유선 등 기타방법 보류 해소 사실 통보: 30일 이내 해소신고서 제출, 귀국자: 14일 이내 보류 해소 예비군지휘관 행정처리: 보류 해소 사유 발생 14일 이내 국방동원정보체계 입력

23) 학생예비군 보류제도 변천 과정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971. 01.	학생 예비군훈련 면제	향군법 시행규칙
1971. 10.	군사교육 및 교련 대상 학생예비군훈련 면제	
1975. 09.	학생예비군 방침 일부 보류 - 교련을 받는 경우 예비군훈련 면제 - 교련을 받지 않는 경우 연간 16시간 훈련실시	일반예비군 연 84시간 훈련
1989. 03.	교련 폐지, 방침보류 대상, 연간 16시간 훈련	국방부 방침
2000. 03.	예비군훈련 시간 8시간으로 축소	국방부 방침

대학 진학률이 1971년 10%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70% 이상 증가하여 학습권 보장이라는 이유로 예비군훈련의 일부 보류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대학생예비군이 50만여 명으로 전체 예비군의 20%에 해당하고 이들은 대부분 전역 4년차 이내 우수지원으로 훈련보류와 동원지정에 제한을 두는 것이 동원태세 유지에 문제가 있다. 대학생의 방침보류가 일반예비군의 생업권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전시 동원예비군 부족의 문제, 대학 진학률의 증가 등 변화된 시대적 환경에 맞지 않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부합되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예비군훈련 보류자는 예비군 총자원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국방부, 국방동원정보체계)으로 보류자 현황은 아래의 <표 16>과 같다.

<표 16> 보류자 현황(2021년 기준 평균값으로 정리)

총자원	보류자(계)	법규보류	방침보류		
			소계	학생	일반
275만여 명	68만여 명(25%)	6만여 명	62만여 명	51만여 명(19%)	11만여 명

앞에서 제시한 보류자 중 학생예비군의 경우 방침 일부 보류자에 해당되어 연간 8시간만 예비군훈련을 부과함으로써 일반예비군과 훈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생예비군은 대부분이 정예자원(전역 후 4년차 이내)이며 병력동원 대상으로 동원훈련 충원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예비군 보류자의 편성카드 정리는 보류대상 예비군이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보류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예비군 지휘관이 보류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보류가 결정되면 예비군에게 통보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하면 예비군 편성카드에 자동으로 처리되어 병무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보류자 관리 및 운영체계 분석

예비군훈련 보류제도는 예비군훈련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일반예비군과의 형평성의 문제와 동원훈련 가용자원 부족 등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예비군 보류인원 과다로 동원예비군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일반예비군은 2박 3일 동원훈련을 실시하는데 비해 학생예비군의 경우 8시간만 훈련을 함으로써 일반예비군의 생업권 보장과 학생예비군의 학습권 보장 간의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일반예비군과 학생예비군(방침보류)의 동원훈련 참가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예비군의 동원지정 가용자원이 부족할 경우 학생예비군까지 불가피하게 동원지정(10만여 명)을 하고 있지만 학생예비군은 동원훈련에 불참함으로써 동원훈련 참가 비율이 평균 75% 수준이며, 이는 전시 완전편성에 의한 동원훈련이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예비군을 포함하여 예비군훈련 보류자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병역자원 감소와 더불어 동원훈련소집에도 많은 문제가 예상될 수 있다.

〈표 17〉 예비군(4년차 이내)의 예비군훈련 참가 현황(국방부, 2019년 기준)

계	동원지정 예비군			동원 미지정 예비군		
	소계	일반	학생	소계	일반	학생
133만 명	90만 명	80만 명	10만 명	43만 명	4만 명	39만 명

↓

동원훈련 참가	동원훈련 불참(동미참 훈련)
68만 명(75%)	12만 명(25%, 학생포함)

2) 훈련소집통지 절차 분석

가)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제도

군(軍)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²⁴⁾은 「예비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병무청 관할)를 제외한 모든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방법은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와 유사하지만 그 절차는 일부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1·2차 훈련 소집통지까지는 훈련소집의 권유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예비군이 무단불참해도 고발하지 않으며 3차 훈련소집 참가 기회를 부여하고, 3차 소집통지부터는 무단불참하는 경우 때 소집통지마다 고발을 하는 절차를 적용하는데 이는 병무청의 동원훈련 소집통지와 큰 차이가 있다.

24) 「예비군법」 제6조의 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 ①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16조(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 ③ 수임군부대장은 법 제6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 2 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고 한다.)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 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⑤ 예비군대원이 제4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이 공시한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훈련소집일 12일(훈련소집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 본인이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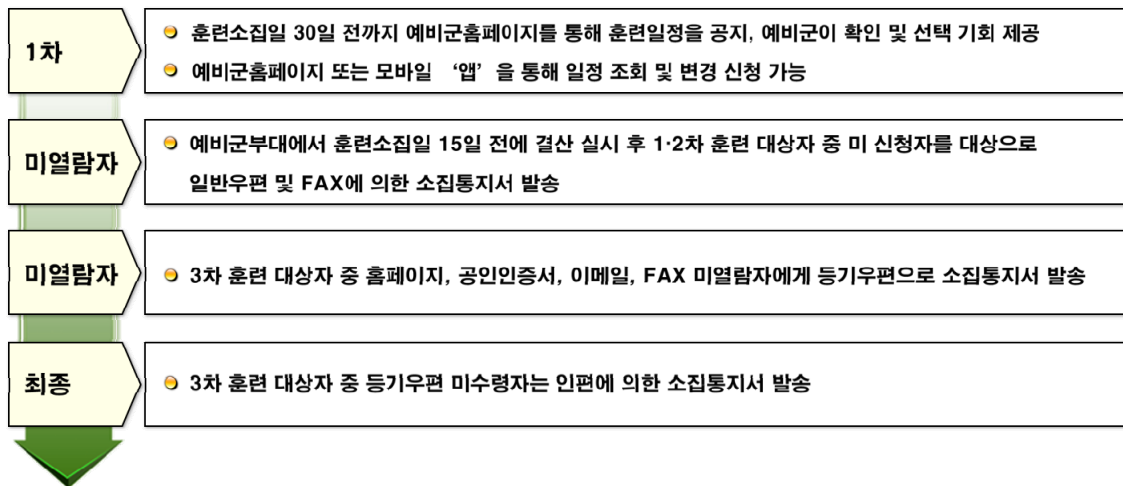


〈표 18〉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방법

1차 및 2차 훈련소집 통지	3차 훈련소집 통지
예비군홈페이지(모바일앱), 공인전자주소, 이메일, 일반우편(창봉투), FAX	예비군홈페이지(모바일앱), 공인전자주소, FAX, 인편, 등기우편

훈련소집 통지서 발송체계는 인터넷과 모바일앱, 우편(등기우편 포함) 등을 활용하여 아래의 〈표 19〉와 같이 단계별로 소집통지를 시행하고 있다.

〈표 19〉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발송체계



훈련소집 통지서는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예비군이 확인하여 출력이 가능하고(정부 민원포털 「정부24」에서도 발급 가능)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활용한 소집통지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모바일앱은 2021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병무청의 모델과 유사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림 13] 예비군홈페이지 훈련 소집통지서 확인/출력



국방동원정보체계는 외부 정보체계와 연동하여 업무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대내 연동은 국방인사정보체계와 부대코드관리체계, 국방정원관리체계 등이 있고 대외연동은 예비군 편성, 훈련소집 등 병무청과 연동하고 있으며 추가로 행정안전부의 비상대비자원관리체계와도 물자동원업무 관련 일부 자료가 연동되어 아래의 [그림 14]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14] 국방동원정보체계 업무 연동시스템 구축도





나) 훈련 소집통지 절차 분석

군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체계를 인터넷 활용한 통지제도 구축 등 지속 보완 발전시켜왔지만, 소집통지 차수를 완화하여 적용함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예비군이 무단불참해도 2회까지는(1·2차 훈련) 고발이 되지 않고, 3차 훈련소집 간 등기우편이나 대면교부 이후에 무단불참자를 고발할 수 있으므로 일부 예비군은 그때까지 예비군훈련을 불참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으로 소집통지 행정 소요가 증가하고 특히, 우편 발송량이 과다하여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메일 또는 예비군홈페이지로 훈련소집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은 예비군에게 발송하는 연간 일반우편이 평균 257만 여 통에 달하고 3차 훈련 소집통지로 발송하는 등기우편도 58만여 통에 이르며 이는 전체 훈련대상의 90%에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소요와 우편발송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으며 그 현황은 <표 20>과 같다.

<표 20>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우편발송 비용 추계(2019, 육본 내부자료)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억 원)	21.2	20.5	17.9
등기우편(단가: 1,960원)	13	12	9.1
일반우편(단가: 330원)	8.2	8.5	8.8

다음은 등기우편 미수령 등으로 소집통지가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인편에 의한 대면 교부를 예비군 중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적 소요의 증가뿐만 아니라 예비군과 통지서 피 전달자 간의 마찰요인이 발생하는 등 업무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편에 의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은 훈련 차수 및 예비군자원수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 1~4% 정도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10% 이상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표 21>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인편통지 현황(2018. 3월 기준)

구분	한강로동대	한남동대	창3동대	수색동대
대상(명)	600	1,100	1,100	612
인편통지(명)	80(13.8%)	200(18.2%)	100(9%)	50(8%)

출처: 육군 동원참모부, “모바일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구축 및 모바일앱을 통한 예비군훈련관리 체계 개발 선행연구”, 육군본부(2019), p. 14.

인편에 의한 통지서 직접 전달은 예비군 중대 행정병이 주로 이른 아침 또는 야간, 휴무일에 실시하고 있어 담당 병사의 업무시간 증가와 휴식시간 침해뿐만 아니라, 전달과정에서 예비군의 불만 등으로 인한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인권의 문제로 까지 대두되는 경향이 있으며, 더욱이 종이로 발행된 소집통지서는 전달과정에서 분실 또는 훼손 우려 등 추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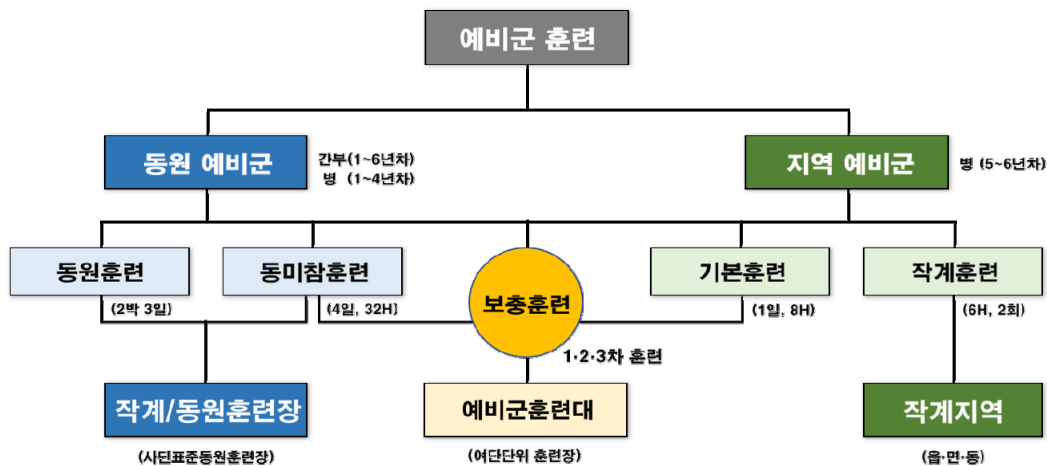
동미참훈련 소집통지는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동원훈련 대상과 동일한 동원예비군의 신분임에도 동원훈련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훈련소집 불참자에 대한 법적제재도 차이가 있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훈련 무단불참자의 고발처리 시기는 통지서 전달 횟수 면에서 동원훈련과 다르며(3차 훈련통지부터 고발), 불참자 고발에 대한 적용법규가 「예비군법」이며 「병역법」에 의해 처벌되는 동원훈련 불참자보다 양형 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동미참훈련 대상자와 동원훈련 대상자의 훈련소집 통지 방법과 적용하는 법규를 일원화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나. 예비군훈련과정 분석

1) 훈련유형 및 시간

예비군훈련은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근거하여 연간단위 훈련을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예비군훈련 유형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5] 예비군훈련 유형 구분과 예비군훈련 체계



출처: 연구자 작성



예비군훈련 유형별 훈련 시간은 아래의 <표 22>와 같으며, 예비시간은 예비군법에 근거하여 연간 20일(160시간)을 기준으로 총 훈련 시간에서 해당 시간을 제외한 잔여 시간을 예비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다.²⁵⁾ 예비군훈련의 연간 법정기간이 「병역법」은 30일, 「예비군법」은 20일로 규정하고 있어 상이하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시 예비군훈련에 대한 세부 규정은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적용하여 연간 20일을 반영하고 있으며, 「병역법」의 연간 훈련기간(30일)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²⁶⁾

<표 22> 예비군훈련 대상 및 시간 현황

구분			계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예비시간
신규 전역자(간부/병)			160 시간					160시간
병	1~4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시간
		동원미지정자			4일 (32시간) 또는 2박3일			128시간 (132시간)
	5~6 년차	동원미지정자				8시간	12시간 (6Hx2)	140시간
	7~8년차			미이수 훈련				160시간
간 부	1~6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시간
		동원미지정자			2박3일			132시간
	7년차~연령정년			미이수 훈련				160시간

출처: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2022)

2) 훈련관리 체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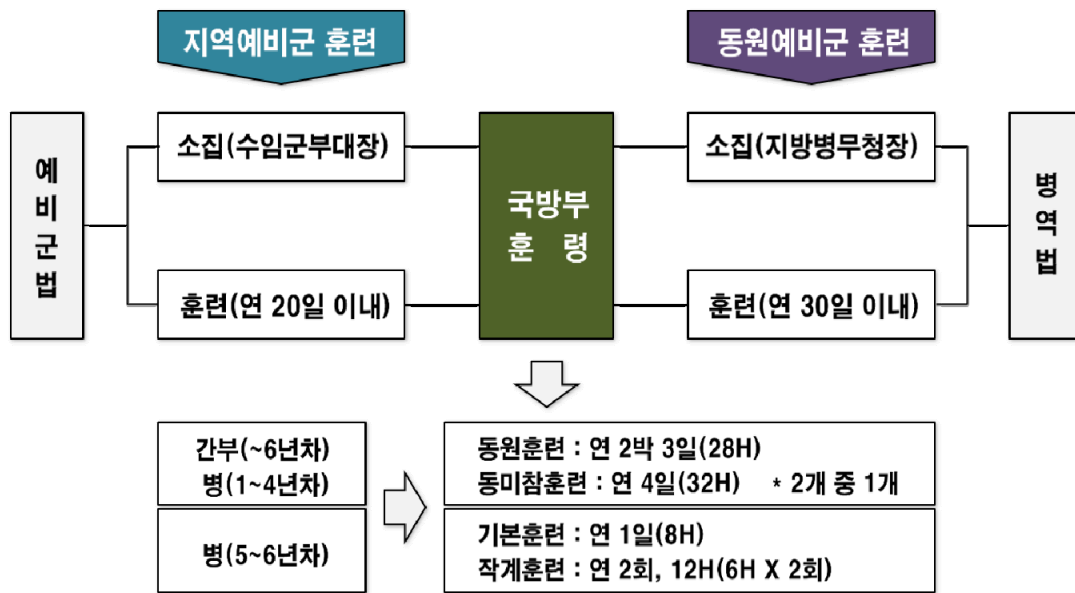
예비군훈련은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의해 지역예비군훈련과 동원예비

25)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훈련대상 및 시간)

26) 「예비군법」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30> 병역법 제49조(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 등) ①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병력동원 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 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 19>

군훈련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예비군훈련의 유형에 따라 예비군훈련 소집기관 및 방법에 차이가 있다. 먼저 지역예비군훈련의 소집은 군부대(예비군부대 포함)에서 주관하며, 동원예비군훈련 중 동원훈련은 병무청에서 소집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이 두 종류의 예비군훈련관리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6] 예비군훈련 관리체계



출처: 연구자 작성

3) 훈련과정 제한사항 분석

예비군훈련 유형에 따라 소집기관과 훈련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동원훈련은 병무청에서 소집하고 군(소집부대)은 소집한 예비군을 인수하여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예비군훈련 소집기관과 시행기관이 구분되어 훈련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훈련유형별 훈련소집을 규정하는 법령이 상이하여 발생된 것으로 동원훈련소집은 「병역법」을, 기타 예비군훈련은 「예비군법」을 적용하여 소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비군법」에서는 예비군훈련의 유형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예비군훈련에 대한 소집 규정만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원훈련소집만 「병역법」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모든 예비군훈련은 「예비군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동원예비군의 경우 동원지정된 예비군은 동원훈련 대상이 되므로 「병역법」을 적용하여 병무청에서 소집통지하고, 동원미지정된 예비군이나 동원훈련 불참으로 동미참훈련은 「예비군법」을 적용하여 군에서 소집통지를 하고 있다. 동일 동원예비군의 신분이지만 동원지정 여부에 따라 훈련 소집규정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동일신분에 상이한 규정을 적용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군에서 예비군훈련에 관한 체계와 절차는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근거로 각 군과 예하부대는 제대별 예비군훈련 규정을 정하여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훈련기간은 법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의 규정에 따라 훈련유형별로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병역법」에는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동원훈련 시행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 조항은 없다. 이는 「병역법」의 규정 범위가 예비군 훈련소집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역법」에 “연간 30일 이내 훈련소집”을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훈련 일정에 대한 세부조항이 없으며,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는 「예비군법」의 연간 훈련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30일 훈련기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비군법」에 “연간 20일 훈련”조항과 상충 될 소지가 있어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3. 소결론

병무청과 군(軍)의 예비군자원관리 및 훈련소집 통지는 국방부의 「예비군 조직편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과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병무청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음 몇 가지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였다.

첫째, 예비군 편성을 위한 예비군자원의 발체과정에서 전역권 부대의 군 복무경력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현역 복무 간 훈련 수준이나 신·구형 화포 특기 등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예비군 편성 및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군 편성카드 항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15년 동원훈련 간 내곡동 동원훈련장에서 예비군의 총기난사 사건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 있다.²⁷⁾

둘째, 동원지정된 예비군의 동원훈련 소집통지는 병무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동미참훈련 대상자는 군(예비군부대)에서 소집통지를 하고 있어 동일 동원예비군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훈련소집통지를 하고 훈련방법도 차이가 있다. 동일 예비군 신분을 고려할 때 형평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미참훈련의 경우 예비군이 출퇴근 방법으로 거주지역 내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고, 예비군이 훈련기간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분할 참석이 가능하며, 2차까지 무단불참해도 고발되지 않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차별 동일신분의 동원예비군은 동일 규정을 적용하고 일원화된 훈련소집통지 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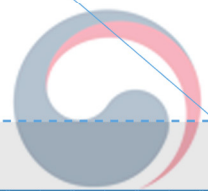
셋째, 국방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예비군훈련 보류제도에 관한 사항이다. 예비군훈련 보류자는 전 예비군자원 중 25% 수준에 이르며 이중 대학생예비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도가 최초 시행할 당시에는 대학생 진학률이 10% 정도였으며 학습권 보장의 이유로 훈련보류를 시행하였으나 현재 70% 이상 대학을 진학하고 있으므로 제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학생예비군의 훈련보류는 병무청의 병력동원 훈련소집률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군에서는 동원훈련을 참가하는 예비군이 전시 편성기준에 미달하여 실질적인 동원태세 및 전시완전 하에 훈련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보류제도는 예비군 복무 형평성과 동원태세 강화를 위해 전면 폐지해야 하며 이는 국방부와 병무청의 공동 노력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업이다.

넷째, 병무청과 군에서 각각의 훈련 소집통지 시스템 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병무청은 동원훈련에 대해 인터넷 시스템과 모바일앱을 운용하고 있고, 군도 예비군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운용하고 있다. 예비군 입장에서 두 개의 시스템 중에 본인이 해당하는 훈련을 찾아서 시스템을 접속해야 하다 보니 훈련유형에 대한 구분이 어려운 예비군은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리고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의 절차와 적용규정도 상이하다. 군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는 1, 2차 훈련소집통지에 무단불참해도 고발하지 않고 있으나 병무청 소집통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예비군 범법자 감소

27)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총기난사 사건(內谷洞豫備軍訓練場銃器亂射事件)은 2015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의 예비군훈련장에서 사격훈련 도중 예비군 최 아무개가 동료 예비군 4명에게 총기를 난사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가해자 최 아무개(1992년 출생)는 제5보병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다 2013년 전역했으며 현역 시절 중등도의 우울증과 인터넷 중독으로 B급 관심병사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현역 시 복무관리를 예비군부대로 넘겨받지 못해 가해자의 군 생활 당시의 정신질환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와 같은 참사를 막지 못했다.



및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완화된 고발 규정을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완화된 고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소집통지 소요의 증가 등 추가적인 행정 소요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집통지 시스템을 국방부와 병무청이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예비군 입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고발 규정도 정비하여 예비군훈련 참가 규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 방법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IV

예비군 소집업무 분석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1. 주요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개선안과 현 운용체계와의 장·단점 비교분석
3. 소결론





IV 예비군 소집업무 분석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1. 주요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예비군 편성

예비군 편성은 전역권 부대에서 제공된 병역자료를 활용하여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는데, 이 경우 현역 복무기간 동안 기록되어 관리된 각종 경력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2015년 서울 내곡동 동원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을 참고하여 정신적 문제로 전역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훈련보류 조치하고 있으나 정신적인 문제 외에 현역 복무 간 주특기(직책수행 능력)의 훈련수준, 사격등급, 특급전사 등 교육훈련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DATA)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방인사정보체계와 현역 복무 시 기록되고 있는 병 인사기록 내용을 개인정보보호 법을 고려하여 예비군 편성카드에 반영한다면 소집부대에서 전시 완편명부 작성(예비군 보직 부여), 동원훈련 준비 및 시행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현역 복무 시의 개인 및 주특기 훈련수준을 편성카드에 추가하고 병적사항에 기록된 주특기와 실제 현역 복무하면서 숙달한 특기가 상이할 경우 숙달된 특기를 고려하며 신·구형 화기의 특기를 세분화하여 반영해야 한다. 이는 병 기본훈련을 포함한 직책수행 능력과 대부대 전술훈련 참가경력, 분대장 또는 사수의 직책경험 등 훈련수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카드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²⁸⁾ 예비군 편성카드 항목의 자료테이블을 추가하여 보완하기 위해서는 군의 소요 요구와 병무청의 시스템 개선 등 상호 협업이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유사 특기 활용제도는 유사한 전투장비라고 하더라도 성능과 형태가 상이하여 임무수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짧은 동원 훈련기간 동안 장비 조작 숙달이 어려운 유사 특기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역 복무 시 정신적 문제나 병영생활 간 동료나 전우들과 관계, 그리고

28) 예비군 편성카드 항목 수정 시, 예비군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예비군 편성카드)

조직 생활의 적응상태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국방의무로서 병역 의무의 연장인 예비군 복무기간에 활용 가능한 자료 중 현역복무 시 확인된 정보를 국방 목적으로 연계한다면 개인정보 활용 위반 소지는 법적인 수준에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활용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통해 현역복무 자료공유 여부를 확인하여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비사단(현역 복무부대)과 동원사단(예비군 복무부대)을 건제대로 연계하여 예비군 지정이 가능하도록 예비군 편성카드 자료를 개선해야 한다. 예비군 편성카드에 현역 복무부대 부대코드를 활용하여 중대급까지 근무 시기를 맞추어 예비군 편성 및 동원지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는 중대급까지는 전산 부대코드를 병무청으로 전송하고 있는데 이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도 전송하여 예비군부대 및 소집부대에서 현역 복무부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동원지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자료 공유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예비군부대 조직편성에 현역 복무부대 단위 편성을 추가해야 한다. 예비군의 조직편성은 지역단위(행정구역)와 직장단위로 부대를 조직하고 예비군부대에서는 연차별, 신분별로 구분하여 예하 소대를 편성하고 있다. 지역 예비군부대의 편성은 전역 연차를 고려하여 동원소대와 예비군소대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병력동원 소집 대비가 가능하고 지역방위작전 임무를 고려하여 세부 제대를 편성하고 있다. 예비군부대 조직편성에는 예비군이 현역 시 복무했던 부대별로 구분하여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비군이 현역 시 어느 부대에서 복무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검색이나 조회를 할 수 없어 현역복무 시 경력을 조직편성에 활용할 수 없다. 현역 복무부대 단위로 조직편성이 될 경우, 예비군부대에서는 전시 예비군 긴급동원에 활용할 수 있고 소집부대에서는 완편명부 작성 시 예비군 보직 부여, 동원훈련 준비 및 시행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현역 복무부대 단위 예비군 조직편성은 현 지역과 직장 단위에 편성에 추가하여 편성하는 방안으로 다음의 <표 23>과 같이 방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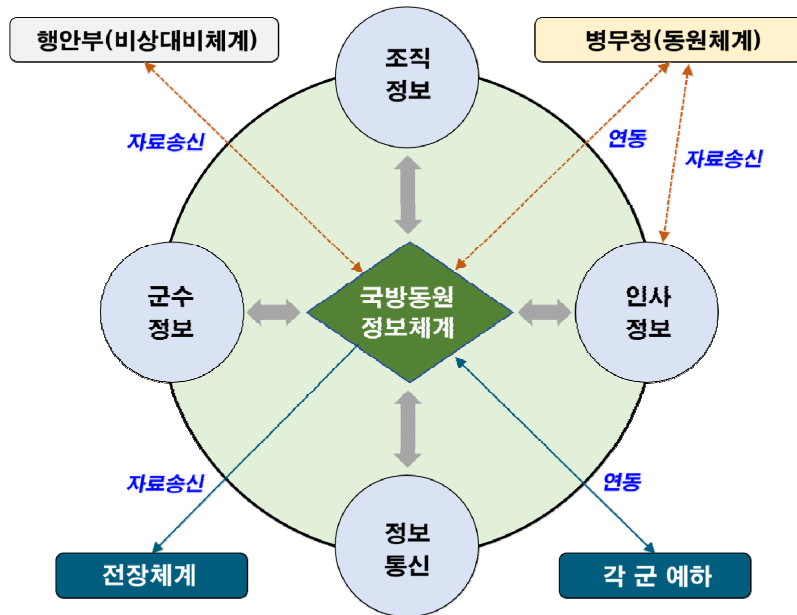
〈표 23〉 현역 복무기록을 포함한 예비군 편성방안

현 재		개선		
지 역	대 상	지역	대상	현역 복무부대 편성
시·군·구	군별, 병과(특기) 계급, 연차 등	전국~시·군·구	현행 동일	사단(함대사, 비행단) ~ 중대급(부대코드)

여기서 현역 복무부대 최하급 제대는 중대급으로 하되, 소대나 분대급도 세분화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는 현역복무 시 팀워크(전우애)를 고려하여 예비군 편성을 병영생활 단위까지 세분화함으로써 자원관리와 동원지정 및 동원훈련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지방병무청 단위의 한계를 벗어나서 행정구역별, 전국단위까지 다양하게 현역 복무부대 편성현황을 조회하고 근무 시기별(전역 연차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성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군 최초 동원지정과 대체지정 시 병무청과 군이 이 정보자료를 참고하여 업무관리 협업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전역권 부대와 병무청 간 예비군 편성 정보공유 및 업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이다. 기관별 각각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면서 업무의 협업을 위해 시스템 간의 연동으로 업무의 효율성은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자료의 전송 및 수신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전산망 운용 등으로 적시적인 연동이 제한되어 실시간 업무관리는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먼저 국방부는 국방부 내의 정보체계(인사·군수·동원·조직·정보통신 등) 간에 연동체계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병무청은 행정안전부·법무부의 시스템과 완전한 연동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한 후 국방부-병무청 간 상호체계 연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정보체계를 활용한 예비군 편성업무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현 국방부와 병무청 간 순차적 예비군 편성 관련 업무처리 방식에서 실시간 동시 처리방식으로 개선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참고로 예비군 편성을 위한 기관별 정보체계 연동방안은 국방부 내부체계 연동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의 [그림 17]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7] 예비군 관리 업무 연동체계도



출처: 연구자 작성

나. 신상이동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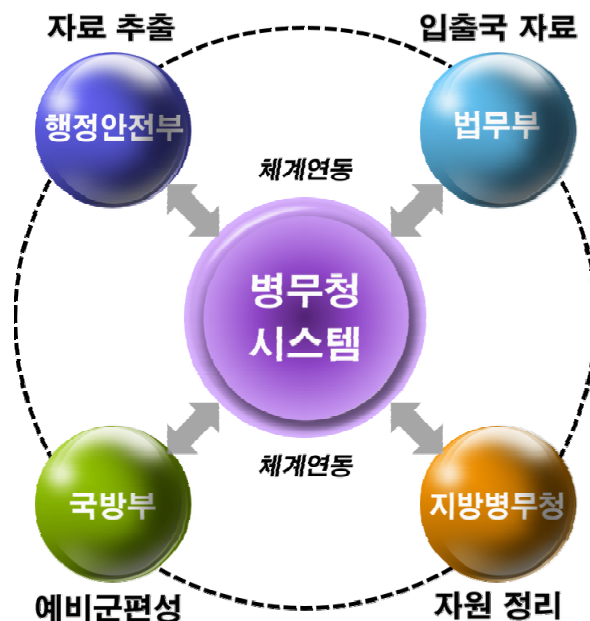
예비군의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병무청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변경자료를 추출하여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은 예비군 전산자료를 정리하여 병무청에 전송하며, 병무청은 다음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전송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는 “변동자료 추출⇒자료정리⇒관련 기관 전송”순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직장 예비군부대에 예비군 전입·전출·퇴직·사망 등의 신상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직장에서는 일일단위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하며 병무청은 변동자원을 정리한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신상이동자의 업무처리는 기관별 변동된 신상정보를 정리한 후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관련 기관에 전송하는 순차적인 업무방식으로 실시간 업무처리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단계별 업무처리 형태를 정보체계에서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필요할 경우 업무처리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기관 간의 변경된 정보자료가 실시간 연동으로 자동처리 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인 소요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지연 또는 누락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 그리고 국방부가 상호 체계연동에 합의하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

동으로 운용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정보체계를 활용한 업무처리 방안으로는 예비군 신상변동 자료 추출로부터 자료 정리, 관련 기관 전송의 전 과정을 AI, RPA²⁹⁾를 활용하여 자동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처리 과정에서 특정 단계는 해당 기관의 확인이나 검토(승인) 절차를 거친 후 전송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중간단계를 거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병무청과 국방부(예비군부대) 간 업무처리 자동화로 실시간 행정처리가 가능함으로써 처리시간이 단축되어 적시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18] 예비군 신상 변동업무 자동처리 체계안



출처: 연구자 작성

신상이동 예비군 업무처리의 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동원지정된 예비군의 자원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집부대에 동원지정된 예비군의 이동상황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으며, 대체지정 소요발생 시 적시적인 대체지정 처리로 상시 병력 동원태세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대체지정된 예비군에 대한 소집통지서 교부와 소집부대 지휘관의 지휘서신(LMS, SMS 포함)도 적시에 발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29)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틱 처리 자동화로 사람이 컴퓨터로 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기술로 사람이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속·정확함이 장점이다.

고 주소나 연락처 등이 변경될 경우, 병무청과 군부대가 동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동원지정된 예비군에 대한 병무청-소집부대 공동관리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그림 18]은 병무청 시스템을 중심으로 신상변동 자원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업이 요구되며 프로그램 보완도 필요할 수 있다.

다. 보류자 처리

예비군 보류제도는 정예자원 활용 제한으로 동원태세 확립뿐만 아니라 동원훈련 소집에도 영향을 주며, 일반예비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수 회의 개선을 검토하였으나 아직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속되고 있는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비군 보류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과 논의하고 방안을 도출하는 등 검토하였으나 실제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동안 추진하였던 경과를 아래의 <표 24>에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24> 예비군 보류제도 개선 추진 경과(국방부)

- 2008.6. 국가 인권위에 “평등권 침해” 진정(개인) ⇨ “시정권고”(2008.11)
 - 진정내용: 학생과 일반예비군 간 훈련 시간이 10~28시간 차이는 평등권 침해
 - 권고내용: 학생과 비 학생 간의 예비군훈련 시간을 형평성 있게 개선
 - ※ 조치내용: 충분한 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선 유보
- 2011.6. 헌법재판소 위헌 청구(개인) ⇨ “각하”(2013.12)
 - 학생과 일반예비군 간 훈련 시간 차이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2014.12. ‘한국리서치’ 국민 의식 조사 결과 74% 보류 해제 찬성
 - 2박 3일 동원훈련이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음(67.7%)
- 2015.3.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방침보류 해제 또는 예비군훈련 총량제 도입 등 필요성 제기

국방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공개토론을 거쳐 보류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까지는 어느 정도 형성하였으나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예비군 보류대상의 대부분이 대학생으로 보류제도 폐지 시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시행을 미루어 왔다. 대학생예비군을 포함한 예비군 보류제도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현재와 미래 국방혁신에도 많은 제한을 줄 수밖에 없다. 대학생예비



군은 정예자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미래 병역자원 감소와 더불어 예비군 가용자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군의 전시 증·창설 시 소요되는 동원예비군마저 부족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군 보류제도 해소는 국방개혁과 병력동원 업무의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반영하여 국방부와 병무청의 공동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다.

예비군 보류제도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수를 차지하는 학생예비군에 대한 편의제도 감소에 대한 정책적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제도의 추진방안은 첫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국방혁신 차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이는 현 정부의 「국방혁신 4.0」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상비병력 감축과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병력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동원예비군 소요 증가의 불가피성을 제기하면서 예비군 정예화에 걸림돌인 보류제도 개선을 통한 국방대비태세 유지를 강조하고, 보류자로 인한 예비군 복무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함으로써 숭고한 국방의무에 예외 규정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제도개선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예비군은 현행 보류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여 제도개선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방안이다. 2023년을 기준으로 보류제도의 개선안을 추진하게 된다면 2024년 입학하는 대학생부터 보류시간을 단계별로 축소하여 예비군훈련 부과 시간을 2026년까지 증가시키고, 2027년부터 보류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표 25〉 예비군 보류제도 추진 방안(예)

대학 입학시기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일반예비군	2박 3일(28H)	2박 3일(28H)	2박 3일(28H)	2027년부터 보류제도 폐지
보류예비군	1일(8H)	1박 2일(16H)	2박 3일(28H)	

위의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회, 언론, 교육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대학생예비군의 경우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의 경우와 같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예비군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훈련 시기와 방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대학생예비군의 보류폐지 시기와 연계하여 기타 보류대상자도 전면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병력

동원 후순위 제도는 전·평시 현행 임무수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긴급단계 병력동원 시기를 뒤로 조정할 수는 있으나 예비군훈련을 면제받는 보류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예비군훈련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라. 예비군 편성카드 정리

예비군 편성은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각 군 참모총장이 병무청에 전역자 병역자료를 전송하고 병무청에서는 예비군 편성카드를 정리한 후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까지 전송하고 예비군부대에서는 예하 제대편성 및 보직을 부여한다. 각 군에서 발송한 자료를 병무청에서 정리하여 다시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하는데 자료가 상호 연동되지 않고 일부 선별적인 자료 송수신에 대한 사항은 검토가 필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현역 복무부대 부대코드와 같은 자료가 예비군 편성카드에 포함되지 않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료의 항목 및 전송방식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각 군의 전역자 병역자료와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예비군 편성카드 자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자료테이블 구축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비군 편성카드 항목 추가 및 현역복무 부대단위 예비군 조직편성을 보완하는 방안은 앞의 '가'항 “예비군 편성”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보완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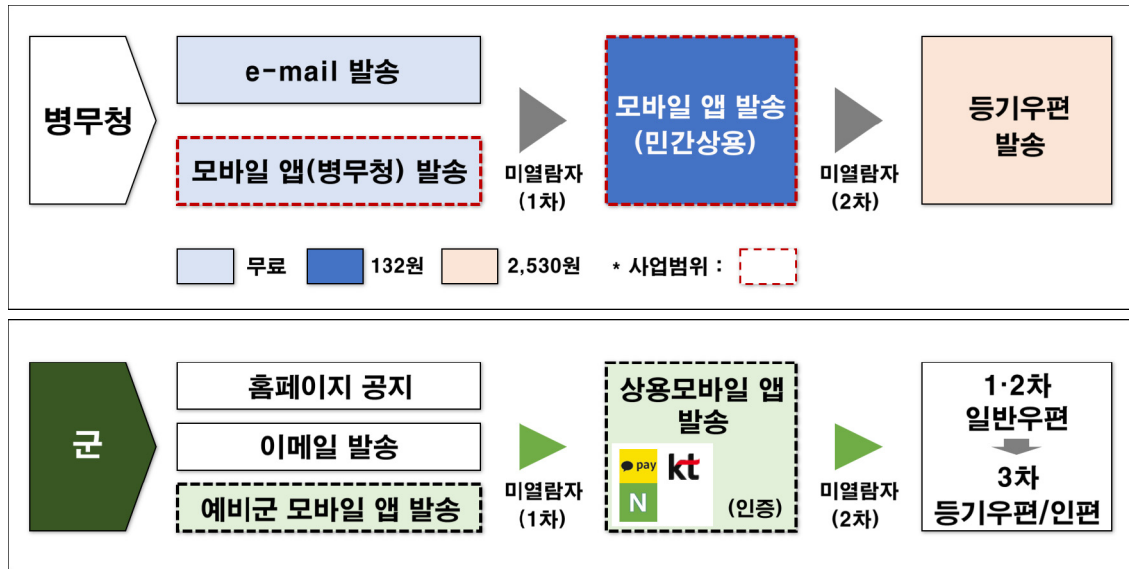
다음은 예비군 편성카드의 변경된 자료 처리방식에 대한 사항으로 예비군부대에서 예비군 신상자료 변경사항이나 보직 부여 등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병무청 시스템에 연동으로 업데이트되어 병무청과 예비군부대가 동일 정보자료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 훈련통지 절차

예비군훈련 통지는 병무청과 국방부가 각각 소집통지 책임 분야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데 이중 병무청과 군의 모바일 소집통지 시스템을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 19]와 같은 전체적인 소집통지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병무청과 국방부는 각각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훈련소집 통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민간 상용 모바일을 활용하는 것도 동일하고 시스템 운용방식도 유사하여 상호 협업하면 시스템을 통합하여 단일화 체계로 운용할 수 있다. 시스템 통합은 장·단기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병무청

또는 국방부 중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단일화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은 현재대로 시행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예비군의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소집통지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업무분장도 점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그림 19] 병무청과 군의 예비군 모바일앱 소집통지 체계



단기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훈련소집통지 업무에 대한 기관별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소집통지 책임기관(병무청과 군)을 명확히 구분하고, 예비군의 시스템 접근방식을 훈련유형별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시스템이 통합된다면 예비군도 병무청과 국방부로 구분되어있는 현재의 모바일 소집통지를 단일시스템으로 통보받고 필요한 정보를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대면 소집통지(통지서 직접 전달)에 대한 사항으로 주소불명 등의 상황에서는 등기우편 통지가 제한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사람에게 의해 통지서를 직접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병무청은 과거 지자체에 근무하는 병무담당자가 있을 때는 대면 교부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지방병무청 공무원이 직접 전달해야 하므로 행정적 소요 외에 전달하는 인력도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이 예비군을 직접 접촉하여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의 대면교부 제도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직접 전달 통지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면 소집통지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훈련의무가 있는 예비군이 스스로 인터넷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훈련소집통지를 확인하고 예비군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차량 속도위반 시 우편으로 통지하고 본인이 확인하고 출두하여 해명하거나 범칙금을 납입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예비군훈련 소집통지도 전자적 수단이나 우편으로 소집통지를 종결하고 위반자는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집통지제도가 예비군을 과도하게 강제하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 국가적 부담을 갖게 된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국회, 예비군, 관련 기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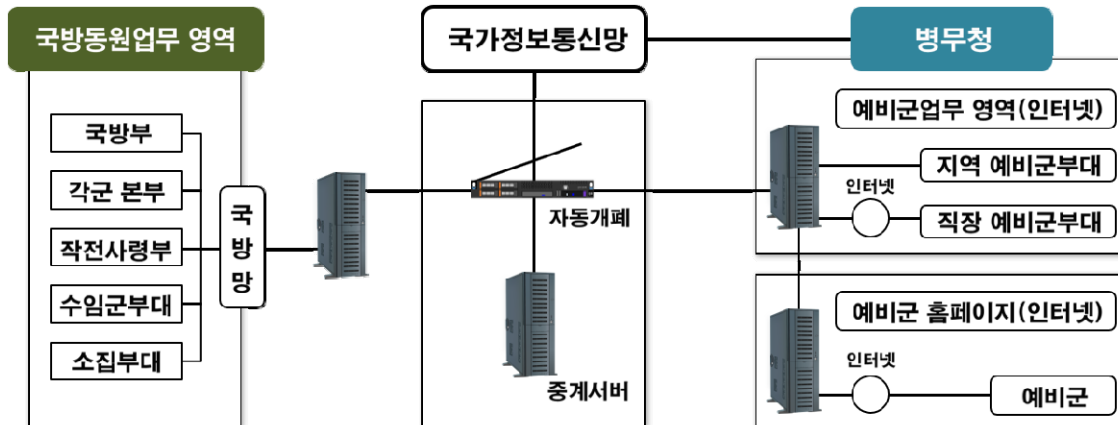
지금까지 현행 법령에 의거 예비군에게 소집통지서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 불참자에 대한 법적제재(고발)를 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마지막 수단으로 직접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통지서 대면교부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병무청이 직접 전달하는 교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사항이 따르므로 예비군부대에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읍·면·동 예비군 중대는 매년 상당수 예비군들에게 대면교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병무청 업무를 추가할 경우, 일부 업무에 대한 소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병무청에서 수행해야 하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병무청의 소집통지서 대면교부 업무를 예비군부대에 통합하고 여기에 추가되는 소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 병무청-군 간 자료 연계 체계

국방동원정보체계³⁰⁾가 구축된 이후에 병무청 시스템과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전산화 업무관리가 시행된 이후 업무처리의 신뢰성과 행정업무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아래 그림은 병무청과 국방동원정보체계 간 연동체계를 다음의 [그림 20]과 같이 제시하였다.

30) 국방동원정보체계는 2004. 11. 25. 1단계 사업에 착수하여 병무 전산망 연동 논의를 거쳐 단계별로 추진하였다.

[그림 20] 병무청-국방동원정보체계 정보유통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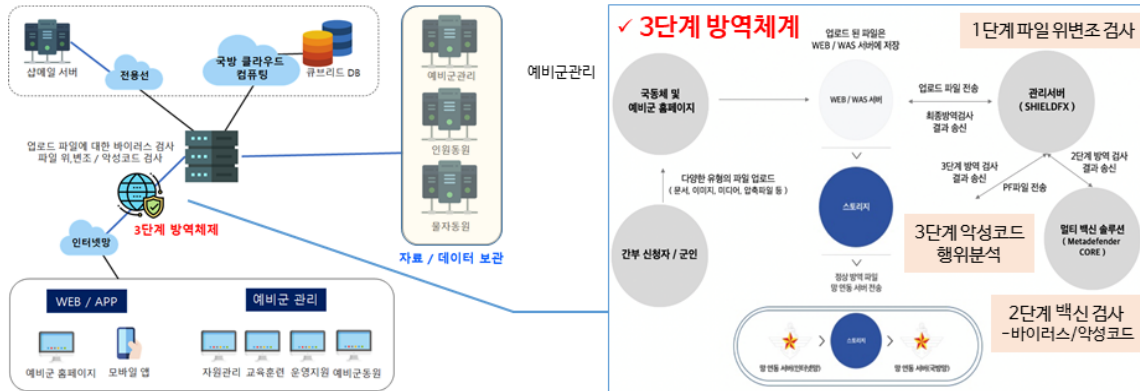
병무청과 국방부 간 정보공유 및 유통을 위해 3개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병무청과 국방부는 국가정보통신망으로, 국방부와 예하 부대(기관)는 국방망으로, 병무청(국방부)과 예비군부대는 인터넷망으로 운용하고 있다. 3개의 망이 사용됨으로써 중계서버를 운용하고, 시스템 연동 개폐 스위치 기능을 설치하는 등 정보유통과 보안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의 유통 여건을 고려하여 병무청과 국방부 간 자료연동은 매일 0시~05시에 정기적으로 송·수신을 하고 있으며 연동 종류는 아래의 <표 26>과 같다.

<표 26> 병무청과 국방부 연동대상 종류

구분	종류	주요 송·수신 종류
국방부 ⇒ 병무청	1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역자, 보류자, 손보부대대상자, 예비군 지원자 동미참이수 등 교육훈련결과, 주특기재분류, 예비역장교 진급결과 등
병무청 ⇒ 국방부	3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군 편성카드, 지역/직장예비군 후순위 조정자 승인/해제 신상변동자, 신규편성자, 추가편성자, 전/출입자 해외 출/귀국자, 동원소집자, 대체지정자, 지정삭제자 등

또한 기관별 정보보호를 이유로 다음의 [그림 21]과 같이 3단계 보안(방역)체계를 운용함으로써 데이터 처리 및 전송속도 지연 발생 등 행정 소요 이외 체계 운용상의 문제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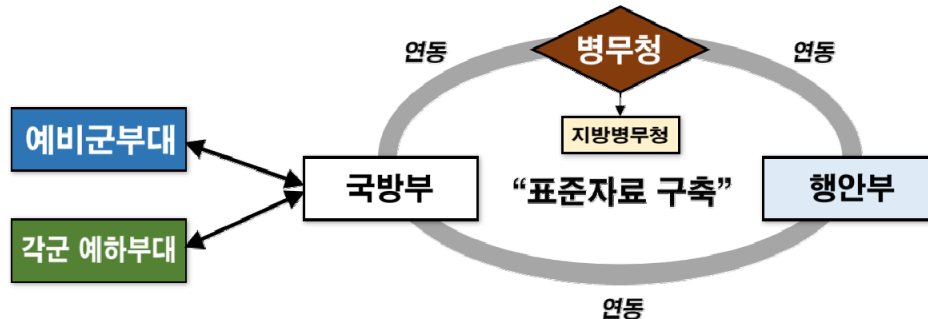
[그림 21] 정보 송수신 간 3단계 보안체계(예)



따라서 병무청과 국방부 간 실시간 자료연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한다. 특히 강화된 방역체계의 제한사항 보완을 위해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의 전송구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속도 지연을 예방하고 자료용량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평문자료는 방역체계를 거치지 않고 전송하고, 비밀사항은 방역 과정을 거치는 등 탄력적인 송수신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3개 망을 사용하여 적시적인 정보유통 및 공유 등의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연동시스템 또는 프로그램 개선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예비군 편성카드 작성과 관련된 자료 테이블을 기관별 정보시스템에 동일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병무청에서 유지하고 있는 예비군 편성카드 자료 테이블과 각 군에서 국방동원·인사정보체계로 전송하는 전역자 병역자료 테이블 구성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으로, 국방동원·인사정보체계의 예비군 편성카드와 전역자 병역자료 테이블의 주요 내용을 동일하게 구성함으로써 3개 정보체계 간 동시 연동으로 동일 정보자료를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관별 자료 테이블을 표준화하여 구축하고, 기관별 소요를 고려하여 구성요소를 최적화함으로써 상호 연계된 체계하에 최상의 자료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정보처리 절차를 단순화하고 기관별 동일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현역복무와 연계된 예비군복무 관리가 가능함으로써 효과적인 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관리 업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군 편성카드 자료 테이블 구축과 자료연동시스템 구성 방안을 다음의 [그림 22]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22] 예비군 편성자료 공유 및 연동방안(예)



마지막으로 국방동원정보체계와 병무청 체계 간 상호 자료접근 및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이다. 기관별 별도의 시스템과 전산망을 운용함으로써 타 체계 접근이 제한되어 업무 관련 폭넓은 정보공유가 제한되고 있다. 병무청과 국방부가 병력동원 업무를 공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상호 연동체계의 접근 범위를 적정 수준으로 허용하여 업무협업 및 처리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접근은 업무관련자로 한정하여 대상자를 엄격하게 구분하며, 접근 범위를 제한하고 기관별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면 가능할 것이다. 현재도 병무청과 국방부 공무원 간에 교환 근무를 하고 있고 국방부 자원동원과에 병무청 공무원이 매년 순환하며 근무하며 전시에는 병무청에서 추가적인 인원을 증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병무청과 국방부 간 상호 시스템 접속을 통해 부분적인 자료접근을 허용해준다면 적시적인 업무협업과 행정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기관 간의 업무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현 운용체계와 개선방안의 장·단점 비교분석

가. 효과성 측면(예비군 편익 제고, 시행기관 업무량 감축 등)

예비군 편성단계에서 병무청과 국방부(군) 간의 업무소요량은 시스템의 통합과 실시간 연동을 통해 일부 감소시킬 수 있으며, 예비군에게도 일원화된 정보체제로 접속하여 정보 확인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현역 복무 시 경험한 특

기와 직책을 예비군 복무 간에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함으로써 전시 임무수행 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비군 편성자료와 부대편성, 그리고 자료 송수신 등 관련된 개선안을 비교 분석하면 아래의 <표 27>과 같다.

<표 27> 예비군 편성 개선안 분석

구분	현 운용체계	개선방안
편성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군 편성자료 제공 * 병무청-국방동원정보체계 공유(42) • 자료전송 및 업무관리 용이 ▲ 예비군 신상 파악/활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 복무자료 추가 반영 * 훈련수준, 군사자격, 기타 • 업무량 증가(전산처리로 부담 없음) ▲ 예비군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담
부대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직장예비군 편성 * 동원지정·미지정 구분 • 행정구역 중심 업무관리 용이 ▲ 현역복무 경험 활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 복무부대 단위 조직편성 추가 * 현역 복무부대 건제 편성(중대급) • 현역복무 경험 활용, 예비군 운용 ▲ 예비군 편성업무 다소 증가
자료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차적인 절차를 거쳐 전송 * 전역권⇒병무청⇒국방동원정보체계 • 기관별 검증, 가공한 자료 제공 ▲ 적시적인 업무처리 제한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통합 자료전송 보장 * 전역권⇔병무청·국방동원정보체계(연동) • 동일 자료 제공, 연동으로 업무 감소 ▲ 자료검증 제한 시 업무처리 혼선 우려

예비군 신상이동 정리는 병무청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자료를 발체하여 정리하고 이를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하는 것이다. 개선안을 현 운용체계와 비교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발전과 연계하여 인공지능(AI)기술 등을 활용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처리 속도와 자료의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어 실시간 예비군 자원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28〉 예비군 신상이동 개선안 분석

구분	현 운용체계	개선안
거주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자료 추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무청-국방동원정보체계 전송 • 익숙한 방법 적용 용이 ▲ 업무처리 지연 및 착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 업무프로세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RPA활용 실시간 자료처리 •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가능 ▲ 시스템 구축 및 적용 추가 소요
예비군 소속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부대에서 자료 입력,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관 통보, 순차적 처리 • 순차적 업무처리 용이 ▲ 업무의 신속성, 편의성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수정 동시 전(全) 기관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부대(기관) 입력, 자동처리 •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 중간단계 검증 등 절차 미적용

예비군 보류자 정비는 국방부와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이다. 예비군의 정예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군 복무의 형평성을 유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이는 병무청에서 병력동원 지정자원 확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현 보류자 처리는 예비군부대에서 절차를 거쳐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업무처리에는 제한은 없으나 처리 과정에서 서류제출 등의 방법을 개선하여 편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비군 보류제도를 조기에 정비하여 예비군 정예자원 활용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해야 하며 개선안에 대한 분석은 아래의 〈표 29〉와 같다.

〈표 29〉 예비군 보류자 처리 분석

구분	현 운용체계	개선안
보류자 처리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부담으로 추진 소극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검토범위 내에서 중단 • 학생예비군 등 보류자 여건 보장 ▲ 보류 과다로 예비군 정예화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공감 형성을 위한 정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정부 안보정책 연계 추진 필요 • 예비군 정예화, 복무 형평성 유지 ▲ 기존 보류자의 혜택 감소
보류 해소 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추진계획 미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에 따른 국민 정서 고려 • 국민적 갈등 유발 방지 ▲ 보류자의 예비군 활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보류 해소 추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 시기별 보류시간 점진 축소 • 동원예비군 활용범위 증가 ▲ 학생예비군 방학기간 훈련편성 등

예비군 편성카드 정리는 현역 복무의 기록을 보완하여 현역복무 시 부대와 직책 경험을 예비군 편성 및 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국방부(동원·인사)와 병무청 간 구성항목 소요 조정 및 시스템 개선과 연계되므로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검토해야 하며 개선안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표 30>과 같이 제시하였다. 예비군훈련 통지는 책임기관별로 각각 시행하고 있는데, 병무청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통지를 전담하여 인터넷과 우편 등의 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방부(군)도 유사한 방법으로 기타 예비군훈련 대상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각각 운용하고 있는 통지시스템을 통합하여 단일체제로 전환하면 시스템 운용의 효과성이 증대되고 예비군도 시스템 접속 및 활용이 용이할 수 있다.

<표 30> 예비군 편성카드 개선안

구분	현 운용체계	개선안
편성카드 테이블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항목 테이블(table)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무청 항목 통보, 국동제 반영 현행업무 수준 유지, 행정편의 가능 ▲군의 적재적소 자원 활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이블 항목 추가 및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요구 고려 항목 추가(42+) 현역 자료의 효과적 활용 가능 ▲업무량 증가, 자료구축 소요 발생
자료 최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대(기관)별 자료처리 절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자료 전송 및 처리 정보변경 입력, 전송, 처리 가능 ▲정보처리 시간, 노력 등 업무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처리의 자동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자료 자동처리(AI, RPA) 실시간 정보처리로 최신화 가능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필요

동일 동원예비군임에도 불구하고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으로 이원화된 소집통지 체계 운용을 일원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업무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예비군을 직접 접촉하여 대면 소집통지는 병무청과 국방부가 각각 행정 소요와 민원 소지 등 이중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군(예비군부대)으로 통합하여 단일화하여 업무를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대면 통지제도는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폐지해야 하며, 개선안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 예비군훈련소집 통지 개선안

구분	현 운용체계	개선안
모바일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무청-국방부 각각 통지 체계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유형별 다른 통지 • 기관별 업무수행 용이 ▲ 각각 시스템 운용에 따른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통지 통합시스템 구축,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군훈련 통지체계 일원화 • 예비군 혼란예방, 업무 효율성 증가 ▲ 기관별 협업, 규정 개정 등 소요
대면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기관)별 업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적으로 인편 통지 불가피 • 현행 법령 준수 ▲ 인력 소요, 민원 등 업무부담 과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군부대 대면통지 통합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무청 대면통지⇒예비군부대 • 병무청 대면통지 부담 해소 ▲ 예비군부대 대면 통지 부담 발생
법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예비군 개인 소집통지(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제재를 위한 절차 적용 • 법령 준수 하에 통지 절차 적용 ▲ 접촉 훈련통지의 불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통지제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통신 수단으로 소집통지 종결 • 접촉 통지의 불편 해소 ▲ 법령개정 소요, 범법자 증가 우려

병무청-군 간의 자료 연계에 대해서는 국방동원정보체계가 구축된 이후부터는 많은 업무관리가 획기적으로 발전되었는데, 과거 수작업이나 서류(전산 저장장치)로 처리했던 것을 정보시스템 연동 또는 전산자료 송수신으로 행정 소요 감소뿐만 아니라 자료의 정확성, 처리의 신속성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기관별로 운용되고 있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각각의 기관별 시스템 운용에 따른 연동 제한 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실시간 정보공유와 업무처리를 위해 자료 연동체계를 지속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자료 연계와 관련하여 현 운용체계 개선안에 대한 분석을 아래의 〈표 3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32〉 기관별 정보체계 개선안

구분	현 운용체계	개선안
정보체계 전송망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전송망, 중계서버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보통신망, 국방망, 인터넷망 • 기관별 자료보관, 보안조치 양호 ▲ 중계운용 등 망전환 장치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무청-군 간 정보망 운용개선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망 상호 실시간 연동 발전 • 전송 등 업무처리소요 감소 ▲ 정보망 연동으로 보안 취약 우려
정보자료 전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전송 간 3중 보안(방역)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 자료의 보안조치 강화 ▲ 전송 과부하, 업무처리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송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유형별 보안체계 우회 전송 • 신속 업무처리, 중계서버 부하 감소 ▲ 보안조치 취약성 우려
기관간의 정보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정보체계 접근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자료전송으로 업무처리 • 기관별 업무영역 준수 ▲ 정보공유 제한으로 업무 효율성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관 정보체계 접근 일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정보체계 직접접속 업무 확인 • 정보공유, 업무수행 용이 ▲ 관련 규정 개정, 접속통제 등 요구

나. 경제적 측면(시간 단축, 비용 절감 등)

1) 업무처리의 자동화체계 구축(AI, RPA 활용)

업무처리는 기관 간에 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행정 소요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경제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료를 발취하여 정리하고 이를 다시 관련 기관에 전송하는 순차적인 업무처리 과정을 AI 또는 RPA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산프로그램으로 자동 처리되도록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인력에 의한 업무 소요 감소와 업무 처리시간이 단축되며, 실시간 정확한 정보자료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병력동원태세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시스템 보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관 간의 협업(시스템 보완 및 연동체계 구축 등)과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별 정보보호와 업무영역 노출 방지라는 인식을 벗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인력을 감소하고 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예비군 편성카드 자료 테이블(table) 보완

예비군 편성카드 자료 테이블(table)은 예비군자원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중요하다. 자료의 구성요소(code)를 소요 기관의 요구를 고려하여 필요시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현역 복무기간 동안 획득된 군사기술 수준을 자료화하여 현역 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예비군 편성자료에 반영하여 예비군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훈련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테이블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현역 복무기간 동안 기록한 전투체력(특급~2급), 개인화기 사격(특등~2등), 주특기 훈련(사수 등급), 육군 특급전사, 연합작전 경력(통역), 기타 각종 군사 자격증 현황을 자료화하여 예비군 편성카드에 반영함으로써 군에서 예비군을 적재적소에 보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기본적인 병역자료를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현역 복무기간 동안 숙달된 전투기술 자료를 예비군 편성카드 구성요소에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국방부(군)에서 소요가 있어야 하고 병무청이 이를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면 시행 가능할 것이다. 국방부 인사정보체계 외에 현역 장병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되어 보관하고 있는 인사자료(연대 인사행정업무체계³¹⁾)를 예비군 편성카드 구성요소에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예비군 편성카드 구성요소가 추가되어 자료로 구축될 경우, 병무청에서도 부분적으로 병력동원 지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군 소집부대에서는 전시 완편명부 작성 시 예비군을 적재적소에 보직을 부여하고, 동원훈련 준비·실시 및 훈련 이후 후속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예비군 정예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매년 동원훈련 시마다 동일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비효율적인 훈련 방법을 예비군 수준별로 훈련을 편성하여 시행함으로써 제한된 동원훈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예비군 전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동원훈련 중에 추가 확인된 예비군 훈련자료는 다시 예비군 편성카드에 보완하여 동원지정된 예비군을 지속 관리한다면 동원예비군의 전시 임무수행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현역 복무 시의 편성된 부대단위의 견제를 전역 후 예비군부대에 최대한 동일하게 연계 편성하여 현역 복무 시 형성된 팀워크가 예비군 복무기간에도 계속됨으로써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구조이다. 싱가포르도 이스라엘에서 동원제도를 받아들여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보다 인구나 국토 면적의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의 환경에 맞는 권역화 동원제도를 잘 접목하여 현역 복무부대와 예비군 복무부대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3) 보류자 처리규정 개정, 동원자원 효율적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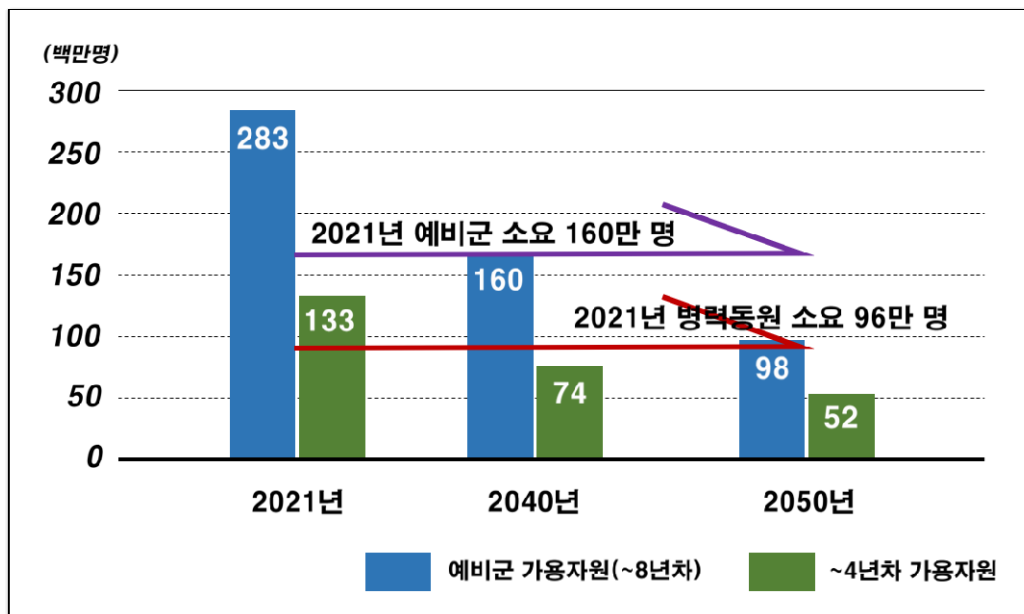
예비군 보류자 신고 및 해제 처리는 예비군부대에서 서류를 접수하여 건의하고, 승인기관의 확인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일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국가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전자문서 체계를 활용한 비접촉 업무처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문서의 경우 전자팩스를 활용하고 사실확인(국가인증제)이 되면 자동으로 관련 기관에 전파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적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병역자원 감소와 더불어 예비군 가용자원도 지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군의 전시 예비군 병력동원 소요는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인데, 예비군 보류제도를 계속 유지하

31) 육군 현역병사는 연대 인사행정업무체계에 개인별 훈련기록란에 각종 현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병원진료 및 입원, 병영생활 적응과 관련된 사항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없는 부분을 예비군 편성카드에 전송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다.

게 되면 군부대 증·창설 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보류자의 대다수 인원이 대학생예비군인데, 이 제도는 1970년도 대학생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추진되었지만, 당시 대학생 입학 수준과 현재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비군훈련 보류제도는 최초 제도를 시행했던 취지와 예비군 복무 형평성, 공정한 훈련의무 부과에 맞지 않으므로 조기에 폐지하여 예비군 가용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국방 개혁과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림 23] 예비군 가용자원 변화 추이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군 가용자원 감소에 따라 2040년부터는 전시 증·창설 예비군 병력동원 소요마저 부족하게 된다. 전시 예비군 병력동원 규모 축소 등 소요 조정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예비군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제한을 주는 보류제도는 조기에 폐지하여 전시 적정수준의 군 병력구조 유지를 지원토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4) 예비군훈련 통지의 통합 일원화

예비군훈련 유형에 따라 소집통지 기관이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어 훈련의 형평성과 업무관리 일관성 유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동일 예비군 신분과 유사한 유형의 훈련소집 통지는 단일기관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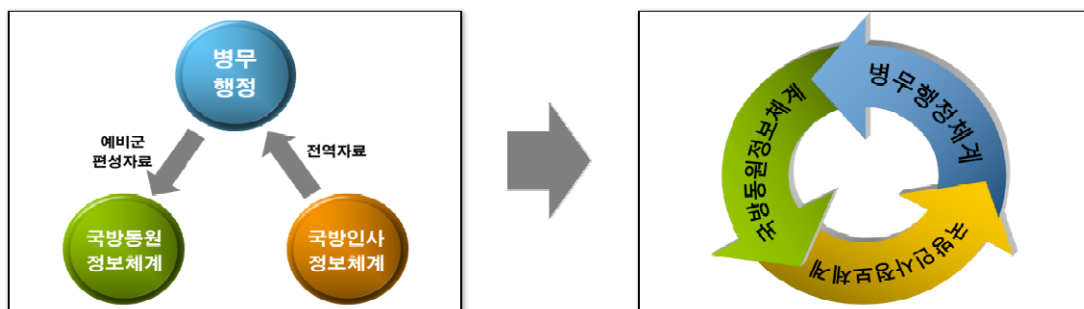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스템도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각각 운용하는 것을 통합하여 단일시스템으로 운용함으로써 2개의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보다 비용감소 효과가 있고 예비군도 단일시스템에 접속하여 훈련소집통지 및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훈련통지 시스템을 통합하는 경우 훈련유형별 업무 주관기관이 해당 훈련유형의 메뉴를 관리하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병력동원 훈련의 경우는 병무청에서 소집통지를 주관하고, 기타 예비군훈련은 군에서 소집통지를 주관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 기관은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다음은 직접 접촉하여 훈련통지를 교부하는 업무로, 소집통지 시스템을 통합하게 되면 대면 통지도 예비군부대로 통합 가능하여 병무청의 대면 소집통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비군부대의 부담이 증가하나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방법보다는 비용 및 행정 소요 면에서 유리하다. 대면 소집통지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전자송달 통지로 종결하여 우편발송 비용감소와 인편 소집통지의 소요와 불편사항 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집통지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비군은 훈련통지를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도 중요할 것이다.

5) 정보체계 전송 및 연동체계 개선

병력동원(훈련) 소집과 관련된 정보자료의 전송 및 공유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체계 간의 연동체계는 업무처리 속도와 자료의 정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예비군 신규 편성을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를 적용하여 기관별로 동시에 정보자료가 상호 연동되어 처리한다면 업무의 신속성·정확성·효율성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24] 예비군 신규편성 체계 연동 방안(예)



앞에서 제시한 절차를 보면, 왼쪽 그림은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병무청을 거쳐 다시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 병역복무자료가 전송되는데, 이를 우측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부 인사-동원체계 간 현역 복무자료 정보를 연동하여 처리하고 이 자료는 동시에 병무청에도 전송함으로써 3개 체계가 상호 연동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예비군 편성카드를 처리를 했던 지방병무청의 업무를 병무청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3개 부서의 시스템에 동일 예비군 편성카드 자료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예비군 편성카드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기관별 동일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협업 소요 감소, 업무처리 시간 단축, 기관별 예비군 편성 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병무청과 국방부 관련 부서 간의 정보체계 연동 협의, 각종 자료코드의 표준화, 기관별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6) 타 기관 정보시스템 공유제도 검토

정보체계를 활용한 기관별 업무처리 절차는 타 기관에서 정보자료를 요구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여 요구기관에 전송하는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즉 타 기관의 정보체계에 직접 접속하여 단순한 정보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자료가 필요한 기관에서는 공문서를 관련 기관에 발송하여 자료요구를 하면, 이를 접수한 기관에서 요구자료를 정리하여 정보체계로 전송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자료확인을 통해 업무처리가 가능한 것도 기관별 정보체계를 폐쇄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업무협업 등 처리시간 소요 증대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업무 관련 기관별 타 정보체계에 정보자료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체계 간의 시스템 연동으로 공통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있으나 연동하는 과정에서 보안상 취약성을 이유로 연동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타 기관의 정보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허용 인원과 접속 범위를 설정하여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유는 업무협조의 영역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 및 협조하는 비효율적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방부



와 병무청 간의 체계 공유에 대한 사항으로, 동일 성격의 전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고 평시 공무원 교환근무와 전시 공무원 증원 등 연계성이 있는 기관의 경우 상호 체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국가전쟁 지휘 시설인 문서고에도 병무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시 지속적인 체계 운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병무청과 국방부 간의 정보통신체계 운용에 대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지원기관의 협조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킹이나 타 기관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과도한 체계 접근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한된 영역과 최소의 인원을 대상으로 접속 권한을 부여하고 보안서약서 집행,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 한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한다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타 기관 정보체계를 접속하여 자료공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적시에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기존의 협조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획득, 처리했던 것보다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으므로 기관별 세부 사항에 대한 협업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소결론

병무청과 군의 예비군 소집업무는 예비군 전력 향상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현역 입영을 지원하고 군은 입영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양성하고 유지한다. 현역 복무를 마친 예비역은 다시 병무청에서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관리하며 동원령이 선포되면 소집하여 군(소집부대)에 인도하는 순환적인 업무협조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병무청과 군은 군사력 유지에 대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역 복무와 예비군 복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예비군 편성카드 작성은 현역 복무경력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역 복무 시의 전투기술 등 복무결과를 예비군 복무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군 편성카드 구성요소를 추가하고 군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예비군의 보직 부여 및 동원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예비군의 전력 강화

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예비군훈련 보류자에 대한 조치이다. 보류자는 병력동원 소집(훈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환경의 변화,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하여 예비군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류제도는 조기에 개선되어야 한다. 다수의 학생예비군이 보류자로 포함되어 예비군의 정예자원을 활용하는데 제한을 주고 있으므로 예비군 복무의 형평성과 병력동원태세 확립을 위해서 보류제도는 조기에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훈련소집통지 절차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훈련소집 통지는 기관별 훈련소집 책임분야에 대해 각각 시행하고 있는데, 예비군 입장에서 개인별 훈련유형에 따라 병무청이나 국방부 예비군홈페이지를 찾아 접속하여 훈련과 관련한 정보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등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체계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소집통지 주관기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집통지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예비군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비군 편성카드 보완, 보류제도 개선, 훈련소집통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효과성 측면과 경제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관별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업무관리에 대한 상이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토의,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체계를 개선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추가적인 연구와 자문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비군 소집업무 제한사항 극복 및 효율적 운용방안

1. 단위사업별 병무청과 군 전산시스템 상호 활용 가능성 분석
2.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업무체계 및 수행기관 통합·조정 필요성
3. 소결론





V. 제한사항 극복 및 효율적 운용방안

1. 단위사업별 병무청과 군 전산시스템 상호 활용 가능성 분석

가.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예비군 편성단계에서 전역권 부대와 병무청 간의 예비군 편성 관련 병역자료의 송수신은 잘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정보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협업을 통해 시스템 환경을 보완하면 시행 가능하며 자료 송수신 간 표준화된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자동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1) 신규 예비군 편성 절차

신규 예비군 편성은 국방부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전역자의 복무와 관련된 병역자료를 국방인사정보체계로 병무청에 전송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국방부의 예).

신분별	인수 방법	주기
육·해·공군	국방인사정보체계	수시

병무청에서는 전역 인사명령서와 전산자료를 대조하여 확인하며 현역 시 복무부대는 표준 부대코드(중대급)를 포함하여 전송하며, 이때 부대명(text)을 함께 전송하고 있다. 이중 부대코드는 국방부에서 표준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체계 연동이나 자료 송수신 간 전산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예비군 신규편성 시 전역자의 기본적인 병역자료 위주로 제공되어 현역복무 경력에 해당하는 군사 전투기술 수준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앞에서 제시한 방안을 적용하여 병무청과 국방부(군) 간의 협의를 통해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가 반영할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는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을 다음의 <표 33>과 같이 예시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기관별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범위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표 33〉 예비군 편성카드 작성 추가항목(예)

① 훈련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화기 자격(등급), 주특기 수준(사수등급), 병기본과목 수준 등 • 전술훈련 참가, 경연대회 수상, 연합훈련 파견 등
② 군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력 등급, 무도 수준(태권도 등), 특급전사, 기타 • 운전면허, 중장비 면허, 기타 군생활 중 획득한 군사 자격증
③ 복무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입원경력, 처벌현황, 특이사항 등 • 반장 또는 분대장 경력, 안전사고 여부, 기타 참고사항
④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무부대 코드 세분화: 중대급⇒소대급(필요시) • 양성교육 참가(병과학교), 상훈기록(훈련), 해외파병, 기타

위의 표에서 제시한 항목 중 훈련 수준, 군 자격증, 기타사항 등 계량화 가능한 항목은 표준코드를 정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계량화가 제한되는 항목은 문자(text)로 반영할 수도 있다. 다만 복무 상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저축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해야 하지만, 예비군 복무를 병역의무의 연장선에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역 복무 간 기록된 자료의 활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가능한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소집부대)에서 예비군 편성 및 훈련, 안전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추가반영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병무청 또는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코드가 마련되어야 하며, 시스템 연동을 위한 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부대코드는 중대급까지 표준화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생활관 단위(소대급)까지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현역 복무 시 전우애(단결력)를 예비군 복무 간에도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자료 구축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나 자료가 세분화할수록 전산용량이 증대되어 전산운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현역 복무 시 형성된 전우애를 예비군 복무와 연계시켜 평생 전우로서 관계를 유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동원 즉시 임무수행 가능한 예비군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현역 복무와 예비군 복무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역 복무와 예비군 복무의 연계 대상부대로는 예비군이 충원되어야 임무수행이 가능한 동원 위주 부대(동원사단 등)가 우선 해당될 수 있다. 이 부대들은 이미 권역화 동원지정제도를 적용하여 군단 축선별 상비사단과 연계하고 있으나 이스라엘과



같은 수준까지는 한계가 있다. 국토 크기, 인구 규모, 예비군 편성 기간이나 훈련 시간 등의 차이가 있어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현역 복무 시 중대급 부대까지 함께 복무했던 전우들과 연계하여 동원지정이 되도록 업무관리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현역 복무 간 갈등 관계가 있었던 예비군은 함께 동원지정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실 거주지역이 동원소집부대와 과도히 이격되어 있는 예비군도 고려하는 등 예비군 불만이나 민원 소지가 있는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징병제도의 장점인 현역 의무복무의 경력을 예비군 복무에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예비군 정예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업무영역을 지속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2) 지역 및 직장예비군 편성, 보직 부여

지역 및 직장예비군 편성은 예비군부대가 병무청에서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된 예비군 편성자료를 활용하여 예비군의 신분에 맞게 예하 소대를 편성하고 보직을 부여한다. 예하 부대편성은 병력동원과 지역방위작전을 고려하여 동원소대와 일반소대, 보류자 소대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예비군자원을 관리한다.

예비군 중대의 예하 세부 제대 및 보직 부여의 임무는 예비군부대의 고유기능으로 예비군법을 적용하여 편성 및 동원에 대비하는 것으로 예비군부대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지만, 병무청도 예비군부대별 세부 편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편성현황을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연동하거나 병무청에서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직접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 접속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예비군부대 조직편성에 현역 복무부대 단위 편성 검토

예비군부대의 조직편성은 지역(행정구역)과 직장 단위로 편성하고 있는데 예비군이 현역 복무 시 부대에 편성되는 예비군은 사실상 많지 않다. 현역 복무부대 단위로 예비군을 편성하여 관리할 경우, 동일시기에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예비군은 복무 당시의 개인 및 부대단위 교육훈련을 숙달하였고 친화력을 포함한 전우애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현 예비군 조직편성에 현역 복무부대 단위 편성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역 복무부대 단위 예비군 조직편성을 추가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현역 복무부대의 전산 부대코드를 활용하여 제한적으로 편성이 가능하며, 이를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하면 예비군부대에서도 세부적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역 복무부대 단위 예비군 편성을 추가하게 되면, 예비군 자원관리 업무증가와 정보체계 보완 등이 소요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부대코드를 포함한 현역 복무부대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현역 복무부대 단위 예비군 편성을 위해서는 편성범위 및 방법을 먼저 정해야 한다. 행정구역의 범위는 시·군·구 단위를 기본으로 편성하되 광역시·도와 전국단위까지 종합편성이 가능토록 구분해야 하며, 방법은 지역별·제대별·연차별로 세분화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역별 현역 복무부대 단위 가용자원과 현역 복무 당시 함께 근무했던 예비군을 확인하여 병무청에서 부대단위 배정시 동원지정자료로 활용하고 군에서는 전시 완편명부 작성과 동원훈련 등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원 위주 부대(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등)에서 편성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동원지정 관련 업무를 병무청과 협업할 수 있어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의 병력동원 지원태세와 동원전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병무청에서도 군의 요구에 맞게 최적의 예비군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신상이동 정리체계

1) 거주지 이동

예비군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변경자료(전·출입)를 추출하여 병무청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지방병무청에 통보하며, 지방병무청은 국방동원정보체계로 관련 자료를 전송하는 순차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료확인 및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추가 소요 시간이 발생하고 적시적인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행안부-병무청-국방부 간 예비군 신상자료 변경사항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되, 지방병무청에서는 예비군 동원지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체지정 정보자료를 정리한 후 추가 체계연동으로 업무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 거주지 이동 관련 정보자료와 업무처리 결과는 해당 기관별 정보체계 팝업창으로 동시에 알리고, 주기적인 처리현황(일일, 주간, 월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화하여 제공한다면 업무관리가 용이할 수 있다.



2) 지역⇄직장 간 이동

예비군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예비군부대 소속이 변경된 경우도 거주지 이동과 유사한 방법으로 업무처리가 되고 있는데, 지역예비군이 직장예비군 부대로 전입하는 경우 직장의 장이 예비군 편성을 하고 지방병무청에 전송하며 지방병무청은 편성 결과를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하는 순차적 처리 방법에서 거주지 이동의 경우와 동일 방법으로 실시간 동시 처리하는 것으로 개선함으로써 예비군의 소속 변경에 따른 업무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비군의 소속부대 변경 등 이동사항 업무처리는 직장 내 전산에 의한 처리내용이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즉시 전송되고, 이를 병무청에 동시 전송하여 실시간 변경자료 연동 및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업무처리 시간 단축과 예비군자원관리의 적시성에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 병력동원 지정 및 관리방안 검토

1) 예비군 병력동원 지정 방안

육군동원전력사령부³²⁾는 육군의 전방 동원전력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유사시 작전부대에 준비된 동원전력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창설된 부대이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에는 동원사단, 동원자원 호송단, 동원지원단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육군 예비군 병력동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사령부 예하 부대는 평시 현역의 편성율이 10% 미만이며 예비군이 동원되어야 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동원 위주 부대라고 함)이다. 예비군자원의 수준이 부대 전투력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비군 정예자원을 동원지정하여 동원된 이후 최단 시간 내에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원지정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는 권역화 동원지정제도를 적용하여 현역 위주로 편성된 상비부대와 최대한 연계하여 동원지정을 하고 있으나 군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다.³³⁾ 이는 현역 복무 시 부대 건제를 동원사단에 완벽하게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32)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대통령령 제28704호, 2018. 3. 20.)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 관리 및 작전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둔다.

33) 육군동원전력사령부 동원처 간부의 의견수렴 결과(2022. 7. 26), 동원사단의 정예자원 동원지정과 상비사단과 매칭에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은 병무청과 육군동원전력사령부 간의 긴밀한 동원지정 협업체제를 갖추어 문제점을 상호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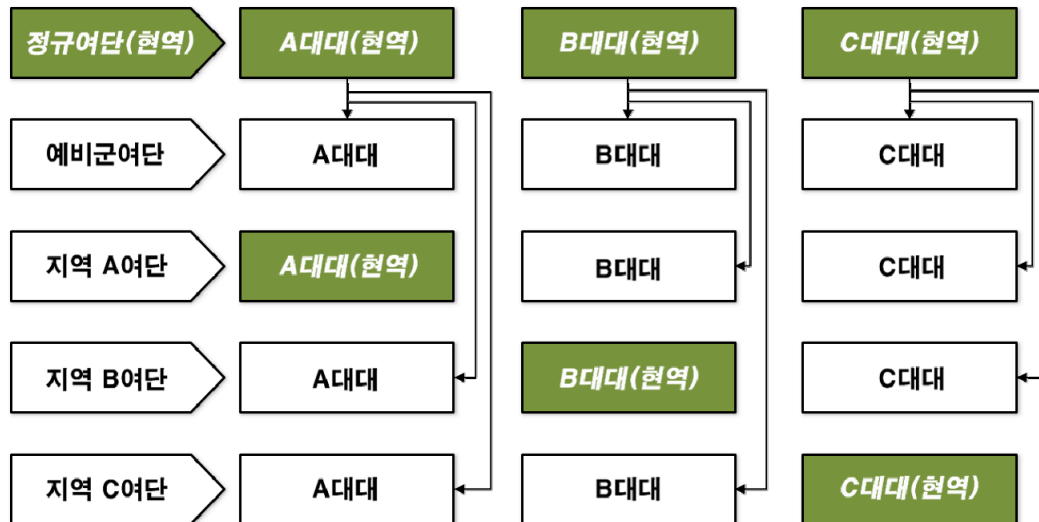
예를 들어 동원사단의 보·포병대대를 대상으로 동원사단이 작전계획에 의거 투입되는 군단별 작전축선의 전방 상비사단 전역자를 중심으로 1권역(서울·경기·인천·강원도) 내에 주소지를 둔 예비군을 현역 복무 시 중·소대급까지 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동원지정을 하는 것이다. 이는 예비군 편성카드 보완 시 현역 복무부대의 전산 부대코드를 활용, 대대별 상비사단의 대대와 1:1로 연계하여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병무청에서 권역화 동원지정을 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보완을 통해 동원지정 수준을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대의 동원지정은 병무청과 동원사단 간 업무수행 전 단계에서 상호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군이 요구하는 최상의 상태로 동원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소대단위 동일시기에 현역으로 복무했던 부대까지 구체적으로 지정에 반영한다면 현역 복무 시 함께 근무했던 훈련과 전우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한번 지정되면 예비군 4년까지 보직을 고정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동원지정을 하되 지정된 자원 중에 현역 복무 시 갈등이 있는 예비군은 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예비군의 불만 요소나 민원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최적화해야 한다. 또한 1권역의 전체 지역에서 동원지정을 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소집이동 거리와 시간이 길어지거나 소집 간 역수송 등의 문제로 일부 제한사항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원사단별 몇 개의 대대를 선정하여 시험적용 한 다음 효과성을 확인한 후에 단계별 확대 적용하면 가능할 것이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에서는 이러한 동원지정 업무처리 방법을 병무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소요를 제기하고, 병무청과 육군본부(국방부)는 이를 검토하여 지정방법을 발전시켜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 동원부대와 전력을 정예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군의 동원지정 요구에 맞도록 병무청도 권역화 동원지정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최상의 동원지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은 최고 수준의 동원전력 준비태세를 갖추어 전시 임무수행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정규여단과 예비군여단 간의 예비군 편성이 연계되어 있어 평생을 전우관계로 예비군 복무를 하고 있으며 예비군부대 편성 방법은 아래 그림에 제시하였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 동원제도를 개선하여 동원 즉시 바로 전장에 투입,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평시부터 예비군 스스로가 연락시스템을 갖추고 작전 임무, 동원훈련을 통해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5] 이스라엘의 정규여단 예비군여단 편성(예)



출처: 연구자 작성

2) 병력동원 지정자 소집통지 및 관리체계

병무청에서는 군의 병력동원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을 전시(동원령 선포)를 대비하여 평시 사전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해당 예비군에게 교부하고 있다. 동원훈련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훈련 전에 훈련소집통지서를 대상 예비군에게 사전 교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집통지 과정에서도 병무청과 동원사단 간 긴밀한 협의로 동원지정된 예비군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병무청 소집통지서의 교부와 동원사단 소집부대 지휘서신을 연계하여 교부하는 방안이나 병무청의 소집통지시스템을 동원사단과 상호 공유하는 방안 등 지정된 예비군의 공동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정보공유는 병무행정 시스템을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제한요소가 많으므로 우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정보전송 범위 확대와 정보체계 시스템 보완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병무청에서 예비군에게 소집통지를 한 결과는 실시간 동원사단과 함께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거

나, 병무청의 모바일 앱을 동원전력사령부에서도 함께 접속하여 소집통지 진행 상황 조회 또는 동원사단 전파사항을 알림창(PUSH 기능 포함)으로 함께 게시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협업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협업체계 구축은 육군동원전력사령부에서 동원사단의 전시 병력동원 준비태세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병무청과 협업하여 제한사항 등을 해소함으로써 동원사단의 동원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체계

1) 전자 훈련통지 체계 통합 방안(병무청+국방부)

현재 예비군훈련 소집통지는 훈련소집 책임기관별 훈련소집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앱의 경우 병무청은 동원훈련 소집통지를 하며 기타 예비군훈련소집은 국방부(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예비군은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을 각각의 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훈련 일정과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있는데 소집통지 시스템을 예비군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일화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훈련소집통지를 단일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예비군에게 소집통지를 전달하고 예비군은 하나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훈련소집 관련 정보를 확인하며, 소집통지 책임기관도 단일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시스템 운용의 중복소요를 일부 감소시키고 예비군 편의도 증진할 수 있다. 다만, 단일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업무분장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접속방법과 선택메뉴를 구분해 준다면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기관의 시스템에 통합하느냐에 따라 시스템을 통합하는 기관의 업무는 증가할 수 있으나 시스템 운용개선과 예비군 민원 업무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집통지 시스템의 통합운용은 국가적인 차원과 예비군 편의를 우선 고려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시스템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으로 이원화된 훈련 소집통지 단일화 방안

동원훈련의 소집통지는 전적으로 병무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동원훈련 불참 인원 재입영훈련까지 병무청이 시행하고 있으나, 동미참훈련은 군에서 일반훈련으로 분류하여 소집통지를 하고 있다. 예비군 신분³⁴⁾을 고려한다면 동원예비군(전역 1~4년차



병·1~6년차 간부)은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훈련 중 하나를 받게 되는데 이 두 훈련의 소집통지와 훈련 방법은 차이가 있다. 동원훈련은 동원지정된 소집부대에 입영하여 2박 3일 동안 훈련을 시행하지만 동미참훈련은 거주지역 담당 예비군훈련부대로 4일간 출퇴근 방법으로 훈련을 한다. 통상 동미참훈련은 4일을 연속적으로 참가해야 하나 예비군이 특정일을 불참하는 경우 분할하여 참석할 수도 있으며, 휴일 훈련이나 전국단위 훈련장을 신청하여 훈련을 이수할 수 있다. 그리고 훈련 일정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인터넷으로 자율선택을 할 수 있어 동원훈련에 비해 예비군에게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동일 동원예비군 신분임에도 훈련방법과 편의제도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에 관한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예비군의 신분별 훈련소집통지 기관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동미참훈련 방법도 동원훈련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동미참훈련³⁵⁾이란 용어도 동원훈련의 한 종류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동원훈련의 한 종류로 “부대편성 동원훈련”과 “군별·병과별 동원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부대편성 동원훈련”은 현재의 동원훈련이며 “군별·병과별 동원훈련”은 현재의 동미참훈련에 해당된다. 이렇게 동원훈련 유형을 정립하고 훈련방법을 개선한다면 병역법의 규정 개정 소요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소집통지 책임기관도 병무청이 일원화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무청이 동미참훈련 대상자까지 소집통지를 담당한다면 업무량이 크게 확대되며, 훈련을 시행하는 군과 협업 소요도 대폭 증가하고 훈련 결과정리 등 후속조치 관련 행정 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미참훈련을 병무청 책임하에 소집통지를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집통지 업무량 과다와 불참자의 재소집통지 및 고발 등 행정처리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시행 전에 시험적용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군과 육군·해군의 간부는 동미참훈련을 2박 3일 입영훈련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들의 일부를 시험적으로 시행

34) 예비군 신분은 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나 국방부 예비전력 정책서 등에 반영하여 동원예비군과 지역예비군으로 분류하여 동원지정 등의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구분	예비군 편성	동원예비군	지역예비군
예비역 간부(예)	해 계급 정년까지(「군인사법」)	전역 후 6년까지	전역 후 7년차 이상
예비역 병(예)	전역 후 8년까지	전역 후 4년까지	전역 후 5-8년까지

35) 동미참훈련: 동원훈련 불참이나 동원미지정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하고 시험 결과분석을 통해 시행방법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개선은 군과의 업무분장과 협업 관련된 마찰요인 등 이견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국방부와 제도개선 방안을 사전에 논의와 기관별·계층별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무청 책임하에 동미참훈련 소집통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현재 적용대상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방안을 아래의 <표 3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34> 동미참훈련 단계별 시행방안

구분	시기	대상부대	비고
1 단계	2024년	군별 입영 동미참훈련 일부	1차 훈련까지 시행 여부 검토
2 단계	2025~2026	각 군 동미참훈련 대상 확대	2·3차 훈련 범위 결정
3 단계	2027년 이후	전군 동미참훈련 시행	제도개선 시행

병무청이 동미참훈련 소집통지를 통합할 경우, 병역법 규정에 동원훈련 소집통지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표 35> 동미참훈련 소집통지 통합 관련 법령개정 방안

구분	현행 규정	개정 방안	비고
병역법	제49조 ①항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에 대하여 실시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 에 대하여 실시	대상자 확대
	제50조 ①항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 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대상자 조정
국방부 훈령	제10조 동미참훈련, ~「 예비군법 」제6조의 2에 따른 훈련소집통지서로 소집한다.	동미참훈련은 「 병역법 」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을 소집 할 수 있다.	소집 기관 변경

동미참훈련의 제도개선은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현 동미참훈련 소집통지 방식이 예비군의 편의를 고려하고 범법자 감소를 위해 소집통지 2차 훈련까



지 무단불참해도 고발하지 않았는데 동원훈련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소집통지 규정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으로 이해할 때 예비군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미참훈련 불참자의 1·2·3차 훈련 소요에 대한 예측이 제한됨으로써 훈련 불참자 보충훈련 준비 및 실시 등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통상 동미참훈련 소집통지의 소요는 후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당해년도에 훈련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1·2·3차 훈련까지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육군의 경우 예비군훈련대와 동원훈련장 등 훈련지원 분야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병무청은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하므로 국방부와 협력하여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제도개선에 대해 국방부와 협업하여 관련 규정으로 검토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시험적용을 하면서 타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추진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

2.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업무체계 및 수행기관 통합·조정 필요성

가. 수행기관 통합·조정 시 업무량에 따른 소요 인력·예산 판단 및 획득방안

1) 예비군 편성카드 항목(table) 보완

예비군 편성카드 항목은 병무청과 군이 협조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각 군의 요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각 군의 요청과 국방부의 검토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병무청과 협업하여 예비군 편성카드 자료 테이블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 관련 자료를 병무청에 전송하여 연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비군 편성카드 항목 추가에 대한 기관(부서별) 조치 및 협조사항은 아래의 <표 3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6> 예비군 편성카드 항목 조치방안

구분	내용	체계	비고
병무청	편성카드 추가 및 전송항목 반영	병무행정체계	항목 추가
국방부(동원)	편성카드 추가 소요 협조 및 반영	국방동원정보체계	자료 보완
국방부(인사)	추가항목: 현역 복무자료(DB) 보완	국방인사정보체계	DB 보완

예비군 편성카드에 현역복무 기록자료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 소요는 없으며, 기관별 정보체계 유지보수 예산으로 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고, 기관별 체계 연동을 포함한 협업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2) 현역 복무부대 단위 예비군 편성 방안(시·군·구 이상)

지역 및 직장 단위 예비군 조직편성에 추가하여 현역 복무부대 단위 예비군 조직편성을 시·군·구 이상 행정구역별로 조직하는 방안이다. 현역 복무부대 단위 편성은 최소 중대급까지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신분별로 동원지정과 미지정으로 분류하고, 전역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편성해야 한다. 이는 예비군을 현역 시 복무부대 단위로 편성하여 관리함으로써 현역 복무의 경력과 전투력 요소를 예비군 운용과 연계하여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전시 우발상황 등으로 긴급 동원소요가 발생할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수임군부대별 지역방위작전 간 예비군부대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긴급동원의 경우, 현역 시 복무부대와 주특기 및 직책을 참고하여 예비군 지휘관이 백지 소집통지서³⁶⁾ 교부 대상자 선별 및 적시적인 통지로 최적의 자원을 동원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후방지역에서 예비군 운용 시 현역 복무기간 동안 복무부대 단위 예비군을 중요시설 및 핵심노드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경우 효과적인 전투력 발휘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역 복무부대 단위 건제를 유지하여 예비군을 조직편성하고 자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비군 편성 방법 보완을 위한 업무협조 소요는 아래의 <표 37>과 같다.

<표 37> 현역 복무부대 예비군 편성 조치 소요

구분	내용	체계	비고
병무청	현역 복무부대 부대코드 체계 공유	병무행정체계	국동체 전송
국방부(동원)	예비군 편성카드 현역 복무부대 반영	국방동원정보체계	카드 보완
국방부(인사)	전역자료 DB 추가 및 보완(기록자료)	국방인사정보체계	자료 반영

36) 전시를 대비하여 병무청에서 예비군 중대에 백지소집통지서를 사전에 배부하여 긴급동원 또는 추가 병력동원 소요 발생 시 예비군에게 소집통지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백지 동원소집통지서이다.



현역 복무부대 단위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를 위한 인력이나 신규 예산 소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군 편성카드에 현역 복무부대 자료(부대코드, 복무경력 자료 포함)를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예비군부대까지 전송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예비군부대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예비군의 현역 복무부대를 검색하여 조직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 일부를 보완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예비군 조직편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현역 복무기록 자료를 보완하여 병무청에 전송하고, 병무청은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수신된 현역 복무기록 자료를 국방동원정보체계와 연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병무청과 국방부가 현역복무 기록자료 공유 및 편성카드 보완 협의와 정보체계 유지 보수예산으로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시행 가능할 것이다. 다만, 현역 복무기간 각종 자료가 예비군의 개인신상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군인사법」과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자료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예비군 보류자 처리

가) 예비군 보류자 처리 절차 개선

예비군 보류자 신청 및 처리는 인터넷으로 업무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보류대상 예비군이 예비군홈페이지에서 보류신청을 하면, 소속 예비군 중대장이 인증시스템을 적용하여 신원 검증과 보류 여부를 검토하여 수임군부대에 건의하고, 수임군부대에서 최종 확인 및 승인하여 보류자로 확정하며, 이를 병무청으로 전송하는 절차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보류자로 확정된 예비군은 국방동원정보체계에 보류사항을 입력하고 관련 기관에 전송하여 자동으로 처리되어 행정 소요 감소와 시간 절약, 적시적인 업무처리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비군 보류자의 업무처리 개선을 위해서는 인터넷(예비군홈페이지)과 국가정보통신망(병무청망) 간의 실시간 전산자료 전송 및 연동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예비군의 신분 확인과 관련 서류의 검증을 위한 인증시스템을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나) 예비군 보류제도 정비 추진

예비군 보류제도는 예비군 복무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예비군의 정예자원 활용이 제한되어 병력 동원지정 등 동원태세 확립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조기에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병무청의 공동 노력이 요구되며,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대학생예비군을 포함한 보류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노블레스오블리주 차원에서 학생예비군과 판·검사, 교사, 경호원 등 모든 계층에 대한 예비군훈련 보류제도를 폐지하여 예비군훈련 의무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대학생과 교사들의 경우 보류 해제로 수업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외국처럼 방학 기간에 동원훈련을 계획하여 시행하거나 학기 중 훈련이 가능하므로 훈련 시기 및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예비군 보류제도가 폐지된다면 예비군훈련 대상이 확대되므로 훈련지원을 위한 수송·급식·보상비 등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나 크게 제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예비군의 훈련 의무 형평성과 예비군 복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조기에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는 병무청과 국방부가 훈련유형별 소관 분야에 대해 각각 소집통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비군이 예비군훈련 유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분하지 못할 경우, 어느 기관에 소집통지 등의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훈련 연기 등 행정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데, 일원화 방안은 현 병무청과 국방부의 2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스템만 통합 운용하는 것으로 소집통지 업무는 기존대로 병무청과 국방부가 각각 시행하는 것이며, 시스템 통합 운용방안은 다음의 [그림 26]과 같이 제시하였다.

소집통지 시스템 통합은 인터넷 소집통지체계(모바일앱 포함)를 통합하는 것이며 우편이나 대면 전달통지는 현행대로 해당 기관별로 시행하게 된다. 즉 소집통지시스템 외에는 기존 업무분장을 적용하여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다. 소집통지시스템을 국

방부 또는 병무청 어느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야 하는데, 이는 기관별 협업을 통해 예비군의 접근 용이성과 인력 및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면 될 것이다. 소집통지 시스템 통합을 통해 일부 기관은 인력이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나 통합된 기관은 시스템 유지예산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

[그림 26] 예비군훈련소집통지 시스템 통합방안



출처: 연구자 작성

다음은 예비군을 직접 접촉하여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는 대면 통지에 대한 사항이다. 예비군이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소집통지를 전달할 수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직접 접촉하여 소집통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병무청의 경우 통지서 전달 인력이 제한되고 직접 통지서를 전달과정에서 다양한 마찰요인 발생 등이 예상된다. 현재 예비군 중대는 매년 상당수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고 있으므로 병무청의 소집통지서 대면 통지를 예비군부대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비군 중대는 읍·면·동이나 직장 내에 위치하여 예비군과 직접 접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매년 직접 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무 통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직접 전달 소집통지업무를 예비군부대로 통합하게 되면 병무청에서는 업무 절감 및 소집통지에 대한 부담을 감소할 수 있으나 예비군 중대는 일부 업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예비군 지휘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되, 통지서 전달 이후 훈련 불참에 대한 고발처리 등 세세한 부분까지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정하는 등 업무분장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5) 병무청↔국방부 정보체계 연계

병무청과 국방부 간의 정보체계는 예비군 편성단계에서부터 신상이동자 정리, 보류자 처리, 예비군 개인정보 최신화 등 지속적인 자료 송수신을 통해 업무 연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 상이한 통신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중계 서버 운용, 방역시스템 가동, 전산망 개폐장치 등 여러 가지 제한요소로 인해 실시간

체계 연동에 제한을 받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상호 시스템 연동 가능성을 검토하여 예비군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토록 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AI 또는 RPA를 활용하여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관별 업무 처리의 신속성·정확성·신뢰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체계로 개선함으로써 상시 예비군 업무의 최신화 및 적시적 행정처리로 예비군의 병력동원태세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예비군 정보자료의 송수신 과정에서 비밀문서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외부노출이나 해킹방지를 위해 3중 보안(방역)체계를 거치고 있다. 보안(방역)체계의 강화는 보안조치 측면에서 필요하나 데이터 처리 및 전송속도 지연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일반문서와 비밀문서의 송수신 절차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밀자료는 3중 보안(방역)체계를 거치되 일반문서는 최소의 보안(방역)단계를 거치도록 단순화하여 전송속도 향상과 신속한 자료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송수신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병무청과 국방부는 송수신 절차개선에 필요한 소요를 도출하고, 정보(문서)유형별 소통망을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보완하여 업무처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방부와 병무청의 현 송·수신시스템의 진단과 평가, 보강 소요 예산을 산출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6) 타 기관 정보공유 협업체계 검토

육군의 동원 위주 부대인 동원사단의 경우 예비군 동원지정 결과가 부대 전투력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평시 지방병무청과 지정 관련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유 및 협업은 동원사단에서 병무청 정보체계에 직접 접속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동원지정을 협조할 수 있겠으나 병무청 시스템 운용에 제한을 줄 수 있으므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동원사단에 관한 동원지정 정보를 별도로 추출하여 공유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병무청에서 동원사단 병력동원 지정을 확정하기 전에 초안을 국방동원정보체계로 동원사단에 전송하고, 동원사단은 지정결과(초안)를 분석하여 보완 소요를 병무청에 요구하며, 병무청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병력동원 지정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방법으로 정보공유 및 협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권역화 동원제도를 적용하는 동원사단에 최상의 예비군자원을 지정하고 신상변동자도 최대한 계속 보직을 유지토록 하



여 전력 유지를 보장하는 조치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몇 개의 부대를 시험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상부대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시험추진방안은 아래의 <표 38>에 제시하였다.

위의 방법으로 예비군 병력동원 지정업무의 협업을 추진하면 동원사단은 [그림 25]에서 제시한 이스라엘의 정규여단 출신 예비군을 예비군여단 예하 부대와 연계하여 동원지정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동원지정이 가능할 것이다. 동원사단은 군단 축선별 전방사단 상비부대와 동원사단의 예하 부대를 건제에 맞게 동원지정함으로써 현역 복무부대에서 훈련되고 결속된 전투력을 동원사단에서 이어받아 운용함으로써 전시 작전계획 수행능력이 현재보다 향상될 수 있다. 다만 부대별 1권역 내 예비군자원의 충족 가능성과 예비군 복무가 현역 복무 연장으로 연결된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예비군 발생 등의 일부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표 38> 동원사단 병력동원 지정업무 협업 추진방안

구분	주요 내용
대상	• 육군동원전력사 예하 동원사단(5)별 보·포병 2개 대대(10), 수색대대 각 1개(5), 호송대대(1) * 총 16개 대대
협업기관	• 병무청, 1권역지역의 지방병무청(4) ⇔ 육군동원전력사령부(5개 동원사단)
협업내용	• 병력동원 지정작업 협업을 통해 “군 요구 = 병무청 지원” 최적화 추진을 위한 동원지정과정에서 상호 정보공유 및 보완을 통해 최적 자원 동원지정 보장
기대효과	• 동원사단 정예화된 병력동원 지정 보장, 병무청 적극 업무수행 • 동원사단 동원지정결과 신뢰 제고, 병무청 업무지원사항 이해(공감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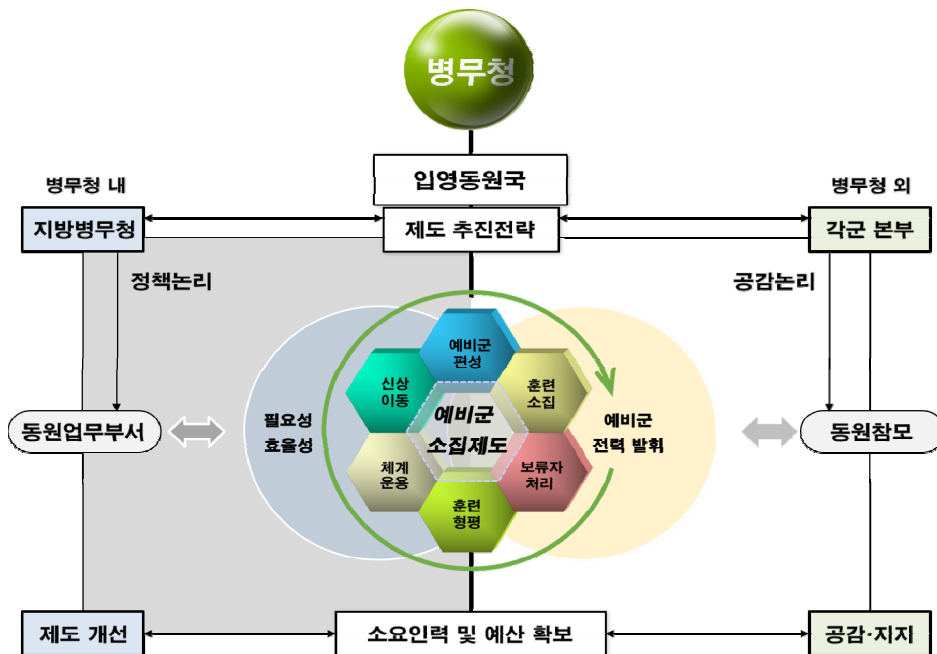
그러나 예비군 복무기간(4년)이 길지 않으며, 단기간 동원훈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비군의 전시 임무 숙달을 위한 훈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제한사항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비군의 동원지정은 동원응소의 신속성보다는 동원 후 임무수행 능력에 주안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의 경우 동원훈련 기간과 예비군 복무기간이 짧아 전시 교육훈련과 지휘체계 확립(동화교육 등) 등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별도의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지 않으며 제도만 개선한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나. 관계기관 대응 방안 연구 및 단계별 추진전략 제시

1) 관계기관 대응 체계 정립

예비군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소집통지 일원화, 예비군 소집통지 시스템 통합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병무청을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과 협업 대응 체계를 아래의 [그림 27]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27] 관계기관 대응 체계도



출처: 연구자 작성

병무청은 입영동원국(동원관리과)에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병무청 내·외에 적극적인 정책설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의 동원부서는 제도개선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여 소요 인력과 예산을 판단하고 본청에 보고하며 본청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중·장기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병무청 외부인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는 토의나 협조 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업하여 병무청 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홍보하고 사업수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비군훈련 소집제도 개선과 이와 관련된 예비



군 편성으로부터 훈련소집, 보류자 처리, 신상이동 정리, 기관별 체계 운영의 보완, 훈련제도 일원화 등의 정책추진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적시적 사업 시행을 통해 예비군의 실질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방혁신 4.0」의 시행 보장을 위한 병무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알려야 할 것이다.

2) 병무청 내·외 대응 중점 및 추진 우선순위 판단

병무청 내·외의 대응 중점 및 추진 우선순위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와 관련된 7개 요소에 대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아래의 <표 39>에 제시한 내용과 같이 전반적인 병무청 내외의 기관에 대한 주요 추진 방향과 중점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39> 제도개선의 대응 중점 및 우선순위 판단(예)

구분	병무청·지방병무청 등 병무청 내 활동	국방부·국회·각 군 본부 등 병무청 외 활동
논리	제도개선 필요성 설득	공감 및 지지, 적극적 협업 지원
중점	당위성(직접 접근)	필요성 및 중요성(간접 접근)
방법	주요 직위자 및 업무계선별 활동	전문가 활용 언론, 세미나 홍보
우선 순위	① 예비군 편성카드 자료항목 추가 ② 신상이동 정리(자료 제공) ③ 보류자 처리(동원자원 확보) ④ 예비군 조직편성 추가(현역복무 단위) ⑤ 예비군훈련 통지절차 통합 ⑥ 병무청-군간 자료 연계 및 연동 ⑦ 타기관 정보자료 자원 검토	① 예비군 편성카드 보완요구(현역복무 자료) ② 신상이동 정리(연동) ③ 보류자 혜택 폐지 추진(훈령개정) ④ 예비군 조직편성 개선(현역복무 단위) ⑤ 예비군훈련 통지업무 조정 ⑥ 병무청-군간 자료 연계 보장 ⑦ 병무청 정보자료 공유협조(동원지정)
비고	현행 제도분석, 개선에 따른 효과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사업개선 및 발전 추진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에 기여토록 병무청의 적극적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추진전략

추진전략은 2023년 이후부터 잠정적으로 2025년까지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주요 중점 및 활동을 위한 세부 사항을 설정하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40〉 단계별 추진 전략(예)

구 분	주요 활동 및 추진 사항	비 고
1단계 (2023년)	① 예비군 소집제도 개선 연구(~10월) ② 제도개선 주요 사업 선정(~12월):제도개선 공감대 형성 (병무청 외, 언론, 국회) ③ 소요 예산 판단 및 중기예산 편성기획(~12월)	병무청 관련부처
2단계 (2024년)	① 소집제도 구체화 수립(~5월) ② 제도 시험적용(2024년) ③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7월) * 관련부처 설득 및 홍보 병행 ④ 소요 예산 판단 및 2024년 예산요구안 작성(~12월)	병무청 관련부처 협조 병무청
3단계 (2025년~)	① 시험적용(2024년)에 대한 분석결과 반영, 계획의 조정 및 보완 ② 관련기관 의견수렴, 제도 보완 * 시험결과 자료공유 및 보완요소 수렴 ③ 제도 시행(2025년 이후)	병무청 관련부처 협조

3. 소결론

병무청과 군 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은 예비군 업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종합 정리하였다. 첫째, 예비군 신규 편성단계에서 국방인사정보체계-병무청체계-국방동원정보체계 간 자료 송·수신을 상호 연동체계로 구축하여 실시간 예비군 편성과 자원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둘째, 예비군 조직편성이 지역과 직장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데 현역 복무부대 단위의 예비군 편성을 추가하여 평시 동원지정과 지역방위작전, 전시 긴급동원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셋째, 예비군 편성카드 항목에 현역 복무경력에 해당하는 전투기술 수준(사격, 체력, 주특기, 기타 군 자격증 등)을 반영하여 예비군 개인별 특성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는 예하 부대 대부분이 예비군을 동원해야 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예비군자원의 수준이 부대 전투력 수준과 직결되므로 우수한 예비군자원을 동원지정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현역 복무부대의 건제를 예비군부대로 연계하여 편성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개선하되, 현 권역화동원지정제도를 최대한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체계는 병무청과 국방부가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소집통지 업무분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직접 전달하는 소집통지는 병무청의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예비군부대에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비군 보류제도는 국방부와 병무청의 공동 노력으로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 병역자원이 줄어들면서 예비군자원도 감소 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정예자원인 학생예비군을 정상적인 동원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류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관별 정보체계 연동과 자료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업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동원사단의 예비군 병력동원 지정의 경우 병무청의 동원지정 결과자료를 상호 협업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협업을 위한 정보체계 운영 방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 시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국방부와 협력하여 국회와 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정책적 추진이 가능하고, 국방부와 각 군에서도 병무청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병무청에서 실행 가능한 추진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병무청 내부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고 비전과 목표, 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정립하고, 이와 더불어 지방병무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과 필요한 지원(소요 인력과 예산 등)을 제공하기 위한 세부 계획뿐만 아니라, 병무청 외부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 기관(국방부와 군)과 국회 및 행정부처(기재부와 행안부 등)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협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동원예비군 훈련실태 조사· 분석 및 형평성 제고 방안

1. 인식도 조사를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설문 시행
2. 인식도 조사를 위한 설문 결과 분석



VI 동원예비군 훈련실태 조사·분석 및 형평성 제고 방안

동원예비군훈련실태 조사·분석 및 예비군훈련 간 훈련 방법 및 시간 차등에 대한 형평성 등 인식도 조사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주요 요소들과 이들 요소 간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및 예비군훈련 관련 설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예비군훈련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대상은 예비군(병·간부) 및 동원업무를 담당하는 육군 예비군지휘관 및 현역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및 예비군훈련 간 합리적 훈련방식과 시간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여 최소 3개의 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의 장·단점 비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병무청에 근무하는 동원 및 소집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일 설문을 통해 인식도를 함께 조사하고 이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병무청 구성원들에 대한 인식도를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예비군훈련에 관한 법령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하고 있는 법령은 「병역법」 제49~52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 「예비군법」 제6조(훈련)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으며 하부 규정은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훈련대상/시간)·제13조(동원예비군 훈련)에 명시된 내용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적용하고 있는 동원예비군의 대상별(병 1~4년차 및 간부 1~6년차) 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 보류자훈련의 훈련 시간 및 방법(예비역 병 5~6년차, 기본훈련·작계훈련 제외)에 대한 훈련장소, 주요 훈련내용과 방법, 훈련 소집통지 기관 등에 관하여 현재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 내용을 다음의 <표 41>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동원지정 대상은 소집부대 계급·병과(특기)별 전시 소요에 맞도록 평시 동원예비군 지정하되, 장교 및 준·부사관은 전역 후 1~6년차, 병은 전역 후 1~4년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원부족시에는 연차를 확대하여 지정하고 있다. 동원지정 기관은 지방병무청장이 소집부대의 소요를 반영하고 수임군부대의 지역배정서를 참고하여 전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예비군 보류자훈련(방침 일부)의 경우 훈련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훈련 일부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국방부 「예비군 조직편성

및 운영 훈령」(별표#24), 방침 일부 보류(학생예비군 등)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훈련시간은 연 8시간(1일, 기본훈련) 훈련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간부 및 병(동원지정·미지정)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위한 주요 의제는 첫째,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방법 및 소집통지 기관이 병무청과 국방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훈련방법은 동원훈련은 2박 3일간 소집부대에 입영하여 훈련하고, 동미참훈련은 4일간 수임군부대에 출·퇴근하면서 훈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한 소집통지업무는 동원훈련의 경우 「병역법」에 근거하여 병무청에서 담당하고, 동미참훈련은 「예비군법」에 의해 수임군부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실상 동일 동원예비군임에도 불구하고 훈련방법과 소집통지가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둘째, 예비군훈련 보류자(방침 일부)에 대한 훈련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이다. 예비군 중 25% 이상이 훈련보류자로 포함되어 분류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학생예비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비군훈련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상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동원훈련 시 가용한 예비군의 부족 현상이 반복적으로 초래되는 등 개선에 관한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표 41〉 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 보류자훈련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보류자훈련
병	1~4년 차	동원 지정자	2박 3일/년		1일(8H)/년
		동원미지정자		4일(32H)/년	
간 부	1~6년 차	동원지정자	2박 3일/년		
		동원미지정자		2박 3일	
훈련 장소			동원훈련장 또는 소집부대 주둔지	수임군부대 훈련장	수임군부대 훈련장
주요 훈련			개인 및 작계훈련	개인 및 병과훈련	기본훈련
훈련 소집통지			병무청	수임군부대	수임군부대
비고			입영훈련	출퇴근·입영훈련	출퇴근훈련

이러한 현실적 제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및 정치권 그리고 국방부와 군에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다양한 정책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향 및 여론에 의해 사실상 개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상존해온 것이다. 현재 지

속되고 있는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초래된 미래 가용 병역자원의 급감은 국방개혁을 통해 상비병력을 대규모로 감축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미래 다양하고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총체전력을 구축해야 함에 따라 예비전력 정예화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1. 인식도 조사를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설문 시행

동원예비군훈련에 관한 설문조사는 예비군훈련과 관련한 주요 기관(부대)을 대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주요 의제와 내용을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첫째, 병무청 및 예비군업무 관계관을 대상으로 ①동미참훈련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②예비군훈련 보류자 훈련제도에 관한 사항 ③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스템 통합에 관한 사항 ④동원사단 동원지정방안에 관한 사항 ⑤예비군 편성카드 자료(table) 테이블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고, 둘째, 예비군을 대상으로 ①예비군훈련 동미참훈련의 훈련 시간과 방법에 관한 사항 ②예비군훈련 보류자 훈련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설문을 구성하고 참여자가 무기명으로 해당 항목의 내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 내용 및 항목의 선정은 예비군 소집업무와 관련하여 「예비군법」과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의거 예비군훈련 대상자에 따라서 다른 유형의 훈련 시간과 장소,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훈련에 대한 형평성에 인식도를 조사하면서 현재 병무청과 국방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예비군훈련 소집업무에 대하여 소집통지기관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효과적·효율적으로 소집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과 방법에 대하여 설문 참여자의 의견을 선택할 수 있도록 5개 문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문항별 추가 의견을 묻는 보충 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설문 내용과 문항을 구성하여 문항별 선택한 이유를 선택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선택 문항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군(병·간부)의 경우에는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보류자훈련에 대한 훈련 시간과 장소, 방법 등에 관한 2개 문항을 중심으로 설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표 42> 설문 대상자 현황(종합)

구 분	대상자(명)	비고
계(명)	871	
병무청	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병무청 및 지방병무청 • 7급 이상 직위
군 동원업무 관계관	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군지휘관 • 동원전력사 및 50·52지역방위사단 현역 간부
예비군(병·간부)	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52지역방위사단 • 예비군(병) 487명 • 예비군(간부) 4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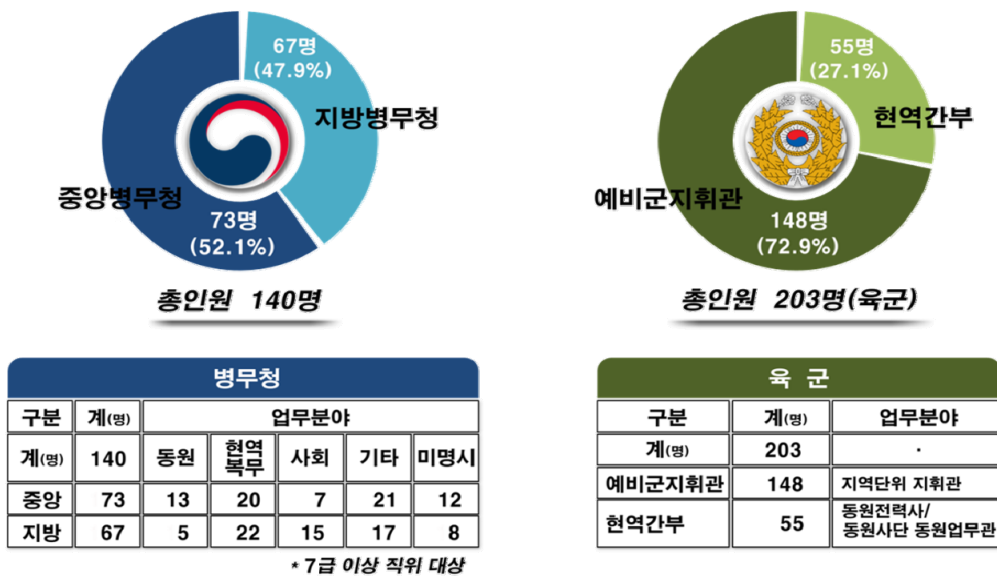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871명이며, 설문조사 기간과 방법은 2022년 8~9월 기간 중 병무청(중앙 및 지방)을 포함하여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직접 설문서를 배부하여 받았으며, 군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지역의 예비군지휘관 및 해당 부대의 동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역 간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예비군은 제50지역방위사단과 제52지역방위사단 2개 부대를 선정하여 해당 부대의 동원훈련 기간 중 현장 방문을 통해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병무청, 육군 예비군지휘관 및 동원업무 현역 간부

병무청은 중앙병무청과 지방병무청에 근무하고 있는 7급 이상의 직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140명 중 동원업무 대상자는 18명, 현역복무 업무 대상자 42명, 사회복무 업무 대상자 22명, 기타 38명 그리고 업무 분야를 미명시한 대상자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대상자는 실제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관계관으로서 수행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상자는 관련 업무수행체계 상 중앙병무청 및 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하면서 국방부 및 군과의 상호 업무협조와 관련 수행업무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연관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의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통해서 해당 직책에서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군 동원업무 관계관은 육군 예비군지휘관 및 현역 간부로서 총 203명이며, 현재 동원업무를 담당하고 현 부대의 예비군지휘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역 간부는 동원전력사령부와 제50·52지역방위사단에서 동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참모부서 및 관련 실무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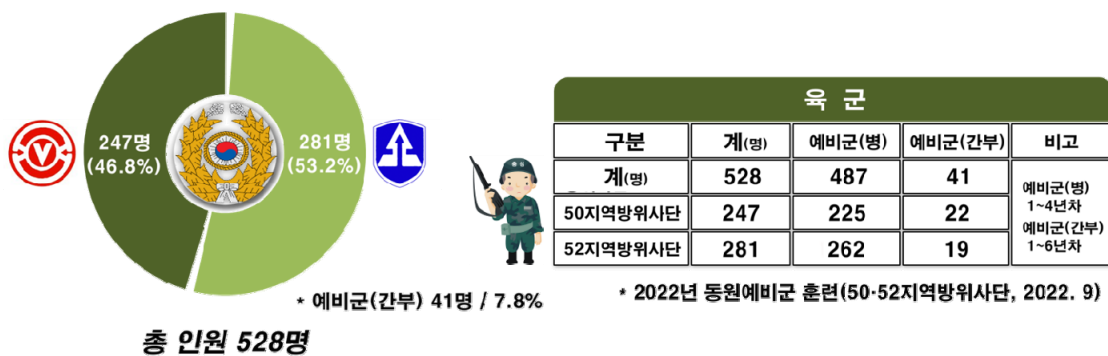
[그림 28] 병무청 및 육군 동원업무관계관의 설문 대상자 현황



나. 예비군(병·간부)

예비군(병·간부)은 지역적 특성을 달리하는 부대를 선정하여 해당 부대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2개의 부대(제50지역방위사단과 제52지역방위사단)를 선정하였다.

[그림 29] 예비군(병·간부)의 설문 대상자 현황



예비군 병은 2개 사단에서 총 487명, 예비군 간부는 4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2022년도 동원훈련이 1일 훈련으로 종료된다는 점에서 설문 대상자를 훈련이 지속되는 기간 중 훈련소집 일자가 다른 응소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인식도 조사를 위한 설문 결과 분석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분포 비율은 일반적인 산출적 통계치로 정리하여 제시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갖는 분포 비율이 90% 이상이면 절대 강세, 80% 이상은 강세, 70% 이상은 우세, 60% 이상은 우위, 50% 수준은 대등한 인식도 수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설문조사 통계에 의한 분포 비율 값을 해석할 경우, 80~90% 이상의 분포 비율을 갖는 대부분의 설문 참여자가 동일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의제를 정책화하여 반영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유의미한 값으로 해석한다. 60~70% 이상의 수준일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책의제로서 공식적인 논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해석한다. 다만, 상대적인 분포도에서 차이가 갖는 만큼 해당 의제를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식을 유지하는 설문 참여자의 대상에 대한 제한사항 및 반발에 대한 쟁점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정책의제로서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설득력과 공감대를 마련하면서 추진할 수 있다.

설문 결과로서 제시된 상대적 분포 비율은 설문 참여자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해당 설문과 참여자 표본에 대한 인식도를 판단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한다.

가. 병무청 및 육군 동원업무 관계관 설문결과 분석

병무청 및 육군 동원업무 관계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5개의 큰 문항과 문항별 1~3개의 하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설문 문항은 “예비군훈련 동미참훈련의 훈련 시간과 방법”에 관한 의견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 대상자와 동일한 예비군임에



도 동원을 미지정하고, 동원훈련 불참(연기 등) 사유로 동원훈련과 시간 및 방법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훈련장소는 예비군 주민등록지역 수임군부대(자원관리부대) 훈련장, 접근성이 용이하며, 전국단위 예비군훈련장을 선택하여 훈련이 가능하다. 둘째, 훈련방법은 출퇴근 훈련(4일), 일일 또는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훈련 참가가 가능하다. 셋째, 훈련 신청은 인터넷(예비군홈페이지)으로 훈련 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휴일훈련 신청 가능)하다. 넷째, 벌칙 규정은 1·2차 훈련 무단불참 시도 미고발(동원훈련은 고발됨)된다. 다섯째, 훈련내용은 병과 부대훈련으로 전방 동원훈련에 비해 훈련강도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원훈련에 비해 동미참훈련은 동일한 예비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복무 의무에 관하여 부과되는 동원훈련에 비교하여 예비군훈련의 시간과 장소, 방법에서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어 형평성에 관한 많은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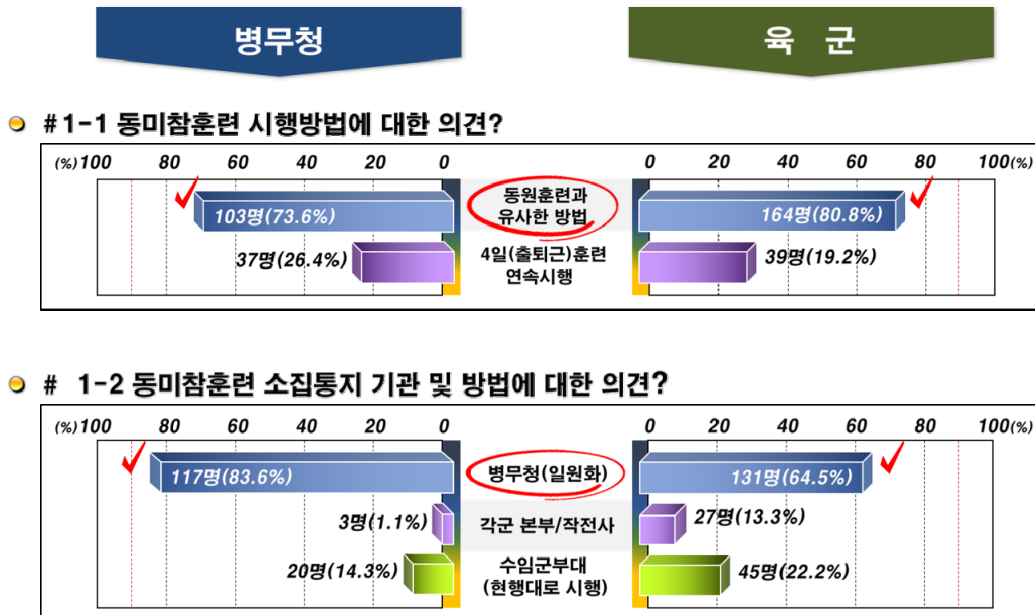
현재 적용하고 있는 동미참훈련의 방법과 시간을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의 방안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이들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참여자의 상대적 인식도 분포 비율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방안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안을 대체할 수 있는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 가지 방안의 주요 특징을 훈련 시간과 장소, 방법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43>과 같다.

<표 43> 동미참훈련 개선방안 비교

구분	훈련 시간, 장소, 방법	특징
1안	① 2박 3일 숙영훈련(지역 동원훈련장) ② 병과별 편성, 병과부대(학교) 통제하 훈련 실시 ※ 장기적으로 병과 동원훈련장 설치, 활용	형평성 유지 훈련통제부대의 훈련 준비 소요 부담
2안	① 2박 3일 숙영훈련(전방 동원훈련장) ② 전방 병과부대 동원훈련 통제 ※ 전방부대 임무수행 제한 우려	형평성 유지 훈련통제부대의 훈련 준비 소요 부담
3안	① 4일간 출퇴근 훈련(지역 예비군훈련장) ② 4일 연속 훈련 시 훈련참가 인정(기준과 차이) ※ 병과별 편성, 병과부대(학교) 직접 훈련통제	형평성 제한 수임군부대 부담 과다

동미참훈련의 세 가지 개선방안에 대한 병무청 및 육군 예비역지휘관과 현역 간부가 응답한 설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30] 동미참훈련에 대한 병무청 및 육군 예비역지휘관과 현역 간부의 설문 결과



앞에서 나타난 설문 결과에서 좌측은 병무청 참여자의 결과 값이며 우측은 육군 참여자의 결과 값을 나타내고 있다. 설문 결과에서 제시된 분포 비율의 값은 두 기관의 인식도에 대한 상대적인 분포 비율을 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함께 제시하였다. 병무청 참여자는 동미참훈련 시행방법에 대하여 동원훈련과 유사한 방법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분포는 총 140명 중 103명으로 73.6%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제시한 세 가지의 방안 중 가장 우세한 경향을 분포도를 갖는 인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육군의 경우에는 총 203명 중 164명(80.8%)이 동원훈련과 유사한 방법으로 훈련을 해야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설문 분포 비율 값을 적용할 때 강제로 분석되며, 육군 예비역지휘관 및 현역 간부의 대부분이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병무청 설문 결과와도 동일한 인식도의 분포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무청 및 육군 동원업무 관계관 대부분의 설문 참여자는 현재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동미참훈련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동원분야에서 근무하는 두 기관의 동미참훈련 방법에 대한 인식도는 새로운 방법과 관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동미참훈련과 관련한 두 번째 문항은 동미참훈련에 대한 소집통지 기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이며 현재 동원훈련은 병무청에서, 동미참훈련은 국방부(군)에서 소



집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소집통지 업무를 동일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을 묻는 설문 결과는 병무청 참여자는 117명(83.6%)이 병무청으로 소집통지 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육군 참여자는 131명(64.5%)이 병무청을 소집통지 기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우위의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육군의 예비군지휘관 및 동원업무 현역 간부들의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우위 분포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최근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군구조 개편에 의거 육군 상비병력의 대규모 감축으로 인한 부대의 해체 및 통·폐합, 조직의 축소 및 관련 업무 담당관의 감소,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상근예비역제도의 폐지 등 부대 및 조직의 개편 등으로 인해 소집통지 및 대면교부 업무 등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설문은 “보류자훈련 제도”에 관한 항목이다. 예비군 보류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보류제도 개선 시 훈련 시기 및 방법 그리고 보류자훈련 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이유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보류자훈련 개선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의 주요 훈련 시간, 장소, 방법과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44>와 같다.

<표 44> 보류자훈련 개선방안 비교

구 분	훈련 시간, 장소, 방법	특징
1안	① 1일 동원훈련 참가 ② 소집부대 증편, 작계시행훈련 필수과제 훈련 ※ 장기적으로 동원훈련 시간 반영 추진	전시 동원태세 유지 여건 보장
2안	① 1일 동원훈련장 훈련 ② 소집부대 간부 통제 하에 작계 필수과목 교육 ※ 동원지정 부대 임무 숙지 가능	최소의 전시 임무 숙지 효과 달성
3안	① 1일간 지역 예비군훈련장 훈련 ② 예비군훈련대 통제 하 병기본 필수 훈련 ※ 전시 임무수행 절차 숙지 미흡	수입군부대 부담 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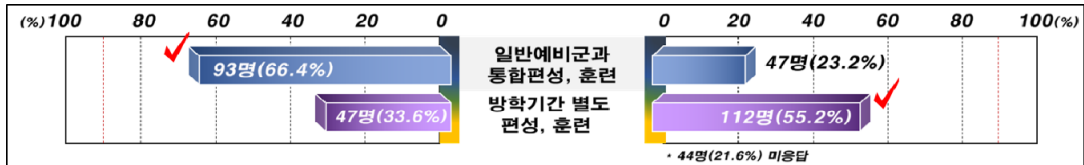
보류자훈련의 세 가지 개선방안에 대한 병무청 및 육군 예비역지휘관과 현역 간부가 응답한 설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31] 보류제도 시행에 대한 병무청 및 육군 예비역지휘관과 현역 간부의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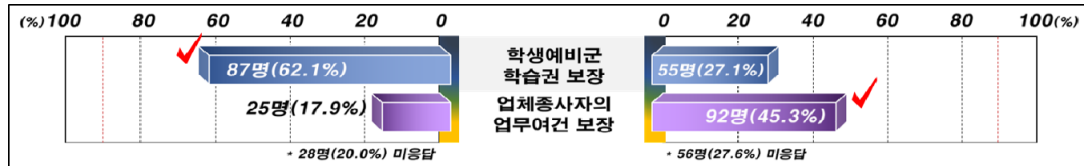
● # 2-1 예비군 보류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



● # 2-2 보류제도 개선시, 훈련시기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 2-3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폐지 반대 이유?



병무청 참여자 140명 중 91명(65%)이 보류제도의 폐지를 선택하였으며, 보류자 훈련시간 및 면제를 축소하고 훈련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자는 35명(25%)이 선택하여 현재 방안이 아닌 새로운 개선방안을 선택한 참여자가 90%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은 보류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동일한 인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육군 예비군지휘관 및 현역 간부는 203명 중 135명(66.5%)이 선택하여 병무청 참여자에 비해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번째 개선방안을 선택한 응답자는 31명(15.3%)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참여자가 91.8%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보류제도 개선 시, 훈련 시기와 방법은 병무청 참여자가 일반예비군과 통합편성하여 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93명(66.4%)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군은 방학기간에 별도로 편성하여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자가 112명(55.2%) 수준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2개의 선택 방안에서 대등한 수준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보류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병무청 참여자 중 87명(62.1%)이 학생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항목을 선택하였으며, 육군 동원업무 관계관은 업체종사자의 업무여건 보장 측면에서 참여자 중 92명(45.3%)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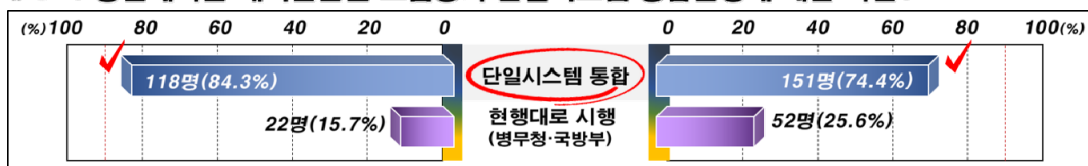
선택하였다. 두 기관의 참여자 중 미응답자는 약 20~2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보류제도 폐지를 선택한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미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설문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스템 통합”에 관한 항목으로써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단일시스템 통합운영에 대한 의견으로 소집통지 단일시스템 통합기관에 대한 항목과 대면통지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방안은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으로 구분되어 동원훈련은 병무청, 동미참훈련은 국방부(군)에서 소집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일 예비군 입장에서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소집통지 기관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 소집통지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군의 동원훈련은 병무청에서 소집통지를 주임무로 수행하며 군은 소집된 예비군을 교육·훈련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원화된 체계하에서 예비군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병무청과 국방부의 주요 임무이며 이에 관련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왔다.

네 번째 설문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단일시스템 통합운영”에 대한 병무청 및 육군 예비역지휘관과 현역 간부가 응답한 설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32]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단일시스템 통합운영에 대한
병무청 및 육군 예비역지휘관과 현역 간부의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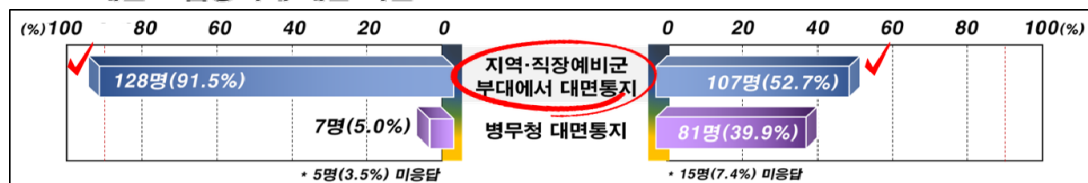
● # 3-1 동원예비군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단일시스템 통합운영에 대한 의견?



● # 3-2 소집통지 단일시스템 통합기관에 대한 의견?



● # 3-3 대면 소집통지에 대한 의견?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단일시스템 통합운영에 관한 설문은 단일시스템으로 통합이 필요한가에 대한 항목이며 추가 내용으로 하나는 단일시스템으로 통합한다면 통합기관은 병무청과 국방부의 두 기관 중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는 것과 대면통지 업무를 병무청과 군의 어느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선택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항목인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단일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병무청은 140명 중 118명(84.3%)이 선택하여 대다수 참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육군은 203명 중 151명(74.4%)이 소집통지 업무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항목을 선택하여 두 기관 모두 선택 비율이 강세~우세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소집통지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병무청과 국방부(군) 간의 협의를 위한 의제로서 정책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육군 설문 참여자의 대부분은 실제 예비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인력이 향후에도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결정 기관인 국방부(군)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인식하고 제도를 개선하거나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소집통지 업무가 단일시스템으로 통합될 경우, 병무청으로 단일시스템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18명의 인원 중에 약 107명(90.7%)이 통합기관으로 병무청을 선택하고 있으며, 육군은 단일시스템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51명 중 103명(68.2%)이 병무청이 통합기관으로 적합한 것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병무청이 현재 담당하고 병무청의 동원훈련에 대한 소집통지와 더불어 동미참훈련 대상자에 대한 소집통지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병무청 참여자의 대다수가 병무청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선택을 한 것은 업무적 부담에 대한 도전적 요인과 더불어 향후 새롭게 변화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병무청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군에게는 미래 병역자원 감소와 상비병력 및 부대의 감축에 따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병무청 입장에서는 기회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관점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병무청과 육군 예비군업무 관계관의 선택이 대부분 항목에서 상대적 우위의 분포를 보이면서 일치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한 결과로 판단하였다. 또한 대면교부에 대한 두 기관의 입장도 유사한 방향성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



는데 병무청이 91.5% 수준의 절대적인 선택이 군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으며 육군의 참여자는 대등한 수준의 분포이지만 미응답자를 제외하는 경우 병무청과 동일하게 군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대면교부 업무에 대한 제한사항과 현실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병무청에서 실제 수행하기에는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업무에 대한 단일시스템 통합운영으로 적합한 기관인 병무청이 통합된 소집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능력(조직과 인력, 예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의제로서 병무청과 국방부(군)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상호 협업하고 협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설문은 “동원사단 동원지정 방안”과 “예비군 편성카드 자료 테이블 개선”에 관한 병무청 및 육군 예비역지휘관과 현역 간부가 응답한 설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동원사단 동원지정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원지정 방안을 중심으로 설문 항목을 구성하였다. 육군 동원사단은 권역화 동원지정제도를 적용하여 현역 복무부대의 건제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출된 쟁점 중에서 ①상비사단 현역 복무부대=동원사단 예비군 복무부대가 동일 조직과 편성 상의 연계성을 가지고 지정 및 편성되는 부분에서 제한이 있는데 이는 배정지역 내 자원의 부족 또는 불균형으로 인해서 초래되고 있는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 ②병무청 동원지정 전산시스템의 지원에 한계가 있어 현역 복무부대 코드를 세분화하는 데 미흡함으로써 전산으로 지정하는 범위를 선정하는 데에는 지방병무청 단위로 한계가 있다는 것, ③병무청-군 간 협조체계가 미구축되어 있고 동원지정 절차에 대한 상호 협업시스템 또한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병무청과 육군 설문 참여자 상당수가 이러한 인식에서 동원지정 절차를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 병무청과 국방부(군) 간의 협업 및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예비군 편성카드 자료 테이블 개선에

관한 설문은 병무청과 군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두 기관이 인식하는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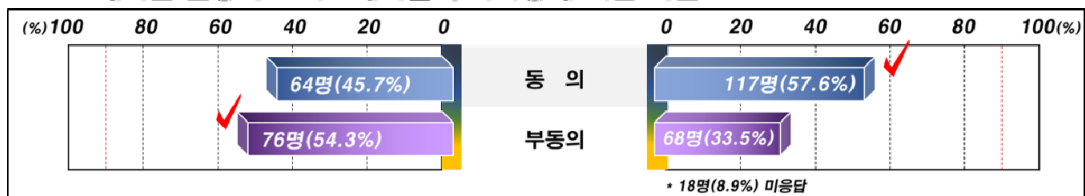
[그림 33] 동원사단 동원지정 및 예비군 편성카드 자료 개선방안에 대한 병무청 및 육군 예비역지휘관과 현역 간부의 설문 결과

● # 4-1 동원사단 동원지정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5. “예비군 편성카드 자료(data)테이블 개선”

● # 5-1 예비군 편성카드 자료테이블 추가사항에 대한 의견?



● # 5-2 예비군 편성카드 현역부대 코드 확대에 대한 의견?



병무청과 육군의 예비군 업무관계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미참훈련에 관하여 병무청과 군은 동원훈련과 유사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을 우선 선택한 가운데 4일(출·퇴근)훈련 연속 시행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현재의 훈련 시간 및 장소, 방법에 대해서는 다수(강세~우세)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항목을 선택함으로써 훈련방법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동미참훈련 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병무청과 국방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집통지 기관을 일원화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집통지 업무의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보류자 훈련제도는 병무청과 군이 모두 우선 보류제도의 폐지에 대한 문항



에서 병무청은 65%, 군은 66.5%가 선택하였으며, 차순위로 제시된 보류자 훈련시간의 면제 축소 및 훈련시간의 증가에 대한 항목은 각각 25%와 15.3%를 선택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보류제도에 의한 예비군의 차별화가 형평성 논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검토가 충분히 요구되고 있음을 설문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셋째,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스템 통합에 관한 문항은 병무청과 군 모두로부터 각각 84.3%와 74.4%의 참여자의 선택을 받을 만큼 공통된 의견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소집통지 기관의 일원화는 병무청이 90.7%, 군이 68.2%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병무청으로의 업무 일원화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의 경우 일원화를 위해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방부(군)가 아닌 병무청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이전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군 예비군 업무관계관의 인식도 변화의 의미는 국방개혁에 따라 미래에도 상비병력과 부대의 대규모 감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제 하부조직에서 수행해야 하는 조직과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갈수록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정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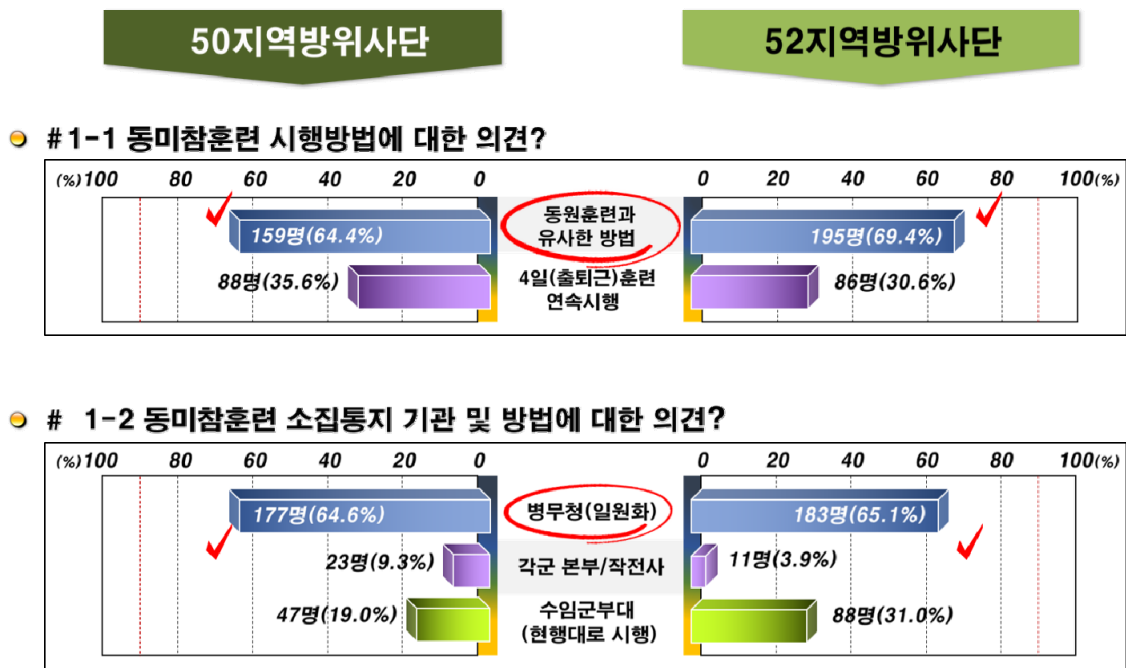
넷째, 동원사단 동원지정방안 개선 및 예비군 편성카드 자료 테이블 개선에 관한 참여자의 의견은 병무청과 군이 각기 다른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두 기관에 이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실제 업무수행 간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과 요인들에 대해서 다른 입장과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무청과 국방부(군) 간 충분한 상호 협업 및 협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합동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정책의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예비군(병·간부) 설문결과 분석

예비군(병·간부)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동미참훈련과 보류제도에 관한 2개의 큰 문항과 문항별 1~2개의 하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항목인 “동미참훈련의 훈련 시간과 방법”에 관한 설문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부대에서 실시한 예비군 참여자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50지역방위사단의 예비군은 247명 중 225명(64.4%), 제52지역방위사단 예비군은 281명 중 195명(69.4%)이 동원

훈련과 유사한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항목을 선택하였으며 차순위 또한 4일(출퇴근) 연속 시행하는 항목을 선택한 참여자가 각각 88명(35.6%)과 86명(30.6%) 수준의 분포를 보인다는 점에서 예비군의 대다수가 동미참훈련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도는 이전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상대적 분포 비율에 대해서 유사한 수준이거나 부분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훈련에 대한 중요성이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예비군 훈련에 대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여 법적인 제재를 회피하는 수준에서 이 제도를 상당수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34] 동미참훈련에 대한 예비군(병·간부)의 설문 결과



동미참훈련 소집통지 기관 및 방법에 대한 설문은 두 개 부대의 예비군 모두 177명(64.4%)과 183명(65.1%)이 소집통지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이에 적합한 기관으로 병무청을 선택하였다. 이는 현역 복무 이후 예비군의 입장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기관으로서 병무청이 예비군에게 느껴지는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두 번째 설문은 “보류자 훈련제도”에 관한 항목으로 두 개 부대의 예비군은 우선

선택은 보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50지역방위사단 예비군은 247명 중 157명(63.6%)과 제52지역방위사단 예비군은 281명 중 176명(62.7%)이 선택하였다. 또한 차순위 항목(개선)에 대해서도 각각 85명(34.4%)과 92명(32.7%)이 선택하여 전체적으로 두 개 부대의 예비군은 보류제도에 대해 약 95% 수준을 넘어서 절대적 강세 분포를 보이면서 보류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결과로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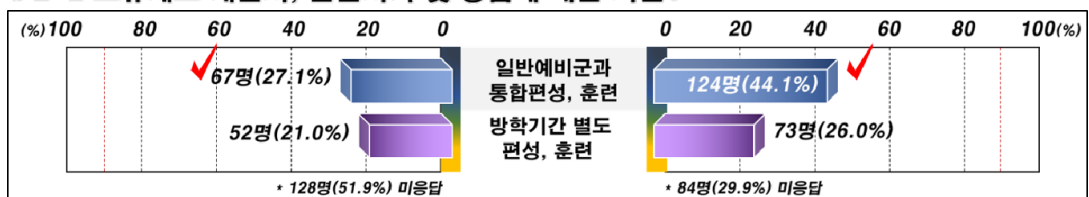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공정 가치에 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동일 예비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군훈련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연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관점과 인식은 예비군 의무복무에 대한 제도적 차별화·형평성에 대한 기준의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까지 잠재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급하게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35] 보류자 훈련제도에 대한 예비군(병·간부)의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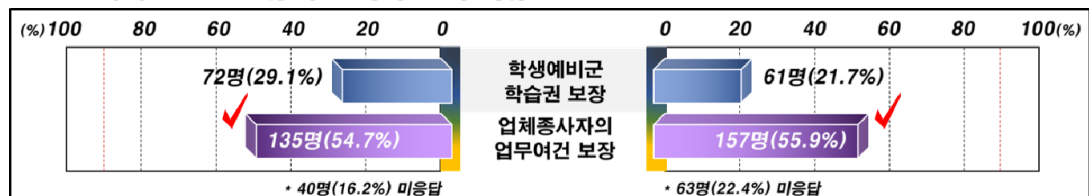
● # 2-1 예비군 보류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



● # 2-2 보류제도 개선시, 훈련시기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 2-3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폐지 반대 이유?



지금까지 예비군(병·간부)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미참훈련에 대하여 예비군은 다수(우세)가 동원훈련과 유사한 방법 또는 4일(출·퇴근) 훈련 연속 시행을 선택함으로써 제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동미참훈련 소집통지 일원화에 적합한 기관은 병무청이 65% 수준의 참여자 다수가 선택하고 있다. 셋째, 보류자 훈련제도에 대한 예비군 참여자는 대다수가 폐지(60% 수준) 또는 개선(30% 수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폐지 시에는 2023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설문 결과가 나타났다. 넷째, 보류자 훈련제도 개선 시 기간과 방법은 일반예비군과 통합 편성하여 훈련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소 우위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 보류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의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20% 수준) 측면보다는 업체 종사자의 업무 여건 보장(50% 수준)이 더 많은 선택을 하였으며 이는 실제 예비군의 대다수가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대상자로서 현재의 사회적 및 경제적 환경과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연령층임을 고려할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결과로써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동미참훈련과 보류제도에 대한 의제는 국민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정책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해 설문 표본 대상을 지금보다 더욱 확대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설문에 대한 일관성 있는 분석을 통해서 국민과 여론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때 정책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정성적 분석에 의한 조직의 추가 소요 판단 및 실행로드맵 구상

1. 조직이론 및 조직진단에 의한 분석적 방법론
2. 조직과 인력, 예산 소요 판단(안)
3. 예비군 소집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행로드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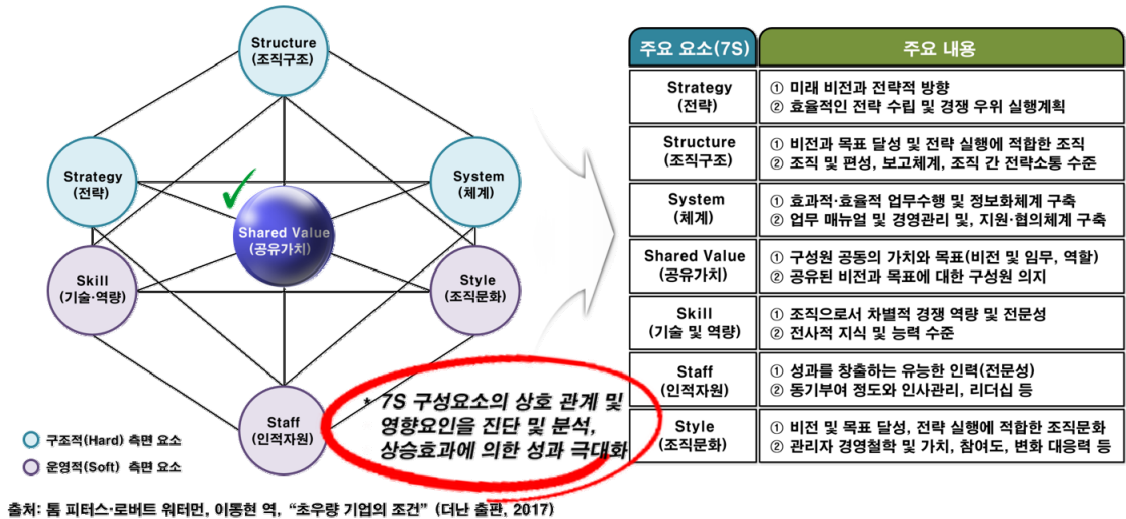
VII 정성적 분석에 의한 조직의 추가 소요 판단 및 실행로드맵 구상

1. 조직이론 및 조직진단에 의한 분석적 방법론

조직이 사회변화에 적응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면, 실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켜 내·외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여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거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급변하고 있는 외부환경과 실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 및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으로의 변화를 통해서 우선 구조적으로 조정하거나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구조 설계를 통해서 조직과 부서별 업무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함으로써 보다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갖추면서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조직진단은 조직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서 적용함으로써 조직을 지속적으로 생산성 높은 유기체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가는 유기적인 활동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이 스스로 조직특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환경변수에 대해 조직의 특성을 나타내는 조직관리 지표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직의 상태와 수준을 체크하고 이를 지속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의 산물로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조직진단 모델에 관하여 최근 가장 대표되는 분석기법이 맥킨지의 조직에 관한 7S 모델에 의한 분석 접근방법이다. 7S에 의한 주요 요소들을 통해서 조직의 전반적인 가치와 목표와 지향점을 포함하여 진단하는 주요 모델의 분석기법으로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7S는 Shared Value(공유가치), Strategy(전략), Skill(기술 및 역량), Structure(조직구조), System(체계), Staff(인적자원, 구성원), Style(조직문화)가 그 주요 구성 요소이다.

[그림 36] 맥킨지의 7S와 주요 요소의 개념



맥킨지의 7S 모델은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진단하는 도구로서 주요 요소(7S)를 적용하여 분석하는 기법으로써 조직의 변화 및 향후 대처 능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부터 조직을 진단하여 전략의 수립과 실행, 분석 및 평가하는 역량 진단 및 분석 모델로서 평가되고 있다. 이들 주요 요소인 7S의 상호 관계 및 영향요인을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7S 모델을 활용하여 조직을 진단하고 필요로 하는 조직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세부적인 분석평가를 지표와 도구로 활용되며 여기에는 전문적인 분석 능력이 요구된다. 주요 요소에 의한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상하 및 수평적 관계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기법을 적용하여 조직을 진단하기 위해서 정량적·정성적 분석 방법이 모두 활용되는데, 본 연구에서 전체 조직의 수준이 아닌 제한된 수준에서 정성적 분석을 통한 산술적인 조직의 진단 및 적용을 위한 분석 수준의 도구로서 기준을 설정하고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성적 분석에 의한 조직분석 수준에서의 구조적 사례를 위한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의 전제조건이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조직(병무청)의 비전과 목표, 목적 및 지향방향과 주요 임무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요 과학화·정보화 체계 등 현재 구축된 체계는 최대한 활용이 가능, 셋째, 조직의 새로운 임무와 과업,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 및 진단에 필요한 영역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조직진단 및 분석을 위한 수준은 외부환경적 변화요인과 조직의 그룹 및 개인 수준에서의 분석을 주요 단위로 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외부환경적 요인은 조직진단 및 구조 조정의 배력 및 내·외부 환경변화 요인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며 조직이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분석을 위한 진단 기법을 선택하는 경우, 설문 통계분석(인식도 조사) 및 SWOT분석 등 정성적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진단 시 그룹 수준에서의 분석은 병무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업무체계 일원화를 위해 조직의 상하 및 수평계선 상에서의 과업의 수준과 역할 및 기능적 변화요인을 어느 수준으로 평가하고 반영할 것인가에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관련 업무수행을 필요한 새로운 조직과 편성, 인력이 현재와 비교하여 주무 부서와 지원부서의 조직과 인력, 체계의 적합성 등이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 개인 수준에서의 분석은 개인의 업무수행 능력으로써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숙련도, 업무체계에서 협업의 수준 및 업무수행량 등이 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분석 수준에서의 평가 기준과 지표 및 방법에 대해서는 문헌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기존의 사례와 검증결과를 활용하고, 조직구조를 판단하는 도구로써 소요를 도출하는데 적용하였다. 조직에 대한 분석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성원의 인력 소요와 조직의 편성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예산 소요 수준을 포함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실현 가능한 적정 수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동원 및 소집통지 업무 조직 및 인력, 예산 소요 판단(안)

예비전력의 환경에 대한 분석요인은 국방인력 수급 차원에서 미래 가용자원의 급감에 따른 요인이 가장 크게 미치고 있다. 군은 향후 지속되는 가용 병역자원의 감소에 따라 상비병력을 대규모로 감축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해체와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은 예비전력을 구성하는 예비군의 적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비전력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예비전력의 주요 조직 및 편성, 인력의 감소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

이다. 예비군 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조직의 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소집 통지 및 대면교부 업무의 현장 조직과 인력인 상근예비역제도가 2023년부터 사실상 폐지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가용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둘째, 미래 예비군의 가용자원도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비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한 조직의 구조적 개편은 전반적으로 감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예비군자원의 지속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동원훈련 대상자 중에서 동미참훈련 대상자 및 예비군훈련 보류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 및 개선에 요구가 지속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부적 환경요인의 변화는 예비군 자원관리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주요 기관들의 업무 효율화와 효과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비군 소집업무에 대한 통지기관의 일원화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하여 적정 소요를 도출하였다.

첫째, 현재의 시점에서 예비군자원의 편성을 분석하고 병무청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업무 일원화 시 요구되는 조직과 인력의 소요를 판단하고 제시하였다. 국방부는 2022년 기준으로 필요한 예비군자원을 275만 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전체 예비군 자원 중에서 동원훈련 예비군은 약 53만 명 수준이며 동미참훈련 예비군은 약 49.7만 명으로 잠정 확인하였다. 동원훈련 대상자 중 매년 평균 약 20% 수준(이월 소요를 포함하여 2015~2019년도까지 5년간 평균값)의 예비군이 동원훈련 불참으로 인해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되는 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 대상자의 소요를 종합적으로 산출해보면 병무청이 담당하는 동원훈련 대상자 약 53만 명과 동미참훈련 대상자와 불참자의 평균 대상자를 고려 시 예비군 소집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경우 소집통지를 해야 하는 예비군자원은 현재 동원훈련 대상자 약 53만 명 수준에서 약 110만 명 수준으로 대상자가 약 210% 이상으로 급증하게 된다.

현재 병무청의 동원 및 소집업무 수행 조직 및 인력은 약 200여 명 수준으로 판단하고(잠정) 확대된 예비군자원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는 약 420여 명으로 2배 이상 확대되어야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조직구조를 설계하는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업무와 과업의 확대에 의한 수행

인력의 대규모 증원은 이를 지원하는 전문가집단에 의한 지원인력(관리자, 체계 운영자 등 전문가)의 소요에 대한 약 5~10% 수준의 추가 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룹 및 개인 수준의 분석은 업무수행 그룹의 상하 및 수평적 연계성과 동일 과업 및 유사 기능의 중복소요 등을 고려하여 감소 조정하는 요소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조정하고, 개인의 업무수행 능력(전문성,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대체 효과에 의한 감소 조정 규모가 약 -10~-20% 수준을 적용한다. 또한 과학화·정보화 체계구축을 통해서 업무수행의 효과성·효율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경우 약 -10~-15% 수준의 인력 대체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⁷⁾ 그렇지만 동원 및 소집업무의 특성상 현장 인력 중심의 업무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체 인력 소요의 적용 기준은 -10% 수준으로 두 가지 요소에 모두 반영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를 정리하면 병무청이 소집통지 업무 일원화에 따른 추가 인력 소요는 현재 약 200여 명에서 약 320여 명 수준으로 약 160%의 증원 소요가 산출되었다. 다만, 이러한 조직의 구체적인 인력 소요는 정량적 조직진단을 통해 직급과 직책에 대한 개인별·그룹별 조직의 업무수행 능력과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의 현실적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직책 및 직급별 인력 소요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예산 소요 판단은 병무청의 확대된 소집통지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하 및 수평 업무조직 간 체계구축 및 개선을 위한 예산 소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소집통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비군홈페이지(누리집) 및 모바일앱 확장 개발 및 전자송달 체계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기존의 체계(2019년 체계개선 사업 완료)를 개선하는 사업의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개선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관리유지 비용을 포함하여 약 5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국방부 체계 개선 및 모바일 앱 구축 소요 예산(약 5억 원)과 인천광역시 지자체에서 유사 기능의 체계개선 사업(약 4억 원)에 적용된 사례를 고려하고 최근 개선사업으로 완료된 환경을 반영하여 이 정도 수준을 적정 소요 예산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동미참훈련 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이들의 훈련 응소에 따른

37) 맥킨지, “초우량 기업의 조건-성공기업의 조직진단과 사례분석”(2017); 미 육군교육사,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력 대체 효과분석”(미 육군,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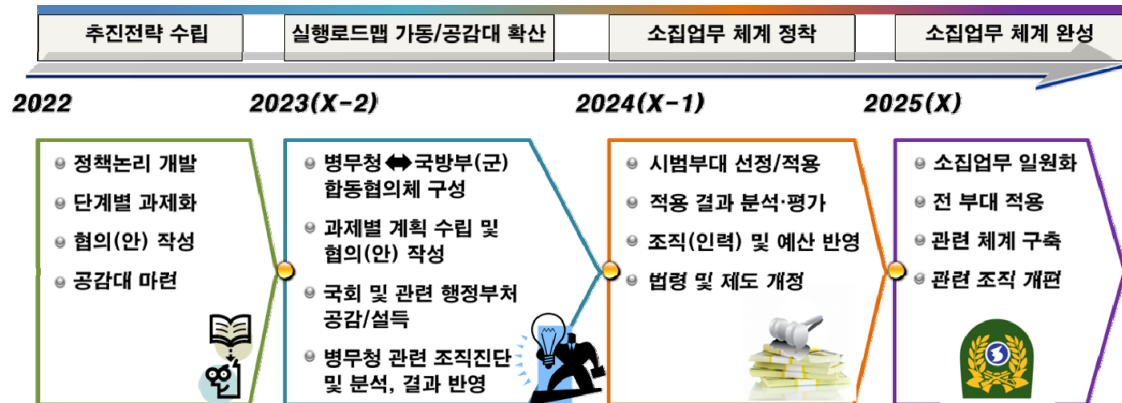
교통비 8천 원(2022년 기준)을 적용하여 57만 명 추가 대상자에 대한 4일간 훈련을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적용한 소요 예산은 약 182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산출하였다. 실질 예산 소요 경비 중에서 동미참훈련 대상자에 대한 소집통지서 우편료 지급에 사용되는 소요 예산은 약 35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산출하였다. 다만, 앞의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국방부에 편성된 관련 예산을 대부분 전환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추가 예산편성 및 소요 산출에 크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예산 소요의 종합적인 소요(안)는 약 230억 원 수준이 되는 것으로 잠정 판단하였으며, 실 예산 소요로서 고려해야 할 세부적인 과업을 도출하고 정밀 진단을 통해서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관련 예산은 재산출되어야 한다.

셋째, 병무청이 동원 및 소집업무의 확대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인력의 증원이 현재 200여 명 수준에서 약 320여 명 수준으로 확대되는 경우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제 및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의 확대 편성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에 대한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영동원국은 조직 확대 및 인력 증원에 따라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기존 조직으로부터 입영국과 동원국으로 분리하여 2개국으로 개편하고, 동원국 예하 부서는 업무수행 및 통제 범위를 고려하여 약 40~50명 수준의 인력으로 3개 과 범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소집통지 업무의 특성상 지방병무청 조직과 인력의 증원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병무청이 지방별·업무수행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별 세부적인 소요를 도출하여 조직과 편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예비군 소집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행로드맵(안)

병무청 주도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합리성·타당성 있는 논리를 우선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행로드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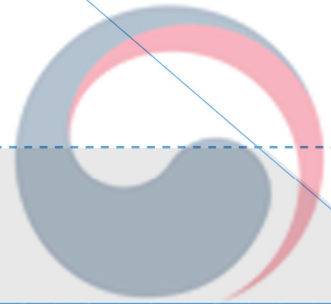
[그림 37] 추진전략에 따른 실행로드맵 구상(안)



출처: 연구자 작성

이러한 추진전략과 실행로드맵의 구상을 통해 우선 국방부(군)와의 상호 협업 및 협의를 위한 합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의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병무청 주도하에 병무청과 국방부와의 충분한 협의 및 합의를 통해 공감대가 마련되고 추진을 위한 개략적인 일정과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국무총리 중심의 관련 행정부처와의 확대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적 추진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병무청이 대내외 주요 기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기재부 등 관련 주요 외부 기관에 대한 정책논리와 공감논리에 의한 합리적이고 공감 가능한 검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예비군 소집통지 업무 일원화를 위한 기관의 정책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2023년부터 향후 3년에 걸쳐서 시행 가능한 단계별 실행로드맵 구상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계획화함으로써 정책화하는 최종 단계까지 체계적이고 지속 추진이 가능한 전략과 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병무청 조직과 구성원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때 확실한 성과로써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VIII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러시아의 2022년 2월 24일 ‘특별 군사작전’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의 국면을 맞고 있다. 21세기 유럽의 한복판에서 전쟁을 예측한 사람은 별로 없었고, 군사력 세계 2위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장기전으로 지속될 것을 예측한 전문가조차 거의 없었다.

1·2차 세계대전 등 대부분의 전쟁은 국가 총력전의 형태로 수행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였으며 국가가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전쟁에 임했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과거 중동전쟁이나 한국전쟁, 걸프전쟁과 2000년대 미군 주도하에 실시된 이라크전쟁이나 아프간 전쟁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먼저 러시아는 200만 명의 예비군을 계약에 의해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평시 상비군체제 중심의 편성 부대와 병력 및 전력 등 현존 전력에 의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경과를 분석할 때 상비병력과 전력의 손실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러시아는 지속적인 병력 손실로 인해 전장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병력이 부족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최근 부분동원령을 발령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마도 러시아가 전쟁을 단기전으로 예상하여 전쟁계획에 예비군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조직적으로 동원대비태세를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경우에도 90만여 명의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올해 1월에는 그 규모를 200만 명까지 확대하여 조직화를 시도했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예비군을 체계적으로 동원한 것은 명확하지 않다. 국민의 결사항전 의식은 갈수록 강해지고 단결하는 동기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남성들이 자발적으로 동원에 응하거나 심지어는 여성과 노약자까지도 자원하는 시민군 형태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우크라이나도 예비군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군(軍)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병력집약형 부대 구조에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구조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병력구조를 과거 68만 명 수준이었던 상비군 규모를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상비군 감축에 따른 전투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예비전력 부대의 구조 면에서 2018년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여 개전 초기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를 증편 또는 창설하여 전방군단에 제공토록 하였고, 동원사단의 부대구조를 개편하고 무기체계와 장비·물자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군에 대한 대규모 상비병력 감축은 이를 대체하는 첨단정보기술에 의해 전력을 대체함으로써 전투능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급감에 따른 가용 병역자원의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병력구조 개편은 2020년대 초반의 소위 1차 인구절벽에 따른 조치로 2030년대 중반에 예상되는 2차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 발표 인구통계에 의하면 2021년까지 23만 명이던 현역 가용자원은 2040년이면 11~12만 명 수준까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병역자원의 지속적인 감축은 상비병력 운용의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이는 예비군의 정예화를 통해 전시 국방력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과업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예비군 소집업무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는 전시 군에 동원되는 예비군을 체계적으로 편성 및 관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소집, 전시 또는 동원령 선포 시에 군의 완전편성을 보장해주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예비군은 1968년 창설 이후 많은 발전이 이루어 왔다. 특히 병무청에서는 병역법에 근거하여 병력동원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이는 군의 전시 부족한 병역자원을 부대별로 예비군 보충소요에 맞게 전산으로 지정하고, 동원지정된 예비군에 대해서는 평시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교부하여 동원령 선포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평시 병력동원 훈련 시에도 병무청은 연간 병력동원 훈련 일정에 맞추어 훈련대상 예비군에게 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예비군을 훈련소집하여 훈련부대(소집부대)까지 수송·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군 소집업무는 병무청에서 수행하는 병력동원 업무의 최종단계에 해당되며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므로 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부터 시행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소집업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비군 편성으로부터 동원지정, 자원관리, 통지서 교부 등 전 단계가 잘 이행되도록 정보체계의 보완과 업무의 통합 및 단일화, 예비군훈련과정의 형평성 등 제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기관에서는 제도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예비군 정예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방혁신 4.0」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정책제언

“예비군 소집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예비군 소집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 소요를 도출하고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예비군 편성자료의 효과적인 관리로부터 기관별 업무분장, 예비군훈련 방법의 형평성 유지, 업무관리 정보체계의 연계성 등의 제도개선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에 중점사항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가.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개선

예비군 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의 출발은 예비군 편성카드 작성에서부터 시작한다. 예비군 편성카드의 구성요소는 예비군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며 이는 자원관리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예비군 편성카드 내용은 사용기관인 군(軍)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전산관리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의 소요가 있어야 하고 병무청에서 전산 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군에서는 현역 복무 시 훈련수준에 대한 다양한 정보자료를 가지고 있으나 병무청에 자료전송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현역 복무 간 획득한 전투기술 수준은 군이 예비군을 활용하는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군 편성카드 작성 내용을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군의 조직편성은 지역과 직장 중심으로 편성하여 자원을 관리하고 있어

현역 복무부대의 건제를 활용할 수 있는 예비군 조직편성은 제한되고 있다. 현역 복무 경험은 전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므로 이스라엘의 정규군과 예비군 편성이 연계되는 시스템을 참고하여 우리도 예비군 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군 조직편성에 현역 복무부대 건제를 지역 및 직장 편성에 추가하여 보강할 수 있도록 편성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나. 병무청과 군(軍) 간 정보체계 연계 강화

병무행정체계-국방인사정보체계-국방동원정보체계 간 전역자료 전송부터 평시 예비군자원관리와 관련된 정보자료 순차적 전송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을 실시간 공유체계로 개선하여 기관별 동일한 정보자료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시 실시간 정보자료의 연동으로 적시에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비군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 등이 기관별 상당한 시간적인 격차를 두고 시행되는 경우 적시적인 업무처리에 제한을 줄 수 있으며 자료의 적시성과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병무청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췌한 예비군 거주지 이동이나 신상 변동사항, 법무부에서 발췌한 국외 출국이나 구속 등 변동사항을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하고 이 자료가 국방동원정보체계에 동시 전송되어 예비군자원관리의 적시성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다.

다. 예비군 보류제도 조기 정비

예비군 보류제도의 개선은 예비군의 자원 활용과 군의 예비군 정예자원 동원지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비군 보류자가 전체 예비군의 25%에 달하고, 이 중 대부분이 대학생예비군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는 군의 동원지원뿐만 아니라 예비군 소집대상에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보류제도를 폐지(또는 개선)하여 예비군 정예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병무청은 군의 병력동원 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보류제도 개선은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업무는 「예비군법」과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등에 명시되어 병무청이 직접적인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병무청은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예비군 신분별 훈련과정 형평성 유지

동원예비군은 동원훈련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는 예비군으로 예비역 병사는 1~4년차, 예비역 간부는 1~6년차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중 동원지정된 예비군은 동원훈련을 받지만 동원지정되지 않거나 동원훈련 불참 예비군은 동미참훈련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으로 각기 구분되고 있는 훈련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동일 예비군 신분임에도 다른 훈련과정을 이수하게 되어 있고 동미참훈련의 경우, 거주지 예비군훈련장으로 출퇴근 방식 훈련, 본인의 원에 의해 전국단위 훈련이나 휴일 훈련으로 시행 가능, 훈련소집을 무단 불참해도 2회까지는 고발되지 않는 등 동원훈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의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신분에 맞는 동일한 방식의 훈련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동미참훈련을 동원훈련과 동일한 입영훈련으로 전환하고 훈련내용은 각 군에서 임무에 맞게 설계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공군과 육·해군 간부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 제도개선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훈련장 수용이나 훈련부대의 부담을 고려하여 수 차례 불참하는 소규모 예비군에 대한 1·2·3차 훈련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현행제도를 적용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훈련의 기본 원칙은 입영훈련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국방부의 훈령을 개정하고 각 군은 입영훈련에 필요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마. 동원예비군훈련소집 통지 일원화

동원예비군의 훈련을 입영훈련으로 전환하여 훈련과정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제도로 개선이 된다면 동미참훈련 대상자에 대한 소집통지 업무를 병무청에서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다. 동원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일원화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현 상 분 석〉

- 동원예비군훈련 소집업무 이원화
 - * 동원훈련 ⇒ “병무청”, 동미참훈련 ⇒ “군(수입군부대)”
- 동일 동원예비군이나 훈련유형에 따라 소집기관 상이



〈소집기관 일원화 요건(병무청 통합)〉

- 동원훈련과 동일한 입영훈련(2박 3일), 훈련장소 유사
 - * 4일 출·퇴근 훈련⇒ “2박 3일 입영훈련”
- 병역법 개정: 동미참훈련 관련 소집 규정 반영



〈병무청 통합시 제한사항〉

- 일부 예비군이 동미참훈련 계속 불참하는 경우 훈련부대 부담 과다
 - * 소수 인원까지 훈련해야 하고, 특수병과는 극소수 훈련 가능
 - * 불참자에 대한 훈련대상/규모의 예측이 불가하여 훈련계획수립 곤란
- 병무청의 통지 소요 과다, 대면통지 및 고발처리 등 행정 소요 급증



〈개 선 방 안〉

- 병무청 소집통지 범위 한정: 동미참훈련 1·2차 훈련
- 동미참훈련 3차 훈련 이후: 현행지침 적용(수입군부대)
- * 제도개선 사전 시험적용 방안 검토: 각 군별 1개 부대

병무청이 예비군 소집업무에 대하여 일원화하여 추진 시, 동일 예비군 신분의 훈련과정과 소집통지 기관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행될 수 있어 업무체계가 일원화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동미참훈련까지 소집통지를 시행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동반되므로 최초 시행은 현재 입영훈련을 시행하고 있는 각 군의 일부 대상을 병무청에서 시험 적용한 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책화가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예상되는 제한사항 및 반발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수 있다.



바.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예하부대 동원지정 방안

육군동원전력사령부는 국방개혁 과제로 반영하여 새롭게 창설된 부대이며 평시 현역이 거의 없고 대부분 예비군이 충원되어야 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이다. 그러나 이 부대는 개전 초에 전방 방어의 중심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대로 평시 장비와 물자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예비군의 충원이 전투력 발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의 동원사단에 대한 예비군 지정을 정예자원으로 하면서 전방 상비사단과 연계된 권역화 동원지정의 효과를 달성하여 동원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동원지정 방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동원지정 지역 배정과 동원 대상부대 배정을 이중으로 하되, 동원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방안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정규부대와 예비군부대 간의 연계된 부대편성을 참고하여 우리의 여건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병무청에서 동원지정 초안을 작성하여 동원사단에 제공하고 동원사단이 현역 복무부대 자원의 연계성 여부를 확인하여 수정을 제기하는 것으로 동원사단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동원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병무청에서 동원지정을 보완하고 민원 소지가 있는 예비군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동원지정을 확정한다. 넷째, 동원지정된 자원이 신상변동되어 대체지정하는 경우도 반드시 동원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하는 것이다. 이는 지속 동원사단에서 동원지정된 예비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군 소집통지, 훈련통지 간에 동원사단과 협업하는 것이다. 지정된 예비군이 부대에 대한 소속감을 유지하고, 병무청과 동원사단이 항상 함께 업무관리를 하여 실시간 지정된 예비군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바로 시행하는 데는 제한이 많을 것이므로 동원사단별 보병 및 포병대대 몇 개 대대를 시험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한 다음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에 제도 시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원사단의 정예자원은 육군의 핵심 동원전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병무청에서도 의미있는 업무가 될 것이므로 이는 육군본부 및 동원전력사령부와 업무협업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한 예비군 소집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과 여론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시행될 수 있는 만큼 예비군 정책 중에서도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병무청 주



도하에 충분한 정량적·정성적 분석 및 검증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책화를 위한 의제로서 반영함으로써 병무청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에 의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참고문헌>

■ 정책연구 및 논문

- 고시성, 2018, “예비군훈련 적정 보상비 연구”, 서울: 국방부.
- 노희준·정진섭, 2020, “전시 병력동원 실효성 보장방안 연구”, 서울: 육군협회.
- 박제호, 2015,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21세기군사연구소.
- 박무춘 외, 2021, “2040년 안보환경 변화 대비 군구조 발전방안 연구”, 서울: 국방부.
- 박무춘 외, 2019,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및 병력구조 개편방안 연구”, 서울: 국방부.
- 박무춘·노희준, 2020,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적정 예산확보 방안”, 계룡: 육본 동원참모부.
- 박무춘·노희준, 2020,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방안 연구”, 충남: 국방대.
- 박민영, 2018, “전쟁억제와 예비전력(싱가포르 사례)”, 서울: 「국방연구」 제63권 제2호.
- 조규호, 2011, “한국 병력동원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근석, 2006,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정책제언(병력동원제도)”, 서울: 국회정책자료집. 등

■ 법령 및 규정

- 법령자료: 병역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예비군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군인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국군조직법/군형법/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규정자료: 국방부 훈령(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국방부 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국방인사정보체계 훈령, 국방정원관리체계 훈령), 병무청 규정(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규정, 예비군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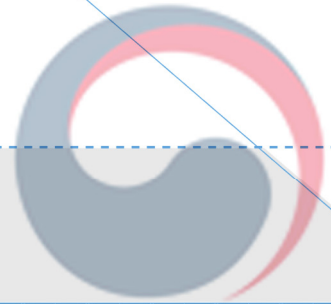


■ 정부기관 자료

국방부, 2020, 「충무3700(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계획)(2018~2019), 서울: 국방부.
-----, 2019, 「국방 동원전쟁 모의연습 관련 자료」(2018~2019), 서울: 국방부.
-----, 2017, 「외국의 동원 및 예비군제도」, 서울: 국방부.
병무청, 2020, 「2020병무행정업무(동원 및 병적관리」, 서울: 병무청.
한국국방연구원, 2019, 「평시 예비군 간부제도 국회 토의」,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동원기획관실, 2019, 「예비전력 정책서」. 서울: 국방부.
-----, 2020, 「병력동원 발전 중앙회의 자료」(2018~2020), 서울: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2020, 「국방지능형 플랫폼 구축 ISP(정보화전략계획」, 서울: 국방부. 등

■ 해외자료

Department of the Army, 1992, MOBILIZATION, DEPLOYMENT, REDEPLOYMENT,
DEMOBILIZATION(FM- 100-17), Department of the Army.



첨 부

#. 인식도 조사 설문지

1. 병무청, 동원업무 관계관용
2. 예비군용



[첨부 #1]

동원예비군훈련 조사·분석을 위한 설문서

(병무청, 동원업무 관계관용)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의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임무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설문서는 **동원예비군훈련 조사·분석**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학문적·이론적으로 접근 및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동원예비군: 병(전역 후 1~4년차), 간부(전역 후 1~6년차)**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자료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어 오로지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 7월

(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

예비군훈련에 관한 법령 및 주요 내용

○ 적용 법령 및 규정

- 법령: 「병역법」 제49~52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 「예비군법」 제6조(훈련)
- 규정: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훈련대상/시간)·제13조(동원예비군훈련)

○ 동원예비군 대상별 훈련 시간 및 방법(예비역 병 5~6년차, 기본훈련·작계훈련 제외)

구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보류자훈련
병	1~4년차	동원 지정자	2박 3일/년		1일(8H)/년
		동원 미지정자		4일(32H)/년	
간부	1~6년차	동원지정자	2박 3일/년		
		동원미지정자		2박 3일	
훈련 장소			동원훈련장 또는 소집부대 주둔지	수입군부대 훈련장	수입군부대 훈련장
주요 훈련			개인 및 작계훈련	개인 및 병과훈련	기본훈련
훈련소집통지			병무청	수입군부대	수입군부대
비고			입영훈련	출퇴근·입영훈련	출퇴근훈련

- 동원지정 대상: 소집부대 계급·병과(특기)별 전시 소요에 맞도록 평시 동원예비군
 - 장교 및 준·부사관(전역 후 1~6년차), 병(전역 후 1~4년차)
 - 동원지정 기관: 지방병무청장
- 예비군 보류자 훈련(방침 일부): 훈련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훈련 일부 면제)
 - 근거: 국방부, 예비군 조직편성 및 운영 훈령(별표#24), 방침 일부 보류(학생예비군 등)
 - 훈련시간: 연 8시간(1일, 기본훈련) 훈련, 간부·병(동원지정·미지정) 적용

○ 주요 문제제기 사항(참고)

①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방법 및 소집통지 기관 상이(이원화)

- * 훈련방법: 동원훈련(2박 3일 소집부대 입영훈련), 동미참훈련(4일, 수입군부대 출퇴근훈련)
- * 소집통지: 동원훈련(병역법, 병무청), 동미참훈련(예비군법, 수입군부대)
- ☞ 동일한 동원예비군인데 훈련방법과 소집통지가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② 예비군훈련 보류자(방침 일부) 훈련 일부 면제

- * 예비군 중 25% 이상이 훈련보류자 포함: 대학생예비군이 대부분 차지
- * 예비군훈련 형평성 문제, 동원훈련 가용 예비군 부족 현상 초래 등 개선 요구

1. 예비군훈련 “동미참훈련의 훈련 시간과 방법”에 대한 설문입니다.

(설명)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 대상자와 **동일한 예비군임에도** 동원 미지정, 동원훈련 불참(연기 등) 사유로 **동원훈련과 시간 및 방법에 차이**가 있음.

- ① 훈련장소: 예비군 주민등록지역 수임군부대(자원관리부대) 훈련장, 접근성이 용이
* 전국단위 예비군훈련장을 선택하여 훈련 가능
- ② 훈련방법: 출퇴근 훈련(4일), 일일 또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훈련 참가 가능
- ③ 훈련신청: 인터넷(예비군홈)으로 훈련일정 자율선택 가능(휴일훈련 신청도 가능)
- ④ 별칙규정: 1차·2차 훈련 무단불참 시도 미고발(동원훈련은 고발됨)
- ⑤ 훈련내용: 병과부대 훈련으로 전방 동원훈련에 비해 훈련강도 차이

1-1. 동미참훈련 시행방법에 대한 의견? ()

- 가. 동원훈련과 유사한 방법으로 시행(2박 3일 입영, 표준 동원훈련장)
- 나. 4일(출퇴근) 훈련을 연속으로 시행(일자·시간을 분할하여 훈련참석 불가)
* 병과(특기)별 훈련편성으로 훈련일자 자율 선택, 휴일훈련, 전국단위훈련 불가

(1-1-1). 동미참훈련 2박 3일 입영훈련 반대이유?(1-1문항‘나’선택 경우)()

- 가. 입영훈련 가능한 훈련장 부족(동미참훈련은 7월 이후 시행)
- 나. 동미참훈련 불참으로 입영훈련 소요 증가(훈련부대 부담, 행정소요 급증)
- 다. 예비군 편의제도 축소(자율 선택, 휴일훈련, 고발감소 등)
- 라. 기타 의견 ()

1-2. 동미참훈련의 소집통지 기관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 가. 병무청(동원예비군의 소집통지 기관 일원화 가능)
- 나. 각 군 본부 또는 작전사(각 군·작전사에 위임, 훈련계획 수립 및 통제 용이)
- 다. 수임군부대(현행대로 계속 시행)
- 라. 기타 의견 ()

(1-2-1). 동미참훈련 소집통지를 병무청 시행 반대이유?(1-2문항 ‘나·다’선택 경우)()

- 가. 병무청의 업무 과다 및 행정 소요 증가
- 나. 군(軍)의 훈련계획 수립 및 결과처리에 불편
- 다. 동미참 보충교육 등 행정처리 과다
- 라. 기타 의견 ()

2. 예비군훈련 “보류자 훈련 제도”에 대한 설문입니다.

(설명) **보류자 훈련(방침 일부)**은 동원훈련 대상자와 **동일한 예비군임에도** 국방부 훈령에 의거 훈련 시간을 일부 면제하여 **연간 8시간(기본훈련)만 훈련함**.

○ 훈련시간 비교

구분	1~4년차		5~6년차
	동원 지정자	동원 미지정자	
일반예비군	2박 3일	32시간	20시간(기본, 8H, 작계6×2회, 12H)
학생예비군	8시간(기본훈련)		

○ 훈련보류자 현황(연간 평균치 산정) ⇔ 학생예비군훈련보류제도(1971년부터 시행)

총자원	계	법규보류	방침보류		
			소계	학생예비군	일반대상
275만여 명	68만여 명(25%)	6만여 명	62만여 명	52만여 명(84%)	10만여 명

출처: 국방부 동원기획관실(2021년 기준)

2-1.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 ()

- 가. 훈련보류제도 폐지(예비군훈련 의무의 형평성 유지)
- 나. 보류자 훈련시간 면제 축소, 훈련시간 증가(현 8H⇒16H, 2배 확대)
- 다. 현행대로 시행
- 라. 기타 의견 ()

(2-1-1). 보류제도 폐지한다면 그 시기? (2-1문항 ‘가’ 선택 경우) ()

- 가. 2023년부터 적용(국방부 훈령개정으로 시행 가능, 학생 불만 제기 가능)
- 나. 2023년 대학 입학생부터 적용(재학생 보류 혜택 가능, 학생 불만 감소)
- 다. 2027년까지(현 정부 기간 내) 단계별 추진(제도개선 공감대 형성 등)
- 라. 기타 의견 ()

2-2. 보류제도 개선 경우, 학생·교사(수)의 훈련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 가. 일반예비군과 통합 편성하여 훈련
- 나. 방학기간 별도 편성 훈련
- 다. 대학과 학생 희망을 고려 방학기간 편성 및 훈련

2-3.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폐지 반대 이유? () * 다수 선택 가능

- 가. 학생예비군 학습권 보장(국가 인재 양성의 여건 보장 필요)
- 나. 국가중요기관 및 업체 종사자의 업무 여건 보장



3.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스템 통합”에 대한 설문입니다.

(설명) 예비군훈련 소집통지는 동원훈련은 병무청, 일반훈련은 국방부(군)에 각각 인터넷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운용하고 있음.

동일한 동원예비군임에도 동원지정되어 동원훈련 받는 예비군은 병무청에서 동원 미지정 또는 동원훈련 불참의 경우는 국방부(수입군부대)에서 소집통지를 받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예비군의 시각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음

3-1. 동원예비군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단일시스템 통합운영에 대한 의견? ()

가. 단일시스템으로 통합

나. 현행 방법으로 계속 시행(국방부와 병무청)

다. 기타 의견 ()

(3-1-1). 소집통지 단일시스템 통합기관에 대한 의견? (3-1문항 ‘가’ 선택 경우) ()

가. 병무청

나. 국방부

3-2. 동원훈련 대상 예비군이 전자·우편통지 미수령 경우 병무청 직원이 직접 예비군에게 접촉하여 통지해야 하는데, 대면소집통지에 대한 의견? ()

가. 지역·직장 예비군부대에서 대면통지(병무청 소요감소, 예비군부대 부담증가)

나. 병무청 대면통지(조직·인력·행정 소요 과다)

다. 기타 의견 ()

#4. “동원사단 동원지정방안”에 대한 설문입니다.

(설명) 동원사단은 권역화 동원지정제도를 적용하여 현역 복무부대의 건제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① 상비사단 현역 복무부대=동원사단 예비군복무 부대 동일 연계 제한
* 배정지역 내 자원 부족 또는 불균형
- ② 병무청 동원지정 전산시스템 지원 한계
* 현역 복무부대 코드 세분화 미흡, 전산지정 범위선정의 한계(지방병무청 단위)
- ③ 병무청-군 간의 협조체계 미구축(규정 미반영 포함)
* 동원지정 절차에 대한 상호 협업시스템 미반영

4-1. 동원사단 동원지정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 ① 동원사단 지정부대(상비사단 중대까지) 및 배정지역 선정(1권역 전역)
- ② 1권역 지방병무청 동원지정(초안)⇒동원사단 확인/수정 협의⇒병무청 확정
- ③ 동원지정자 소집통지/관리(지방병무청·동원사령부 공동 관리)

가. 동의 나. 부동의(이유:)

5. “예비군 편성카드 자료(data) 테이블 개선”에 대한 설문입니다.

(설명) 예비군 신규 편성을 위해 현역 복무 병역자료를 국방인사정보체계로 병무청에 전송하면 이를 기초로 예비군 편성카드(전산)를 작성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로 통보하는데, 이때 현역 복무 자료 중 예비군훈련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현역 복무 자료 추가반영 요소(예)

- ① 개인 및 주특기 훈련 수준, ② 특급전사, ③ 주요 직책 임명(분대장, 사수 등), ④ 자격증(태권도, 자격 등), ⑤ 포상실적(경연대회, 특급용사 등), ⑥ 병영생활 적응도, ⑦ 병원 입원 및 치료 실적 ⑧ 주요 훈련 참가실적(연합훈련 등), ⑨ 기타

5-1. 예비군 편성카드 자료테이블 추가사항에 대한 의견? ()

가. 동의(추가항목:)

나. 부동의(이유: 전산 과부하, 자료관리 불편, 업무량 과다, 개인정보유출)

다. 기타 의견 ()

5-2. 예비군 편성카드 현역부대 코드 확대(현재 중대⇒소대까지) 의견? ()

#6. 다음은 설문조사 대상자에 대한 분류를 위한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자료는 설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사항으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1. 귀하의 신분(해당사항에 0 표시)

- ① 병무청 공무원 ② 예비군 지휘관(지역, 직장) ③ 현역간부

2. 병무청 공무원의 경우(해당사항에 0 표시)

- 2-1 직책: ① 과장급 ② 계장급 ③ 주무관(담당관)
- 2-2 업무: ① 훈련업무 ② 소집업무 ③ 전산업무

3. 현역간부의 경우(해당사항에 0 표시)

- 3-1 지휘관: ① 중대장 이하 ② 대대장 ③ 연대장이상
- 3-2 동원부서: ① 연대이하(동원사단) ② 수임군부대 ③ 작전사 ④ 각군 본부
- 3-3 기타부서: ① 인사 ② 군수 ③ 작전 ④ 기타 ()

※ 설문에 성실하게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문결과를 활용하여 동원예비군훈련실태 조사·분석 및 형평성 제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예비군 업무의 정책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첨부 #2]

동원예비군훈련 조사·분석을 위한 설문서

(예비군용)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의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임무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설문서는 **동원예비군훈련 조사·분석**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학문적·이론적으로 접근 및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동원예비군: 병(전역 후 1~4년차), 간부(전역 후 1~6년차)**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자료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어 오로지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 7월

(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

예비군훈련에 관한 법령 및 주요 내용

○ 적용 법령 및 규정

- 법령: 「병역법」 제49~52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 「예비군법」 제6조(훈련)
- 규정: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훈련대상/시간)·제13조(동원예비군훈련)

○ 동원예비군 대상별 훈련 시간 및 방법(예비역 병 5~6년차, 기본훈련·작계훈련 제외)

구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보류자훈련
병	1~4년차	동원 지정자	2박 3일/년		1일(8H)/년
		동원 미지정자		4일(32H)/년	
간부	1~6년차	동원지정자	2박 3일/년		
		동원미지정자		2박 3일	
훈련 장소			동원훈련장 또는 소집부대 주둔지	수임군부대 훈련장	수임군부대 훈련장
주요 훈련			개인 및 작계훈련	개인 및 병과훈련	기본훈련
훈련소집통지			병무청	수임군부대	수임군부대
비고			입영훈련	출퇴근·입영훈련	출퇴근훈련

- **동원지정 대상:** 소집부대 계급·병과(특기)별 전시 소요에 맞도록 평시 동원예비군
 - 장교 및 준·부사관(전역 후 1~6년차), 병(전역 후 1~4년차)
 - 동원지정 기관: 지방병무청장
- **예비군 보류자 훈련(방침 일부):** 훈련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훈련 일부 면제)
 - 근거: 국방부, 예비군 조직편성 및 운영 훈령(별표#24), 방침 일부 보류(학생예비군 등)
 - 훈련시간: 연 8시간(1일, 기본훈련) 훈련, 간부·병(동원지정·미지정) 적용

○ 주요 문제제기 사항(참고)

①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방법 및 소집통지 기관 상이(이원화)

- * 훈련방법: 동원훈련(2박 3일 소집부대 입영훈련), 동미참훈련(4일, 수입군부대 출퇴근훈련)
- * 소집통지: 동원훈련(병역법, 병무청), 동미참훈련(예비군법, 수입군부대)
- ☞ 동일한 동원예비군인데 훈련방법과 소집통지가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② 예비군훈련 보류자(방침 일부) 훈련 일부 면제

- * 예비군 중 25% 이상이 훈련보류자 포함: 대학생예비군이 대부분 차지
- * 예비군훈련 형평성 문제, 동원훈련 가용 예비군 부족 현상 초래 등 개선 요구

1. 예비군훈련 “동미참훈련의 훈련 시간과 방법”에 대한 설문입니다.

(설명)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 대상자와 동일한 예비군임에도 동원 미지정, 동원훈련 불참(연기 등) 사유로 동원훈련과 시간 및 방법에 차이가 있음.

- ① 훈련장소: 예비군 주민등록지역 수임군부대(자원관리부대) 훈련장, 접근성이 용이
* 전국단위 예비군훈련장을 선택하여 훈련 가능
- ② 훈련방법: 출퇴근 훈련(4일), 일일 또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훈련 참가 가능
- ③ 훈련신청: 인터넷(예비군홈)으로 훈련일정 자율선택 가능(휴일훈련 신청도 가능)
- ④ 별칙규정: 1차·2차훈련 무단불참 시도 미고발(동원훈련은 고발됨)
- ⑤ 훈련내용: 병과부대 훈련으로 전방 동원훈련에 비해 훈련강도 차이

1-1. 동미참훈련 시행방법에 대한 의견? ()

- 가. 동원훈련과 유사한 방법으로 시행(2박 3일 입영, 표준 동원훈련장)
- 나. 4일(출퇴근) 훈련을 연속으로 시행(일자·시간 분할하여 훈련참석 불가)
- * 병과(특기)별 훈련편성으로 훈련일자 자율선택, 휴일훈련, 전국단위훈련 불가

1-2. 동미참훈련 2박 3일 입영훈련 찬성이유?(1-1문항‘가’선택 경우) () *다수

- 가. 동원예비군(1~4년차) 훈련의무의 형평성 유지
- 나. 동미참훈련의 실질적인 성과달성 미흡
- 다. 동미참훈련의 훈련방법, 편의 제도 등으로 상대적 불만
- 라. 기타 의견 ()

1-3. 동미참훈련 2박 3일 입영훈련 반대이유?(1-1문항‘나’선택 경우) () *다수

- 가. 입영훈련을 할 경우 개인사업 등 손실 증대
- 나. 예비군 편의제도 활용 곤란(훈련일자·장소 자율선택, 휴일훈련 등)
- 다. 입영훈련 한다고 훈련성과 향상 기대할 수 없음
- 라. 기타 의견 ()

1-4. 동미참훈련을 2박 3일 입영훈련의 경우 소집통지 기관에 대한 의견? ()

- 가. 병무청에서 동원훈련과 동일하게 소집통지
- 나. 현행대로 수임군부대(지역방위 사단)에서 소집통지
- 다. 육·해·공군본부에서 소집통지
- 라. 기타 의견 ()

2. 예비군훈련 “보류자 훈련 제도”에 대한 설문입니다.

(설명) **보류자 훈련(방침 일부)**은 동원훈련 대상자와 **동일한 예비군임에도** 국방부 훈령에 의거 훈련 시간을 일부 면제하여 **연간 8시간(기본훈련)만 훈련함**.

○ 훈련시간 비교

구분	1~4년차		5~6년차
	동원 지정자	동원 미지정자	
일반예비군	2박 3일	32시간	20시간(기본, 8H, 작계6×2회, 12H)
학생예비군	8시간(기본훈련)		

○ 훈련보류자 현황(연간 평균치 산정) ☞ 학생예비군훈련보류제도(1971년부터 시행)

총자원	계	법규보류	방침보류		
			소계	학생예비군	일반대상
275만여 명	68만여 명(25%)	6만여 명	62만여 명	52만여 명(84%)	10만여 명

출처: 국방부 동원기획관실(2021년 기준)

2-1.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 ()

- 가. 훈련보류제도 폐지(예비군훈련 의무의 형평성 유지)
- 나. 보류자 훈련시간 면제 축소, 훈련시간 증가(현 8H⇒16H, 2배 확대)
- 다. 현행대로 시행
- 라. 기타 의견 ()

2-2. 보류제도 개선 경우, 학생·교사(수)의 훈련시기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 가. 일반예비군과 통합 편성하여 훈련
- 나. 방학기간 별도 편성 훈련
- 다. 대학과 학생 희망을 고려, 방학기간 편성 및 훈련

2-3.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폐지 반대 이유? () * 다수선택 가능

- 가. 학생예비군 학습권 보장(국가 인재양성의 여건 보장 필요)
- 나. 국가중요기관 및 업체 종사자의 업무여건 보장



#3. 다음은 설문조사 대상자에 대한 분류를 위한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자료는 설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사항으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1. 귀하의 신분

- ① 예비군 병 ② 예비군 간부

2. 예비군을 선택하신 경우

- ① 1년차 ② 2년차 ③ 3년차 ④ 4년차 ⑤ 5년차 이상

3. 예비군부대 근무 간부의 경우 전역시 계급

- ① 부사관 ② 중·소위 ③ 대위 ④ 영관

※ 설문에 성실하게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문결과를 활용하여 동원예비군훈련실태 조사·분석 및 형평성 제고 방안을 도출
함으로써 예비군 업무의 정책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예비군 소집업무 효율적 수행방안 연구

발행일: 2022년 10월 20일

편집처: (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

발행처: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본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